

월간

# 재정포럼

2023. November  
Vol.329

11



---

## 권두칼럼

백세시대, 보건의료비 관리와  
재정건전성  
| 김진현

---

## 현안분석

일본 경제의 추이와 전망  
| 원종학

---

## 특집

2023년 노벨경제학상  
: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과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연구  
| 이경훈

---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친환경차 세액공제 양도  
(transfer) 지침 발표 외

---

Kipf

# 재정포럼

2023.11 Vol.329

월간 재정포럼 2023년 11월호 통권 제329호\_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2 홈페이지 www.kipf.re.kr

## CONTENTS

### 권두칼럼

02 백세시대, 보건의료비 관리와 재정건전성 | 김진현

### 현안분석

08 일본 경제의 추이와 전망 | 원종학

### 특집

28 2023년 노벨경제학상  
: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과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연구 | 이경훈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2 미국 - 친환경차 세액공제 양도(transfer) 지침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백세시대, 보건의료비 관리와 재정건전성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보건의료비 증가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우려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사회보장 급여비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가족이 간병에 부담하는 비용을 추가하면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국민 의료비가 GDP의 7%를 초과하였고, 그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며, GDP 성장률의 2배 이상이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을 때 보험료는 월급의 3%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7%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많이 인상되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소비자의 혜택 즉, 보장률이 늘지 않는 데도 보험료율이 계속 인상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도 증가해 왔다. 특히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인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 흔히 노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사망 전 6개월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는 그 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전 6개월까지 평생 지출한 의료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율은 17%인데, 노인의료비 비율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 보건의료비 인상의 구조적 원인

이러한 현상의 첫 번째 원인은 보건의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제적 성질, 즉 정보의 비대칭성과 면허제도에 의한 독점구조이다. 일반재화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한두 번 사용해보면 상품의 장단점과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가성비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이나 이웃으로부터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워낙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치료 방법이나 효과를 알기가 쉽지 않고, 치료를 경험해 보아도 치료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독점한 공급자가 수요를 유도하면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요량이 없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비율이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한때 43%까지 올라가 세계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연휴나 공휴일 전날에는 평일보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더 높다. 동일 질환에 대한 수술 비율은 B시가 G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다. 혹은 B시에 헛집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칼 쓰는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는 인구당 외과의사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유인 수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두 번째 원인은 지불제도이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불방식은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마치 슈퍼에서 물건을 사듯이 모든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 재료마다 가격표가 있고, 진단과 검사, 시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과잉진료가 일상화되고 진료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수단이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진료비 총액을 법령에 의해 미리 결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불한다. 의료기관이 아무리 진료를 많이 해도 공보험에서 지불받는 진료비 총액은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굳이 과잉진료를 하려 하지 않고, 병상 수와 의약품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 투입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한다. 정부는 재정지출 예측이 가능하고, 보험료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인은 비급여 진료의 관리 수단 부재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 확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보장성을 강화해도 그때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장률은 다시 떨어지고 환자는 그만큼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관리 수단이 수립되지 않는 한 급여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일본은 혼합 진료 금지라는 원칙하에 공보험 환자에게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여 진료하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불방식은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진단과 검사, 시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특별법에 의해  
오벽지의 보건진료원,  
학교 보건교사,  
응급구조사 등이  
부족한 의사인력 대신  
일정 부분을 담당하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백세시대의  
의료-요양-돌봄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허용 가능한 비급여 항목과 가격표를 공시하여 환자의 총진료비를 적정수준에서 억제하는 동시에 민간보험이 공시된 비급여 가격표에 근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원인은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부재이다. 건강보험 등의 급여비 지출과 보험료 결정 과정에 이익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자신이 처방하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 재료의 보험급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보험수가는 매년 인상되고, 의약품이나 치료 재료 역시 가성비가 무시되기 일췌이다. 평생 사용해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독일의 그 유명한 주방용 칼도 1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의 1회용 수술용 칼은 보험가격이 68만원이다.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복용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1알의 가격은 스웨덴에서 80원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격은 800원 이상이다.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공익대표와 재정전문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단체는 자문 역할에 국한된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를 들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결합은 과다한 병상 수를 공급하여, 외래진료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입원하여 의료비를 낭비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당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병상은 세워지기만 하면 채워지게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의료법」의 기본골격이 아직까지 유지되어,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보건의료 인력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오벽지의 보건진료원, 학교 보건교사, 응급구조사 등이 부족한 의사인력 대신 일정 부분을 담당하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백세시대의 의료-요양-돌봄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백세시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선, 지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격만 관리하고 있는데, 가격과 사용량

을 포함한 총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 방안의 수립이 보장성 확대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효율적 대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백세시대의 복지재정지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해결하고, 중증질환은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며, 병상 수를 억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 방안의 수립이  
보장성 확대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현안분석

## + 일본 경제의 추이와 전망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본 경제의 추이와 전망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weon@kipf.re.kr)

## 1. 서론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sup>1)</sup> 이후 다시 한번 높은 성장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성장과 부를 향유하였다. 지가와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대부분의 일본인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1억 2,000만 인구 중 1억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를 ‘거품경제’라고 부르듯, 상당 부분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투자 및 소비의 확대는 1992년부터 시작된 지가 하락과 더불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이후 오랜 기간 저생산, 저투자, 저소비, 저물가 등 모든 경제의 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1992년 버블붕괴 이후부터 시작된 저 활력의 시기를 시간에 따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일본 정부는 10년 이상에 걸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으로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과, 2013년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를 들 수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한 고이즈미 정권은 버블경제 이후 일본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생산성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착수하였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신조 총리는

1) 198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소위 G5 국가 재무부 장관들이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당시 급속히 진행된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합의한 회담이다.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지적하고, 디플레이션 타개를 정책목표로 하는 소위 3개의 화살-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정책수단으로 들고나왔다.

현재 일본 경제에 대해 기업 실적의 추이, 반도체나 전기차, AI와 같은 새로운 사업의 진출 정도, 대규모 금융완화와 GDP의 2배가 넘는 국채수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가 그 성과와 전망에 대해 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 년의 일본 경제의 흐름을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고,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였는지, 이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 년의  
일본 경제의 흐름을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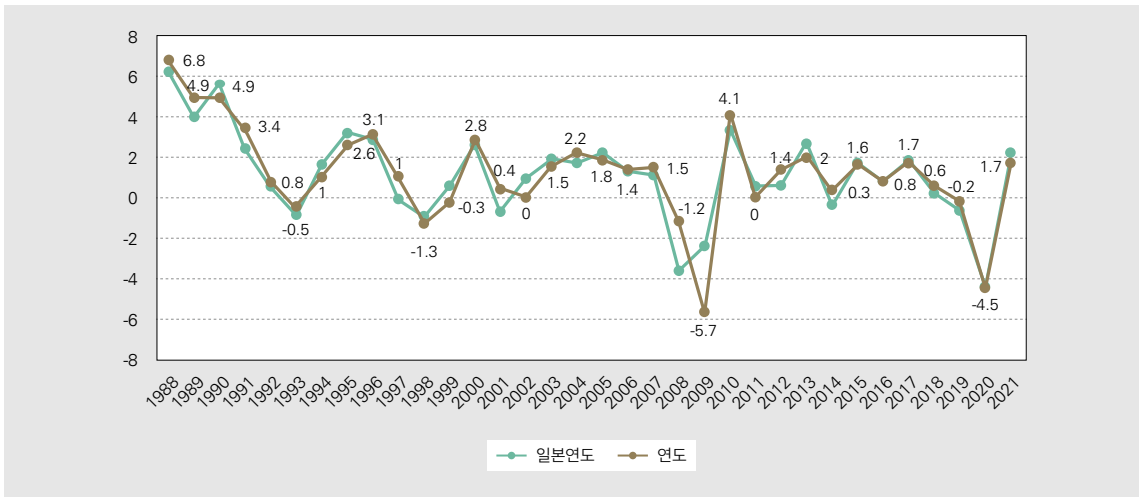
## II. 일본의 경제 추이 및 현황

### 1. 성장률

[그림 1]은 1988~2021년 기간 일본의 GDP 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시작된 일본의 버블경제는 1988년 절정에 이르렀다.

[그림 1] GDP 성장률 추이(1988~2021년)

(단위: %)



주: 일본연도는 해당 해의 4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까지를 나타내는 일본 연호에 따른 시간 표시임  
출처: 財務省, 『經濟財政白書』, 2022.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수상은  
20여 년에 걸친 경기침체가  
주로 디플레이션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88년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 규모였음에도 성장률이 6.8%였다는 사실은 당시 일본 경제가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성장률은 하락이 시작되었으나 1991년까지는 3.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1992년 0.8%로 하락하였다. 1992년은 일본의 버블경제가 끝나고 기나긴 불황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률 추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에서 0%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다, 고이즈미 정권이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 고이즈미 정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성장은 구조개혁의 결과에 더하여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엔저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5.7%라는 기록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다시 일본 경제는 0~1%대의 낮은 성장률로 답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집권당이었던 자민당의 수상이 1년에 한 번씩 바뀔 정도로 정권은 불안정하였으며, 결국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이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달성한 민주당이었으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수습하지 못하여, 다시 정권을 자민당에 넘겨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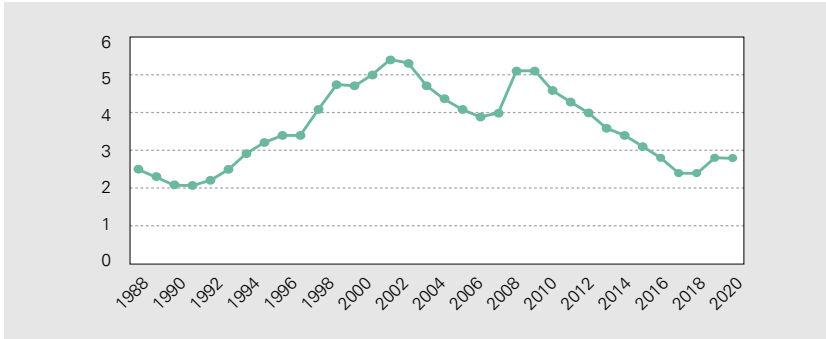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수상은 20여 년에 걸친 경기침체가 주로 디플레이션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아베노믹스 실시 직후라 할 수 있는 201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를 초과하였으나, 이후 1%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 2. 실업률

1960년대 고도성장 이후 1975년까지 1%대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1976년 실업률은 2.0%를 기록하면서 2%대에 접어들었으나 1994년까지는 자연실업률이라 불리는 3%보다 낮은 실업률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그러나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5년 3%를 초과한 실업률은 이후 계속 상승하여 1998년에는 4%, 2001년에는 5%, 2002년은 5.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2] 실업률 추이(1988~2021년)

(단위: %)



출처: 財務省, 『經濟財政白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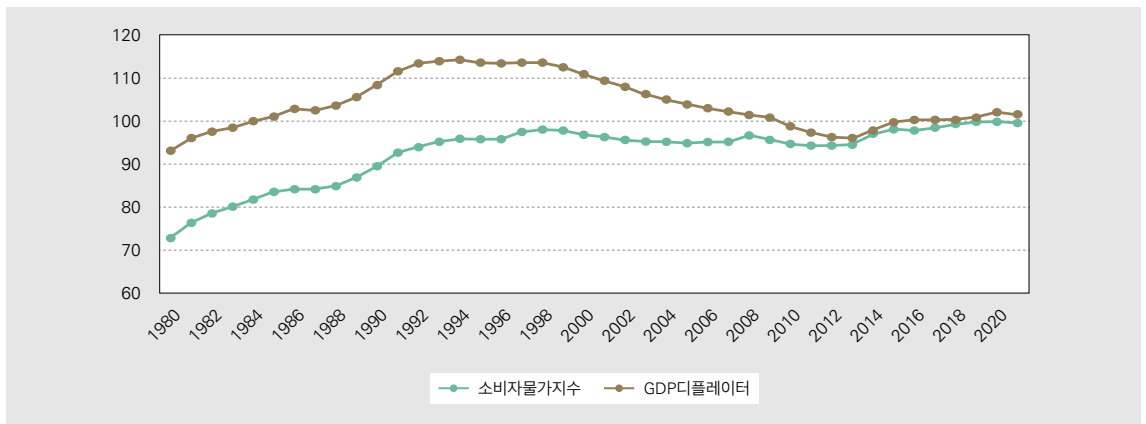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3%대, 2017년 이후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2002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4% 수준까지 하락하나,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5%대까지 상승한다.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3%대, 2017년 이후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 이 시기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증가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심이어서 실업률의 감소가 고용의 안정성으로 이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 3. 물가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침체 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디플레이션 경

[그림 3]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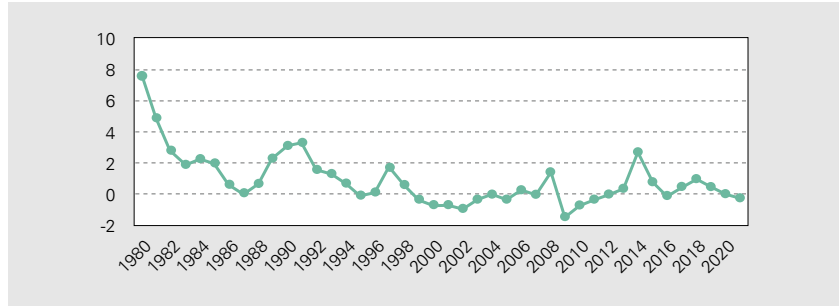
출처: 総務省 統計局, 『消費者物価指数(CPI)』, <https://www.stat.go.jp/data/cpi/>, 검색일자: 2023. 8. 25.

世界經濟のネタ帳, 『日本のGDPデフレーターの推移(1980~2023年)』, [https://ecodb.net/exec/trans\\_country.php?type=WEO&d=NGDP\\_D&c1=JP](https://ecodb.net/exec/trans_country.php?type=WEO&d=NGDP_D&c1=JP), 검색일자: 2023. 8. 25.

체감경기로 인한  
경기에 대한 낮은 기대는  
다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아베노믹스에서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피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4]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



출처: [그림 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를 지목하고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한 정책이다. 실제로 물가의 움직임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의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 [그림 3]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물가는 199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 내지는 정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년도 대비 물가의 움직임을 [그림 4]에 표시하였다.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8%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는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유가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이후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1987년에서 1991년까지 2~3%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1992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2% 이하로 낮아지면서 이후 2014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2022년까지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9~2003년 기간은 4년 연속으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고이즈미 정권 시기의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1%대 이하의 낮은 수준이어서, 경기가 호황이라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웠으며,<sup>2)</sup> 이러한 체감경기로 인한 경기에 대한 낮은 기대는 다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아베노믹스에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 4. 환율

일본의 환율제도는 1970년까지는 1달러 360엔으로 고정환율제였으나, 1971년 이후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변동환율제로 바뀌에 따라 1971년의 환율은

2) 호황이 체감되지 못한 요인으로 ① 긴 시간에 걸쳐 성장하였으나 낮은 수준의 성장이어서 디플레이션하에서 명목 GDP가 거의 증가하지 못하였으며, ② 성장의 결과가 기업 부문에 집중되고 가계 부문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③ 기업 부문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었으며 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으로의 파급이 늦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森重透, 2006).

347.83엔, 1972년은 303.08엔으로 1달러 300엔대를 유지하다 1973년 272.18엔으로 1달러 200엔대로 들어섰다. 이후 200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대략 1달러 220~250엔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플라자합의 이후 1985년 1달러 238.05엔이었던 엔화는 1986년 168.03엔으로 급격한 엔고 국면을 맞이한다.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일본 기업은 엔고에 의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막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으로 대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등 조립 산업에서 노동집약적 공정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술집약적 공정은 일본에서의 형태로 공정 간 분업(fragmentation)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엔고 조정이 끝나는 1990년에 일본의 경상수지는 1,0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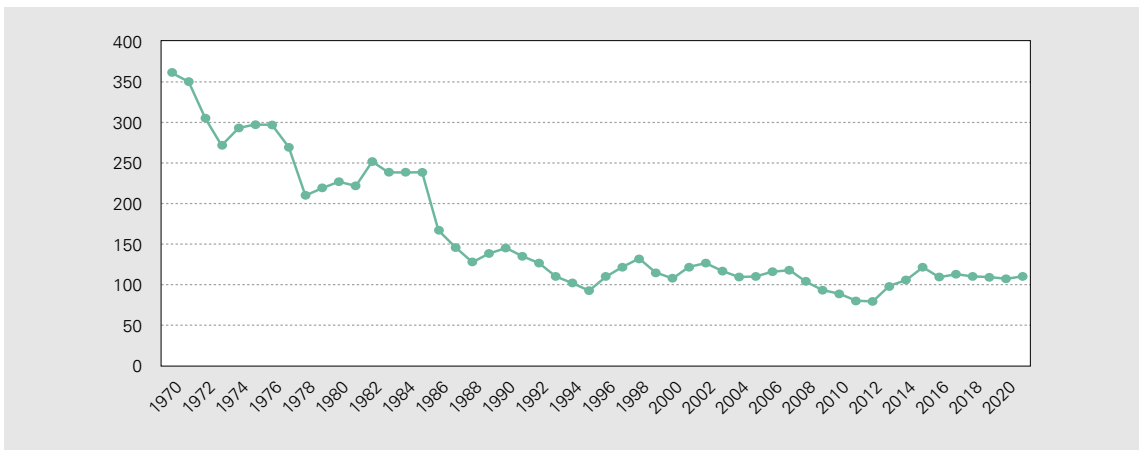
한편 일본 정부는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불황을 우려하여 이자율을 낮추고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주식 및 부동산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하였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2~3차례에 걸쳐 이자율 인상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금융시장 긴축 정책으로 1990년부터 주식, 부동산의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고 경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비용(cost) 증가에 대해 일본은 정부, 기업 모두 철저히 비용 절감으로 대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내수가 극단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일본 경제는 공급과잉 체질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과잉 체질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적자국채의 발행을 통한 토목 공사 등의 공

일본 정부는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불황을 우려하여 이자율을 낮추고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주식 및 부동산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림 5] 대미 달러 환율 추이(1달러당 엔화)

(단위: 엔)



출처: 財務省, 『經濟財政白書』, 2022.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GDP에 마이너스로 기여했다는 점은, 수출 감소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의미한다.

공투자 확대, 금리 인하 등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전통적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의 비교열위사업을 결과적으로 온존시키고 국가부채만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부실기업 및 사업의 정리,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했다고 여겨진다.

2008년 이후 일본 GDP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수출이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는 약간 높으나<sup>3)</sup> EU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수출의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GDP에 마이너스로 기여했다는 점은, 수출 감소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의미한다. 수출 감소에는 무역 상대국의 경기침체, 수출 품목 구성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생각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 엔고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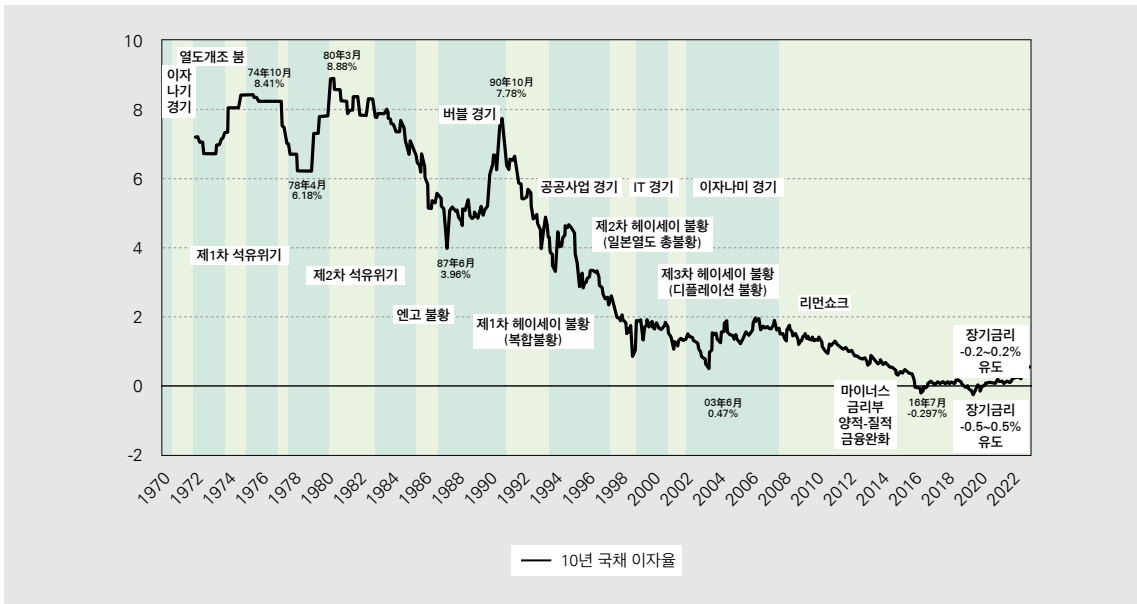
### 5. 이자율

3) 2018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12%, 일본이 18%이며, 영국 30%,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31%, 한국은 44%였다.

일본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리를 일본에서는 ‘공정보합(公定歩合)’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공정보합은 일본의 정책금리로서 역할

[그림 6] 장기금리 추이(1970~2022년)

(단위: %)



출처: 家づくりコンサルティング, 『長期金利推移グラフ』 [https://iecon.jp/loan/loan\\_kinni/](https://iecon.jp/loan/loan_kinni/), 검색일자: 2023. 8. 20.

을 해왔다. 과거 금리가 규제되던 시기에는 예금금리 등 각종 금리가 공정보합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었기 때문에, 공정보합은 금융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책금리였다. 그러나 금융 자유화가 진행된 결과 시중금리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공정보합은 더 이상 시중금리의 기준금리가 아니게 되어 정책금리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sup>4)</sup>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으로서 정하는 정책금리는 통상적으로 단기금리이나, 일본은 2016년 9월부터 장기금리도 정책금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일본의 금리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6]은 197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일본의 장기금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에 따른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2016년 9월에 주로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를 대상으로 조작하는 장기금리조작(Yield Curve Control, YCC)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가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20~40년물 국채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기금리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까지 전체적으로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며, 경기가 하락하면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플라자합의 이후인 1986~1988년은 엔고로 인한 불황으로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후 1992년까지의 버블경기 시에는 금리가 3.96%에서 7.78%까지 급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금리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2% 이하로 하락한 후 2020년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는 더욱 하락하여, 2016년 이후는 0%의 금리,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 자유화가 진행된 결과 시중금리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공정보합은 더 이상 시중금리의 기준금리가 아니게 되어 정책금리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

### III.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 아베노믹스와 금융완화

2001년 당시 하시모토 정권은 중앙성청(中央省庁)의 조직을 1부(총리부) 12성 10청을 1부(내각부) 10성 2청으로 간소화하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앙성청 재편의 목적으로 '중단적 행정에 의한 폐해를 없애고, 내각 기능의 강화, 사무 및 사업의 감량, 효율화'를 들었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이 중앙성청 재편으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오키나와(大蔵省)의 기능 약화와 내각부의 기능 강화라고

4) 2006년부터는 공정보합이란 용어를 '기준할인율 및 기준대부이율'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내각부의 싱크탱크로서  
경제이론과 정책을  
연결하는 기관인  
'경제사회종합연구소(ESRI)'는  
2001년 중앙성청 재편 시  
이전의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의  
기능 및 규모를  
확대하여 발족한 것이다.

할 수 있다. 재편 전 오키라쇼는 경제 기획, 예산, 금융, 조세를 담당하였으나, 금융행정이 내각부의 외국으로 신설된 금융청으로 이전되었으며,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내각부에 설치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등 기획의 기능도 내각부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게 되었다.

내각부의 싱크탱크로서 경제이론과 정책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경제사회종합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ESRI)'가 있다. ESRI는 2001년 중앙성청 재편 시 이전의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의 기능 및 규모를 확대하여 발족한 기관으로, 주요 임무는 경제활동이나 경제정책, 사회활동에 관한 이론연구나 실증연구, 정책연구, 경제재정자문회의 심의에 필요한 연구, 또는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연수 등이다.

ESRI의 1대 소장이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였다. 하마다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소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두 개의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하나는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측정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쇼와(昭和)공황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분석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의 일본 경제 장기침체는 노동생산성이나 총요소생산성이 정체된 것이 주요인이며, 시장경쟁 등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나 사업체가 진입·확대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나 사업체가 퇴출·축소됨으로써 기업 간, 사업체 간 자원배분이 효율화되는 기제(mechanism)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5)</sup> 이 프로젝트의 결론은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 기초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의 원인 및 해결책을, 1929년 미국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한 1930~1931년의 일본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찾고자 한 것이었다(原田泰, 2005; 原田泰 외, 2007). 이 프로젝트의 주요 결론은 1) 재정정책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금융정책은 물가와 생산을 상승시켰다. 3) 물가상승은 생산을 증대시켰다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결론은 디플레이션을 대담한 금융정책으로 타개하고자 한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sup>6)</sup>

### 1. 아베노믹스와 대담한 금융정책

2012년 12월 자민당은 3년 만에 집권당으로 복귀하며, 자민당 대표 아베신조(安倍晋三)는 2006~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수상)으로

5) 経済社総合研究所(2003).  
6)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주장을 일본에서는 리플레이션(Reflation)이라고 한다. 리플레이션(reflation) 정책은 현재의 물가가 정상적인 상태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물가를 인상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이다. 리플레이션 정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inflation target) 정책이다. 명목금리가 거의 0인 수준이 되면 금융정책이 무효화되므로, 실질금리가 높은 상태라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임으로써 실질임금을 낮추어 금융정책 유효화를 지향한다.

임명된다.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수상이 집권하면서 내세운 경제 관련 정책목표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이며, 그 목표달성을 위한 아베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은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으로 3개의 화살 정책이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최대과제로 삼은 이유는 1992년 버블경제가 붕괴한 이후 일본 경제가 20년에 걸친 불황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원인을 디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을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3개의 화살 가운데서도 ‘대담한 금융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담한 금융정책은 리플레이션 정책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아베 정권은 2% 물가상승률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통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실시하였으며,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아베 정권은 이를 대규모로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 2.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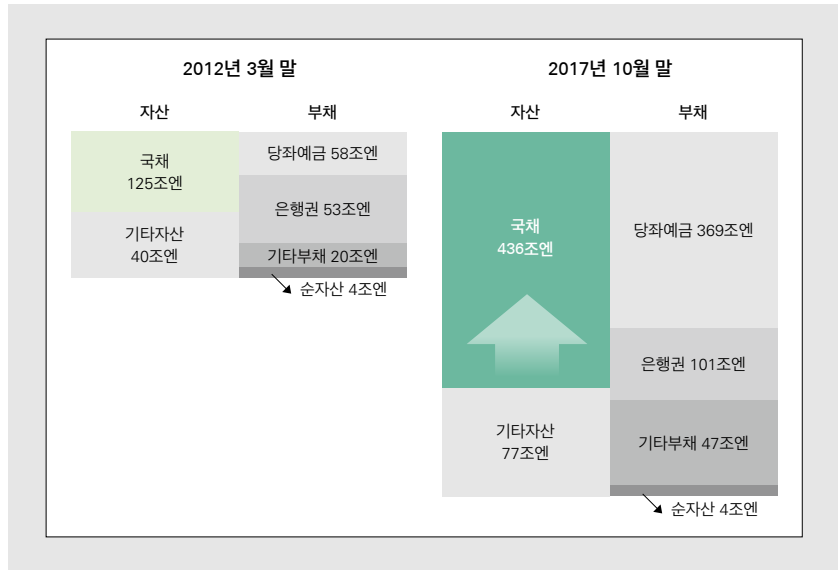
화폐화(monetization)란 정부가 재정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증대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이 국채를 기금 형태로 대금을 받고 재무당국(재무부)에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당국은 국채를 보상할 필요 없이 빌리기만 하면 된다. 정부지출의 재원을 이런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을 ‘부채의 화폐화(monetizing the debt)’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폐는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부채권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2차적으로만 매입할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민간 금융기관이 매입하고, 이를 다시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2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화폐화(monetization)을 통해 직접적으로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지출을 계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화량은 증대된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화폐화를 실시하면, 통화량의 증가를

화폐화(monetization)란 정부가 재정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증대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4월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도입’ 이후,  
일본은행이 채용한  
주요한 수단은  
본원통화의 확대와  
장기국채의 매입이다.  
이 두 수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와 같다.

[그림 7]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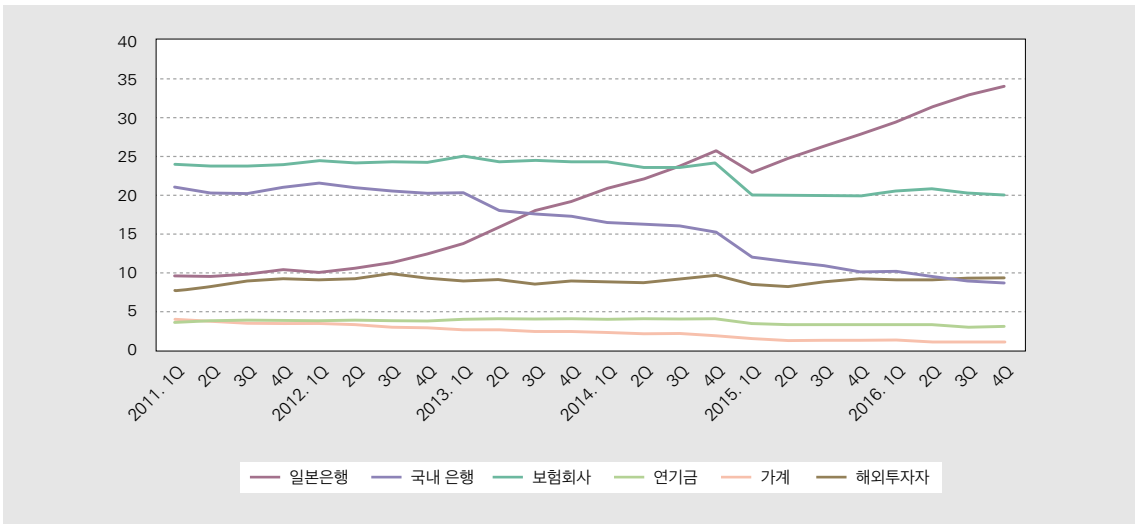


출처: 원종학 외(2020), p. 74 [그림 III-4]

통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2013년 4월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도입’ 이후, 일본은행이 채용한 주요한 수단은 본원통화의 확대와 장기국채의 매입이다. 이 두 수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관계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의도적인 화폐화

[그림 8] 장기국채 보유잔고와 일본은행 보유



출처: 김규판(2020), p. 5

(monetization)는 정부 재정지출의 재원을 중앙은행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의 재원확보와 더불어 통화량의 증대를 야기하여 물가를 상승시키자 하는 목표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2013년 이후 일본은행이 매입한 국채 규모를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살펴본 것이 [그림 7]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장기국채 잔고 순증분의 약 2배 상당액이 일본은행에 의해 흡수되어 일본은행 이외의 장기국채 보유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보유증가액 300조엔 가운데 약 절반은 국채신규발행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며, 나머지 절반은 일본은행 이외의 기관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흡수한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본은행의 국채·재투채<sup>7)</sup> 보유액이 연간 60~90조엔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국채·재투채 보유액의 증가는 이보다 적으므로, 일본은행 보유액의 증가는 상당 부분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흡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문별 장기국채 잔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행의 잔고는 같은 기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투자자의 잔고는 같은 기간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자를 제외한 여타 부문의 잔고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회사 등의 감소 폭이 크다.

### 3. 물가와 이자율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 즉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최대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2%의 물가상승률 목표는 아베노믹스의 대표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도 이 물가상승률 2%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sup>8)</sup>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실시한 것이 마이너스 금리제도이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일본은행이 2016년 1월에 도입을 결정하고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처음 시도된 금융정책이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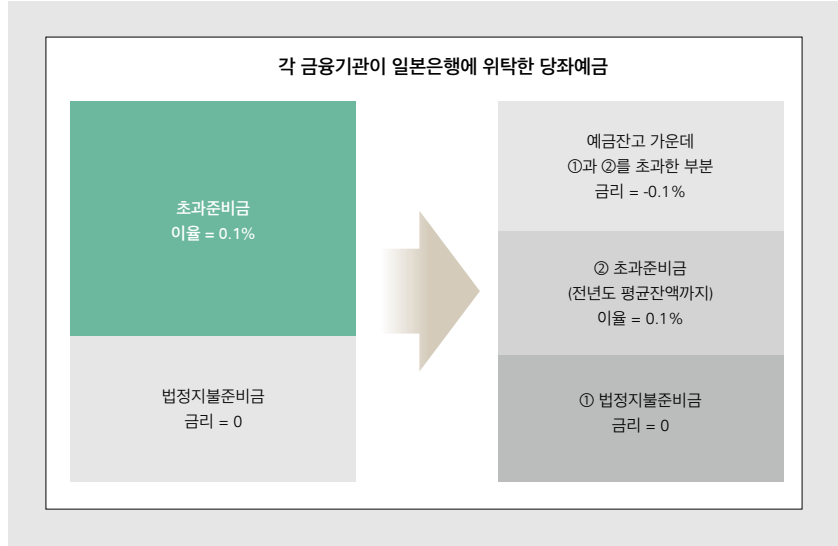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은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본은행, 정부와의 결재수단,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일본은행이 2016년 1월에 도입을 결정하고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처음 시도된 금융정책이다.

7) 재정융자자금의 용자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채)이다.  
8)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정한 이유는 인플레이션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완충지대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세계적으로 공유되어,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하나같이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일본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예치를 받은 금액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림 9] 마이너스 금리의 구조



출처: 원중학 외(2020), p. 77 [그림 III-6]

개인에게 지불하는 현금통화의 지불준비, 준비예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준비예금의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은행 당좌예금에는 법률상 규칙이 있는데, 일정 비율로 일정 기간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적립해야 하며, 법정지불준비금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나, 초과준비금에는 0.1%의 이자가 부과된다. 이 금리가 사실상 시장에서 단기금리의 하한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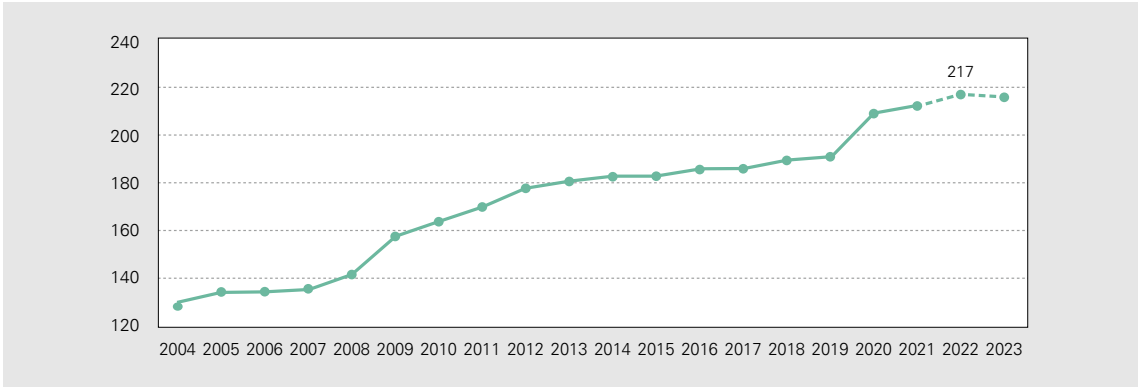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일본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예치를 받은 금액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준비금 형태로 유지하는 자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본은행에 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손해가 되므로 민간으로의 대출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증대시켜 물가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 IV. 일본 재정의 추이와 지속가능성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재무성(2023)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일반정

[그림 10]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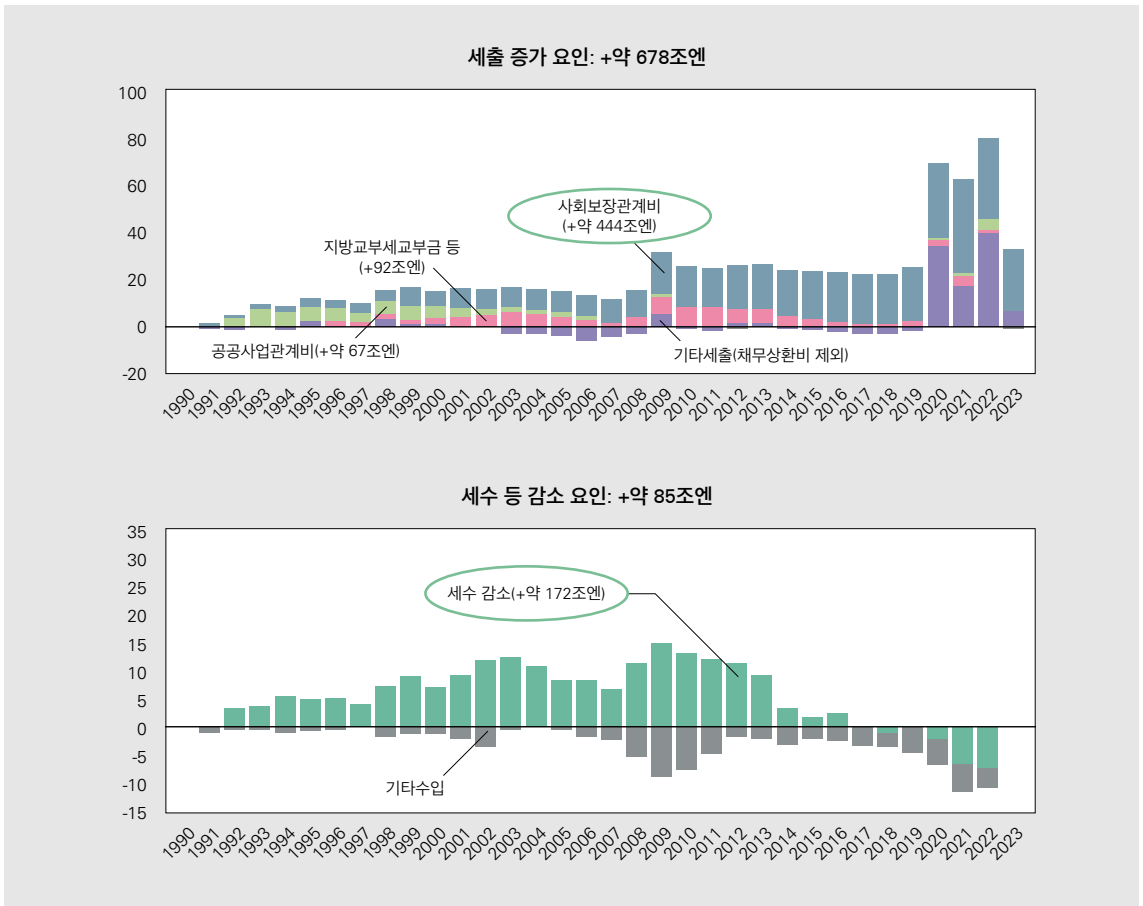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財務省(2023)

[그림 11] 국채 잔고 증가 요인

(단위: %)



출처: 財務省(2023), p. 7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버블 붕괴에 따른 불황에 대응하여 토목과 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사업을 실시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했으나 GDP의 약 3배가 되는 자산가치가 사라진 버블 붕괴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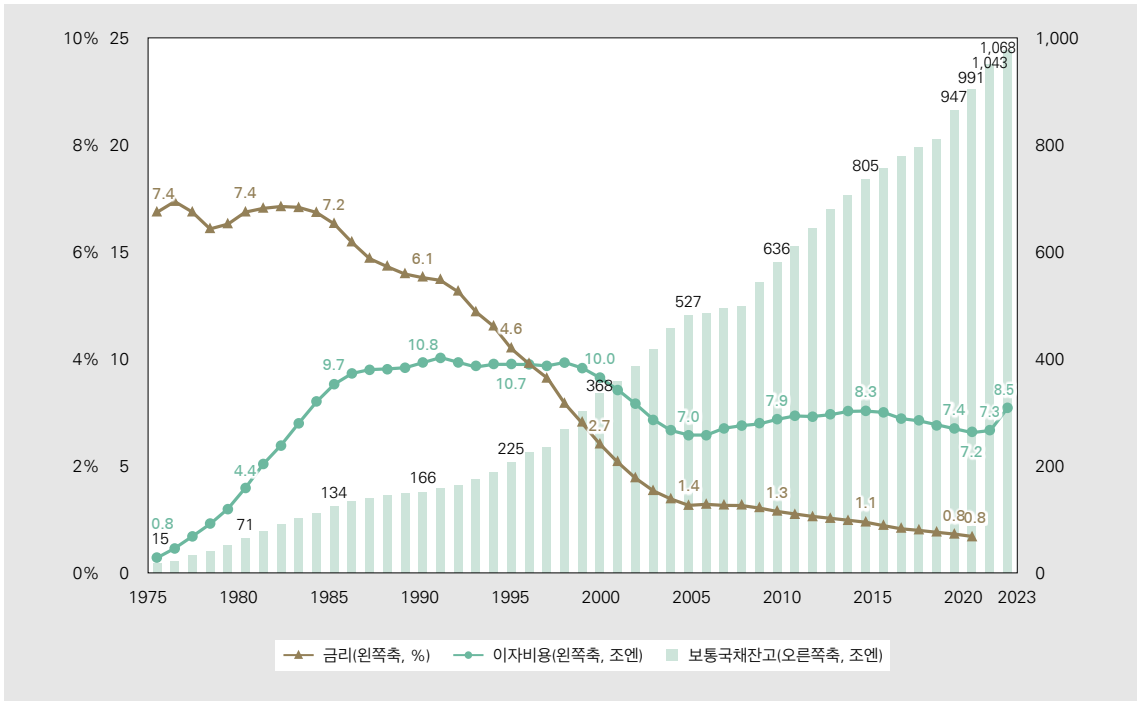
부의 GDP 대비 국공채비율은 약 217%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그림 1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버블이 붕괴한 199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보통국채잔액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1990년 약 166조엔에서 2000년 368조엔으로 크게 높아졌고 2010년 636조엔 그리고 2022년 1,043조엔으로 늘어났다.<sup>9)</sup>

재정지출 면에서 보면 1990년대에는 불황에 대응하는 공공사업 관련 비용증가가 재정적자와 국채 잔고를 확대한 주요 요인이었다.<sup>10)</sup>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버블 붕괴에 따른 불황에 대응하여 토목과 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사업을 실시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GDP의 약 3배가 되는 자산가치가 사라진 버블 붕괴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지 못했고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공공사업의 지출이 축소되었고, 대신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국채 잔고의 주된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더욱 강해지고 있다([그림 11]).

이미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에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은 앞으로도 더욱

9) 財務省(2023), p. 5  
10) 원종학 외(2016), pp. 27-30

[그림 12] 금리와 이자지불액, 국채잔액



출처: 財務省(2023), p. 22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재정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이자율을 들 수 있다. [그림 12]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이자율은 보통국채 이자율의 가중평균값이며, 이자비용은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추경 후 예산, 2023년은 예산액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통국채잔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이자율이 하락하여 이자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즉 국채 자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빠른 속도가 낮은 이자율로 인해 완화된 형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보통국채잔고는 1,000조엔을 초과하고 있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채수준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이후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는  
1985년의 플라자합의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 V. 요약 및 전망

1980년 이후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는 1985년의 플라자합의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플라자합의 이후의 급격한 엔고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버블경제가 발생하고,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높은 이자율 정책으로 인해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에 걸친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들게 되었다.

1992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일본의 불황에 대해 그 원인이 생산성 하락에 있다고 판단한 고이즈미 정권은 “개혁없이 성장없다(改革なくして成長なし)”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는 도중에 엔저가 진행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4~5년 지속되었다. 완만한 성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아픔을 동반한 구조개혁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고, 일본 경제는 다시 저물가·저성장 국면에 빠지게 된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물가 상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담한 금융정책을 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였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일본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회복되었고 물가도 상승하는 등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엔


올해 10월 일본은행은  
202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8%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4년은 2.8%,  
2025년은 1.7%로  
전망하고 있다.

저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활황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회복과 고용 증가가 임금상승과 소비와 총수요 진작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14년 1차 소비세 인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2018년 이후에는 미중 무역분쟁을 배경으로 한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둔화, 그리고 2019년 2차 소비세 인상으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많다.

1985년의 플라자합의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본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급격한 엔고였으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정책의 중심적인 수단은 이자율이었다. 1990년대 이후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요소도 급증하여 현재 세계 최고의 국가채무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낮은 이자율로 인해 재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환율과 이자율이 일본 경제의 방향을 좌지우지한 변수였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플라자합의는 무역수지 흑자의 조정을 위해, 세계금융위기 이후는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엔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졌다. 2023년 현재, 전자의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후자는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상태의 세계적인 불황 혹은 전쟁과 같은 비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재현될 수는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즉, 환율의 변동에 의해 단기간에 일본 경제가 현재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 재정지출을 증대시켰으며, 2013년 이후는 대담한 금융정책을 통해 물가를 인상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물가는 여전히 1~2%의 상승률을 기록할 뿐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 올해 10월 일본은행은 202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8%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4년은 2.8%, 2025년은 1.7%로 전망하고 있다.<sup>11)</sup>

일본의 물가가 정책당국이 예상한 정도로 상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분석이 필요한 주제이나, 만약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발생하면 낮은 이자율에 의해 지탱하고 있는 일본 경제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여야 하나,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이자비용이 재정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11)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2022년 1월 0%대였던 물가는 3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3년 1월에는 상승률이 4%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3년 1월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3년 9월의 물가상승률은 2.8%로 2002년 8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본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올해 7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3년은 2.5%에서 2.8%로 0.3%p, 2024년도는 1.9%에서 2.8%로 0.9%p, 2025년도는 1.6%에서 1.7%로 0.1%p 높아졌다. 7월에 비해 10월의 물가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은 2024년에도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에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규판,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 세미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원종학·권혁욱·김영각, 『일본재정정책의 추이와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원종학·이강국·Toshiyuki Uemura, 『일본의 재정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2010년 이후의 동향과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經濟社総合研究所, 「産業別生産性と経済成長: 1970-98年」, 『経済分析』, 第170号, 内閣府, 2003.
- 原田泰, 「昭和恐慌期のマネーと銀行貸出は, どちらが重要だったか」, 『経済分析』, 第177号, 内閣府, 2005.
- 原田泰·佐藤綾野·中澤正彦, 「昭和恐慌期の財政政策と金融政策はどちらが重要だったか?」, 経済産業研究所(RIETI)BBLセミナー, 2007.
- 財務省, 『経済財政白書』, 2022.
- \_\_\_\_\_,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3.
- 家づくりコンサルティング, 「長期金利推移グラフ」, [https://iecon.jp/loan/loan\\_kinri/](https://iecon.jp/loan/loan_kinri/), 검색일자: 2023. 8. 20.
- 世界経済のネタ帳, 「日本のGDPデフレーター推移(1980~2023年)」, [https://ecodb.net/exec/trans\\_country.php?type=WEO&d=NGDP\\_D&c1=JP](https://ecodb.net/exec/trans_country.php?type=WEO&d=NGDP_D&c1=JP), 검색일자: 2023. 8. 25.
- 森重透, 「小泉構造改革が残したもの」,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06,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36896?site=nli>, 검색일자: 2023. 10. 16.
- 総務省 統計局, 「消費者物価指数(CPI)」, <https://www.stat.go.jp/data/cpi/>, 검색일자: 2023. 8. 25.



# 특집

## + 2023년 노벨경제학상

: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과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연구

이경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3년 노벨경제학상 :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과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연구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khlee0423@kipf.re.kr)

## 1. 서론

2023년 10월 9일 스웨덴 왕립과학원(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은 여성 노동시장 결과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성별 임금격차의 근본 원인을 탐구한 공로(for having advanced our understanding of women's labor market outcomes)로 미국의 경제 역사학자이자 노동경제학자인,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했다. 그녀는 지난 250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활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같은 직업에서 임금 및 노동시장 참여 시 발생하는 남녀 차이에 대한 원인과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난 세기 동안 여성의 노동은 가정에서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역사를 통한 다양한 시각의 분석은 변화의 주요 원인을 확인하고 여성의 경제적 경로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3배 이상 증가하여 그 격차를 큰 폭으로 해소하였던 바, 이는 이러한 국가에서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변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등한 노동참여가 성평등을 의미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다양한 차원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에서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13% 적게 받고, 승진 기회가 적은 직업에서 일하며, 기업의 임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미미하다(OECD, 2023). 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성 차이가 그렇게 만연한 것일까?

시간과 국가별로 이러한 차이의 크기가 왜 다른 것일까? 성평등의 정도는 주로 경제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여성이 더 교육을 받았고 동일한 임금 규제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국가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국가 번영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하게 대우받는다면, 이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문제를 야기한다. 유엔의 연구(UN Women, 2023)에 따르면, 주 노동연령대의 여성 중 61.4%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90.6%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는 OECD 국가에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와 경영진의 남녀격차를 줄이면 현재의 약 7%에 해당하는 글로벌 경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격차해소는 인도를 포함한 많은 신흥 국가에서도 그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골딘의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를 연구하기 위한 일관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역사학자들은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성 차이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었으며(예를 들어 Harris, 1978; Tentler, 1979), 경제 역사학자들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의미 있는 추정치가 역사 기록에서 검색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였다. 골딘은 교육, 출산율 및 생산성이 여성의 진취성과 정체성의 진화, 그리고 제도적 변화와

연결된 규칙을 개척함으로써 여성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 여성이 중요한 제약 조건(주로 노동시장에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하에서 내린 선택은 전체 경제에 내재되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골딘은 기존에 정돈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새롭게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 데이터를 연결하여 20세기 이전의 여성 노동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골딘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소득 데이터 원천자료를 통합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 개발과 함께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증거도 제공했다(Goldin, 1990).<sup>1)</sup> 골딘은 여성의 직업이 1890년 이전 대부분의 인구 조사에서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된 과소집계 문제가 과거에 더 심각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골딘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학 교육 가치와 고등교육에서 혼성교육의 역할과 영향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남녀격차의 역사와 교육 발전과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이와 동시에 그녀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 문화 및 정치적 요인에 의해 여성 노동참여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에 중요한 초석을 다졌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그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냈으며, 미래에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그리고 사회에

1) 골딘의 연구가 더욱 주목받고 경제학에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당시의 사회변화와 경제학의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적 자본축적, 노동참여 및 임금결정에 대한 고찰과 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들(Becker, 1962; Ben-Porath, 1967; Mincer, 1974)이 노동경제학에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의 교육 및 노동참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경제학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서 여성이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대비해야 할 기본적인 요인과 극복해야 할 장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주춧돌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경제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충격으로 인해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으며, 골딘도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진 노벨경제학상 수상 소감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가 드문데 한국 노동시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본고는 그녀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한국 정부가 마주칠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의 현상과 문제들을 논의하며,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 문화 및 교육이 여성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발견

골딘은 경제가 전통적인 농경 경제에서 현대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냈다. 현대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산업혁명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을 누렸으며, 20세기부터 경제성장과 여성의 노동참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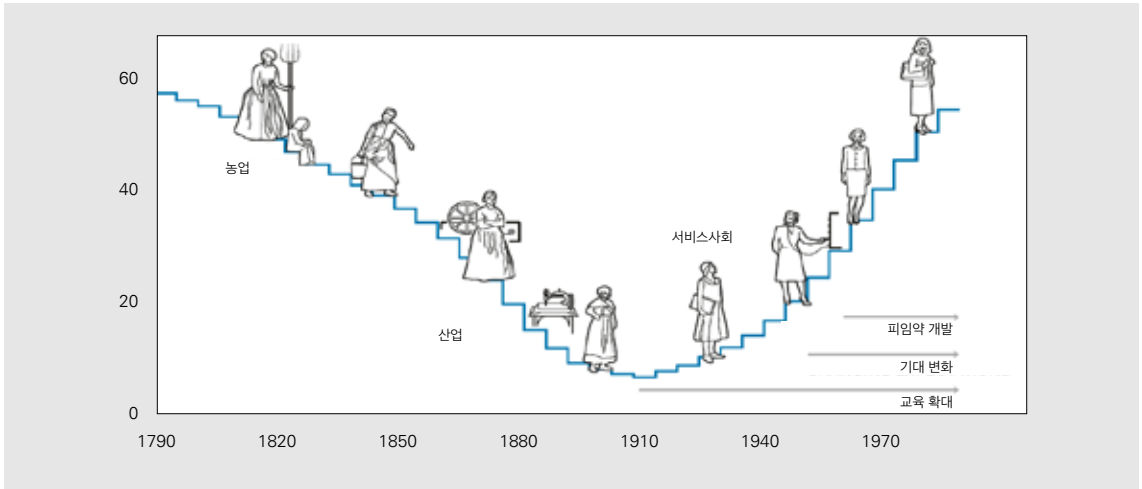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참여가 이전에도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골딘의 연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잘못된 추론의 원인 중 일부는 여성 노동의 역사적 자료가 이전 연구나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여성 노동참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였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비(非)단조성) 골딘의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통찰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제 발전에 따라 단조롭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혼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일정 발전수준을 지나면 다시 증가한다. 이러한 U자형 경제 발전-여성 노동참여 형태는 경제 발전과정 전반과 현재 선진 경제국가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다([그림 1] 참조).<sup>2)</sup>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1990년 골딘이 출판한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An Economic History of American Women*에서 19세기와 20세기 미국 여성 노동에 대한 현재까지의 가장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골딘은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는 대신, 여성 노동력의 경제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가능한 수량적 자료의 철저한 분석방법들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이 접근 방식은 실질적인 여성 노동력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주며, 골딘은 여성 노동력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를 수정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한다. 비록 이 책의 스타일이 종종 지루하고 수량적 방법론에 대한 최소한의 지

2) 경제 발전과 여성 노동 사이의 관계는 U자형이지만, 골딘이 초기 조사(특히 미국 인구조사)에서 여성의 노동이 주로 비공식적이고 무급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과소 집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

[그림 1]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천사

(단위: %)



출처: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2023a), p. 2

식 없이는 일정 부분 접근하기 어렵지만, 골딘의 연구 결과는 이 분야의 학문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데이터 측면)** 골딘은 이전에 조사되지 않은 다양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사용하여 '시계열'을 18세기 후반까지 확장하고 1890년과 1900년의 기존 통계를 보정했다. 그녀는 19세기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감소가 실제로 20세기에 더 크게 상승하기 전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핵심 종합 측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여성과 싱글 여성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결혼 시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 대부분이 일을 그만뒀다. 골딘은 이 패턴이 20세기 미국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20세기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상승은 사실 노년(즉, 육아 이후)에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율의 상승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였다.

Goldin(1995)은 다양한 국가의 데이터와 미국의 역사적 정보를 활용하여 U자형 여성 노동력 함수의 가설을 탐구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초기 감소는 가구, 가족 농장 및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생산이 넓은 시장으로의 이동과 강한 소득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소득 효과가 약화되고 대체 효과가 강화되면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국가의 경제 발전, 여성 노동력 참여, 그리고 교육이 여성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그녀의 발견은 경제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여성 노동력 참여의 복잡한 역학과 선진 경제국가에서의 역사적 발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 1. 산업화 이전의 여성 노동시장

골딘은 수정된 소득 추정치를 보고 노동시장 참

여의 정의 변화의 심각성을 논의함으로써 여성 노동의 역사적 전환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구축했다 (Goldin, 1986). 그녀의 주요 기여 중 하나는 1940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의 과소 집계와 누락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시기에 결혼한 여성을 언급할 때 단순히 ‘부인’이라고 나열하는 것이 흔했으며, 이는 현대 맥락에서 노동시장 참여의 부재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노동시장 활동으로 간주될 많은 결혼 여성이 사실상 남편과 함께 농장에서 일했으며, 숙박업주의 아내 및 아마도 다른 소상공업자의 아내 중 대다수가 남편의 사업에서 일했다.

또한 비즈니스와 도시 디렉토리를 인구조사 원고와 결합하여 골딘은 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 또는 미망인이 주로 가구의 가장이었던 약 1791년에서 1860년까지의 약 1만 2,000개 가구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러한 선구적인 작업으로 산업화 과정 중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처음으로 구축되었다.<sup>3)</sup> 이 데이터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디렉토리에 나열된 여성 중 44%가 직업을 나열했다는 점이었다. 이 직업은 주로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었으며, 예를 들어 손재봉사, 소매상, 여관 또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및 세탁부와 같은 직업들이었다.

그리고 골딘이 제시한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과 미망인들이 ‘숨

은 시장 노동’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부인들은 종종 가족 사업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골딘은 이러한 유형의 노동 규모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1796년 필라델피아 디렉토리에 서 여성 가구를 이전 디렉토리와 일치시켜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의 직업 방향을 추적했다. 골딘은 1790년대의 미망인들이 사망한 남편의 사업과 장인직을 물려받을 확률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sup>4)</sup> 이는 19세기 초 미망인들이 남편의 직업에 대해 상당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 가장 중 남성 주도의 직업에서 일하는 비율이 감소함으로써, 결혼한 여성 중 ‘숨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19세기 동안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 2.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력의 이동

18세기 말부터 미국은 북부사회를 중심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데이터를 통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여성 간 ‘계층(class)’에 따라 현저한 경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창신, 2020).<sup>5)</sup> 중산층 여성들의 활동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에 비해, 북부의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데이터는 인구조사에서 결혼한 여성들에 대해 누락되었던 부분이다.

4) 소매상과 게스트하우스 주인에서 해당 비율이 가장 높으나, 다수의 미망인이 남편으로부터 조금 더 비전통적인 직종, 예를 들어 신발 제조업자, 철물점 주인 및 주철공과 같은 직종을 물려받았다.

5) 실제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농업에 주로 참여하며, 대부분이 가족 농장에서 무급 노동자로 일하였다.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생산의 중심지가 가정과 가족 농장에서 공장과 도시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지위 향상, 공장의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근무 환경, 여성의 제조업 진출을 제한하는 사회적 관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노동참여가 감소하고 여성은 무급 가사노동에 특화된다.

노동자 계층 여성들은 가정 이외의 일터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자 계층 진출은 농촌지역에서 도심으로 이동한 소녀들이 공장지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제공했다.

하지만 골딘의 여성 노동 연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70년까지만 해도 성별 연구는 경제학에서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고, 대부분 기혼 가구 내 여성 노동공급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sup>6)</sup> 골딘은 여성의 노동참여와 임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적하였고,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 계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는 농업 및 가정 기반 경제에서 보다 산업화되고 공장 중심의 생산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Goldin and Sokoloff(1982)는 초기 산업화가 미국의 여성과 아동의 삶과 노동력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주로 제조업 센서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여성과 아동의 역할, 근무 조건, 노동력 참여가 가져온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증거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골딘은 미국에서 산업화 초기 여성과 어린이가 전체 제조업 노동력의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1832년에는 40% 이상), 1840년대 초기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시설이 퍼지면서 여성과 소년의 임금은 성인 남성

의 임금 대비 상승하였으며, 1850년까지 상대적 임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 90%까지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북동부의 산업화된 지역에서 젊은 미혼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1832년 기준으로 19세기 말의 평균에 비해 높았는데, 여성과 어린이의 고용은 대규모 시설의 생산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미혼 여성과 어린이는 이전에 활용되지 않았던 잠재적 노동력의 큰 부분이었으며, 제조업에 의한 이들의 활용은 북동부의 산업화에 중요한 요인이란 점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들의 노동력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Goldin(1990)은 이러한 현상이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여성 고용의 큰 증가로 여성 노동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보호 법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여성 인구의 후속 세대가 직면한 제도적 장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3. 산업화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노동력의 변화와 요인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초기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가정, 가족 농장 및 소규모 비즈니스와 같은 전통적인 환경에서 공장 및 산업 생산물로의 이동이 주요 요인 중 하나

6) 이창신(2020)에 의하면 미국의 산업화 시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제를 주도한 남성들인 사업가나 대리인(agent)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그들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 및 관리되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 서술 측면에서도 남성사업가의 사회 및 경제적 경험이 산업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역사학자들은 산업 공장주들의 산업화에 대한 기여를 칭찬하고, 그들이 창출한 이익을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물론 여성 노동자들이 명백히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경제적 및 정치적 의식의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이 비교적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다. 또한 소득 효과는 이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의 소득 상승으로 인해 유급 고용보다 가족 책임을 우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더욱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 경제의 확장은 비육체 노동에 대한 비교 우위로 인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더욱이 경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소득 효과는 약해지고 대체 효과가 더 중요해진다. 대체 효과는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집에 머무르는 것보다 노동력 시장에 더 큰 유인이 되는 경우, 결혼한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개발된 경제에서는 사회 및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이 사회적 인명 없이 다양한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Goldin(1990; 1995)은 여성 노동력의 장기적 트렌드가 결혼한 여성의 고용 변화에 주로 기인하며, (결혼한) 여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교차하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20세기에는 1) 화이트칼라(사무직) 계급 직업 확장, 2) 사무직과 중등교육 확대와 같은 구조적 변화, 3) 교육 접근성의 변화로 인해 여성 노동력이 증가하였다.

특히 골딘은 여성의 교육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U자형 여성 노동력 함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교육 접근이 제한적일 때는 가정 밖에서 유급 노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종종 수동 노동인 경우가 많아 이는 강한 사회적 편견에 싸이기 쉽다. 이로 인해 여성의 임금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참여에 대한 의욕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sup>7)</sup>

그러나 여성이 더 높은 교육을 받게 되면 특히 중등교육 수준에서는 사회적 인명 수준이 낮은 화이트칼라(사무직) 직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여성의 시간 가치가 물가에 비해 더욱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이 유급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며, 이는 U자형 곡선 상승 부분을 따라 일어나는 변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초기에는 강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결합되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대체 효과가 증가하고 소득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U자형 곡선의 하강 지점에서는 소득 효과가 우세하나 상승 지점에서는 대체 효과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성에게 개선된 노동 기회의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여성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명백한 제도적 장벽(즉, 결혼 금지법) 등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한다.

요약하면, 골딘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대부분 미개척된 역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잘 알려진 20세기 노동공급 증가가 실제로 19세기 동안 감소된 사실을 입증했다. 1990년 골딘의 연구는 미래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 범위를 문서화하려는 경제 역사 연구를 독려하였으며,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성별 통합 분석을 촉진하는 점에서 경제학 안에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이끌었다.

7) 이는 추후 그녀의 연구주제가 되는 남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 Ⅲ.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한 도전과 남녀격차

세계적으로 모든 여성 중 약 절반이 유급 노동에 종사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80%에 달하지만, 여성이 일할 때 보통 더 적은 급여를 받는다. 이러한 사회·경제학적 현상을 분석하고자 골딘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과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녀는 20세기 후반까지 존재하는 고용과 임금에서의 남녀격차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해왔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여성과 남성 간의 고용률과 소득의 차이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중요하며, 단기와 장기 모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회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없거나 불평등한 조건에서 참여한다면 여성의 노동과 전문지식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가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가 다르다면 여성은 노동하고 경력을 쌓는 것에 동기부여를 잃을 수 있다.

골딘은 기존의 여성 노동에 대한 인식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사적 및 현대적 역할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연구결과들을 이끌어냈다. 그녀의 새로운 여성 노동에 대

한 발견과 통찰력이 담긴 책 Goldin(1990)은 18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미국 여성 고용의 상승 이야기와 경제 성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왜 성별 간 격차가 임금과 고용에서 존재하고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제한된 일자리 기회부터 임금격차까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한 도전과 차별을 탐구한다. 골딘은 1980년대에 임금격차가 좁아진 점을 자주 언급하며 이를 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이 책을 통해 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발견들을 제시했다.

미국 센서스는 임금격차가 좁아진 두 번의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19세기 초기로, 특히 당시 미국의 제조업 섹터에서 기인하는데, 기계화와 분업화의 증가로 남성에 대한 기술과 힘에 대한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따라서 남녀 임금격차가 좁아졌다.<sup>8)</sup> 1890년에서 1930년 사이는 임금격차의 두 번째 축소시기로,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경제섹터에 적용된다. 비록 명목 임금격차가 이 기간에 좁아졌지만, 골딘은 임금 차별(교육, 경험 등의 성 차이를 고려한 후에도 남아 있는 임금격차의 부분으로 정의)이 실제로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며, 특히 확대되는 화이트칼라(사무직) 섹터에서 더욱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1930년 이후 임금격차는 50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평균 여성임금이 하향됐기 때문이었다.<sup>9)</sup> 현재에 이르러서 남녀 임금격차의 분석은 미래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골딘

8) Wright(1991)는 이러한 변화가 1980년대 경험과 유사하다고 봤다. 비록 골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산업화가 아닌 비산업화와 관련된 것으로, 다시 한번 임금격차 축소에 비슷한 요인이 기여했다고 제안했다.

9)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 골딘은 1900년경에 태어난 여성 집단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여성 집단은 직업 경험이 부족하며, 나중의 집단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은 책 마무리에 임금격차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인 불평등의 감소와 더 최근인 20세기 말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감소가 다음의 오래된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경제적 발전이 성별 간의 평등으로 이어질까?”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와 남성이 무급 가사노동과 아이 돌보기를 함께하기 꺼리는 지속적인 장벽들이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평등에 대한 그녀의 희망적인 결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그녀의 풍부한 통찰력으로 현재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남녀격차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상대적 여성 임금의 느린 향상과 ‘임금 차별’의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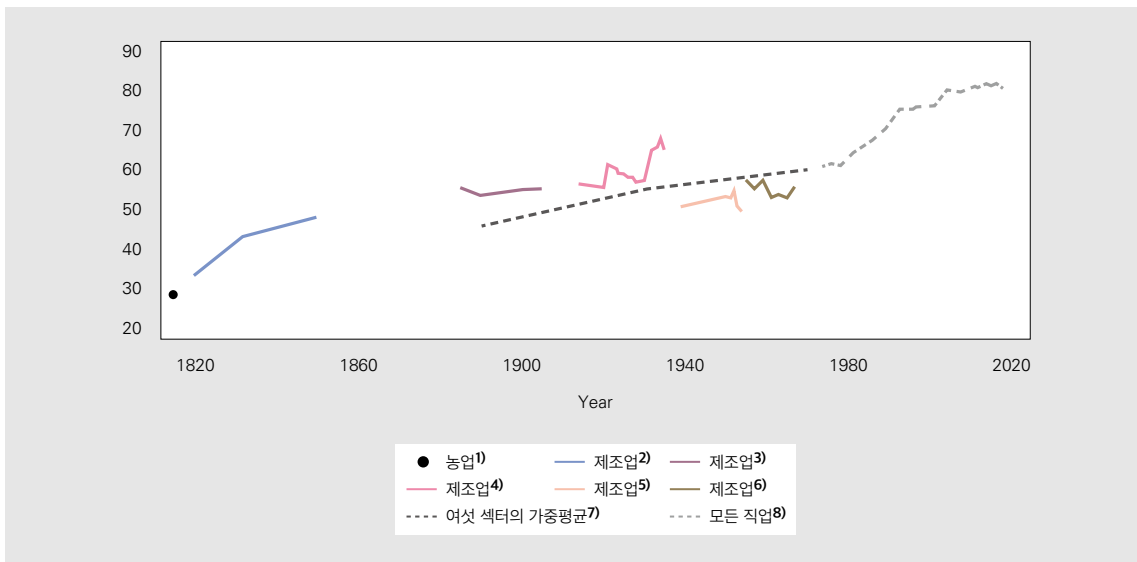
미국은 20세기 중반 노동시장 결과에 대한 데이

터 수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의 진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어려움은 임금 데이터의 부족이었다. 골딘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수집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을 조합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한 경제학적 결과를 이끌어냈다. Goldin(1990)은 주로 제조업 조사를 통해 거의 2세기에 걸친 여성 대 남성 임금의 역사를 조립하여 장기간의 전망을 제공했다. [그림 2]는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장기 경향을 보여준다.

먼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이동, 사무직 업무의 증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확장은 여러 경제 개발 단계에서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의 연구에 있어서 골딘은 세 가지 핵심 사실을 확립했다. 첫째, 임금격차는 미국 산업혁명(1820~1850년)과 화이트 칼라 직업의 부상 시대(1890~1930년) 모두에서 크

[그림 2] 1820~2020년 미국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

(단위: %)



출처: 1)~7) Goldin(1990); 8) OECD(2023)

게 좁혀졌다. 두 기간의 임금격차 축소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직업 기회와 같은 일과 직업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위한 사회 운동의 상당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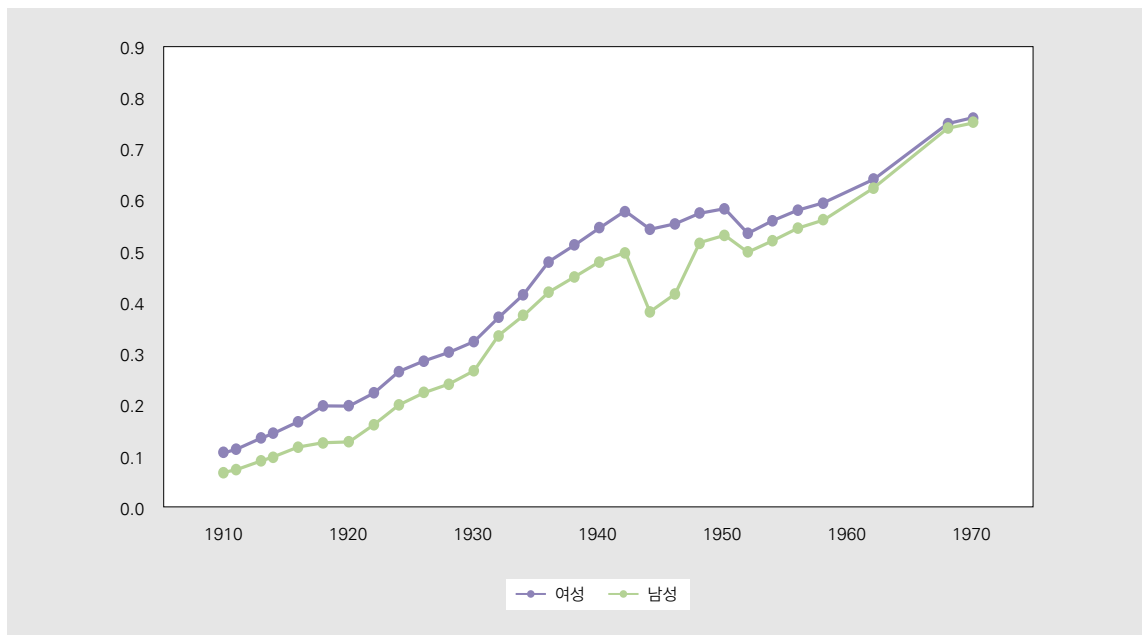
미국의 산업혁명은 19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며, 공장의 생산 조직은 적어도 미혼 여성에게는 노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동부 지역 농업 부문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임금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따라서 19세기 농업에서 가벼운 제조업으로의 전환은 처음 임금 격차의 감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는 화이트칼라 확장기

(1890~1930년) 중에 다시 한번 크게 좁혀졌다. 20세기 초반, 여성 노동인구의 대다수는 교육 수준이 낮은 미혼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제조업(예: 신발이나 의류 제조 또는 과일 및 채소 가공)이나 가정 서비스 직업에서 일했다. 이러한 직업들은 진출 자격이나 승진 기회가 없었으며 종종 생산 단위로 임금을 받았다. 또한, 직업 전망이 없어서 인적 자본에 투자할 동기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예를 들어 타자기나 금전등록기, 속기)은 사무 작업의 성격을 변화시켜 사무 업무가 일상화되고 기계화되었다. 동시에 기업 규모와 경영 지원을 위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sup>10)</sup> 그리고 1910년

[그림 3] 미국 내 여성과 남성의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단위: %)



출처: Goldin and Katz(2008)

10) 187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사무직 고용은 전체 고용의 1%에서 10%로 증가했다.

에 시작된 고등학교 운동은 고등학교 교육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으며(Goldin, 1998; Goldin and Katz, 2008), 1940년대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 20%포인트 더 높았다([그림 3] 참조).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사무직 부문을 확장하였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에 비해 더 쾌적한 근무 조건과 노동시장 부재에 대한 낮은 불이익<sup>11)</sup>은 남성이 주로(1890년에는 85% 이상) 차지하던 부문을 주로 여성이 차지하는 부문으로 전환되도록 결합되었다(Goldin, 1984). 더욱이 사무직 부문의 소득이 대부분의 다른 부문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사무실의 ‘여성화’는 주로 제조업 및 가사 노동 직업에서 사무직 부문으로의 전환을 통해 달성되었다.

둘째, 20세기의 주요 구조적·사회적 변화, 여성 참여 및 인적 자본의 상당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의 감소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1930년에서 1950년 사이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리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1940년대에는 화이트칼라 직업에 적합한 고등학교 졸업 여성이 적었다. 동시에 직업 경험이 많은 기혼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한 후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sup>12)</sup>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

자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로 기혼 여성들의 잠재적 공급과 결합된 시장의 변화가 1940년대에 여성 고용을 제약하는 결혼 금지령의 폐지를 주도했다. 비록 여성의 상대 임금이 1940년대 초기에는 상승하였으나, 제조업에서의 임금격차는 1880년부터 1960년대까지 약 55%에서 정체되었다([그림 2] 참조).<sup>13)</sup>

여성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혼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증가했고 노동시장도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1940년대와 특히 1950년대에 일정 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만들기 시작했다(Goldin, 1990). 1940년에는 여성 노동인구의 18%가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1960년에는 28%로 늘었다.<sup>14)</sup> 시간적 유연성이 더 커지면서 기혼 여성은 가정 책임과 노동을 결합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여성의 평균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추가적으로 노동공급의 생애주기 패턴은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변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혀준다. 대부분의 노동시장 진입자는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았고 미래에 일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연로한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교육 투자는 이러한 기대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인구의 평균 기술 수준은 비교적 낮았고, 이로 인해 일상적

11) 생산성은 경험에 따라 증가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종종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에(사무직은 급여를 받았지만) 노동시장에서 부재하는 것은 제조업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았다.  
 12) 이러한 욕구는 가사노동을 줄이는 기술 혁신의 보급(예: Greenwood et al., 2005)으로도 일정 부분 촉진되었다. 이로써 여성들은 가정 책임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  
 13) 1890년부터 1980년까지 모든 직업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성별 격차는 1930년까지 좁아지기는 했지만, 1980년까지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경기주기의 변동을 포함하더라도) 유지되었다. 평균 소득은 직업 분포에 따라 각 그룹의 소득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성됐다(Goldin, 1990).  
 14)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는 특히 소매업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1940년에는 14%에서 1960년에는 40%로 늘었다.

인 사무직 직업에서 고용되었으며 직장에서의 인적 자본 축적 기회나 승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세 번째, 소득 차이의 특성(원인 및 규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미국 제조업의 성별 분리로 인해 수입 차이가 주로 발생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몇몇 산업(직물, 의류, 신발 및 구두, 통조림, 담배)에 제한되었으며, 진입 자격이나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직업에서 일했다. 그러나 Goldin(1990)은 관찰된 '임금 차별'(즉, 성별 간 생산성 차이를 조정한 임금격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조업 직업에서 생산성을 감시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과급은 특히 여성이 일하는 산업에서 일반적이었고, 이는 임금을 생산성 차이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했다. 즉, 노동시장이 현물시장으로 조직되었을 때 근로자들은 주로 개인의 생산성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이는 집단 특성에 따른 차별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화이트칼라 직업의 확대는 심각한 '임금 차별'의 시작점이 되었다. 1940년까지는 사무 업무에서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 중 절반 이상이 개인 생산성 관련 지표로 설명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임금 차별'은 주로 노동시장이 현물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노동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했다. 20세기 중반 인사 부서 설립은 직업 사다리, 급여 체계와 함께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이 충성심과 능력을 보일 때 승진되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근속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고용주는 승진

결정 시 성별을 신호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5)</sup> 따라서 직업 내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개인 생산성 관련 지표로 조정한 성별 임금격차는 현대 노동시장에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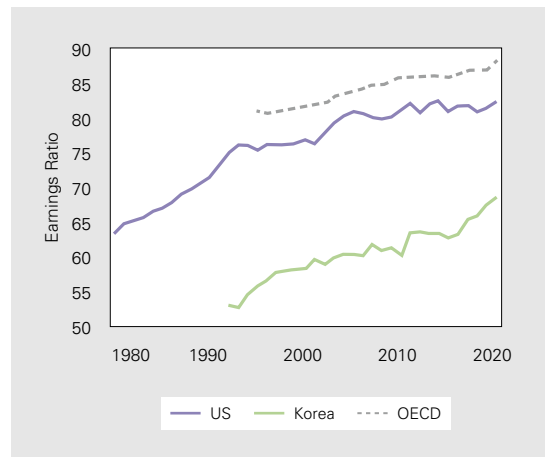
## 2. 직업 내 임금격차의 요인과 영향

[그림 4]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녀 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에서 수렴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적게 받고 있다. 2020년 OECD 국가 전체에서 중위값을 기준으로 풀타임 수입의 평균 성별 격차가 13%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7%이고, 미국에서는 18%이며, 한국에서는 31.1%이다.

그렇다면 남녀 임금격차의 진화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 간 인

[그림 4]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단위: %)



출처: OECD(2023)

15) 승진 결정은 부분적으로 회사에서의 예상 재직 기간에 기초하는데, 이는 재직 기간이 길수록 회사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적 자본이나 직업 간 차이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의 교육과 직업 선택은 남성과 더 유사해졌으며, 오늘날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 고소득 국가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의 크기 중 인적 자본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은 더 적게 측정된다. 사실,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OECD, 2023).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반에도 해당되며, 25~34세와 55~64세 그룹 모두에 해당된다. 또한 교육 연수와 같은 인적 자본의 표준적인 측정도 최근의 성별 임금격차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이 선택하는 교육의 유형과 이후 직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Altonji, 1993; Black et al., 2008; Bertrand, 2020). 예를 들어 대학 전공 선택이 남성과 유사한 노동시장 참여를 가진 여성들 사이의 근본적인 성별 임금격차의 반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다. OECD 국가 일부에서는 STEM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남성의 50% 이상이 취득하지만 여성의 비율은 20%를 넘지 않았다. OECD 국가 전체에서는 인문학 분야에서 여성이 학위를 더 많이 받지만, 비즈니스 및 법학 분야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낮았다.

그러나 골딘은 교육 및 직업 선택의 차이가 남

아 있더라도, 오늘날 미국 대학 졸업생 사이 임금 격차는 대부분 직업 간 차이가 아닌, 직업 내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Goldin, 2014). 다시 말해, 임금격차를 설명할 때 교육 및 직업 트랙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도가 줄어들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직업 내 차이가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성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업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직업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회귀분석모형에 직업 더미 변수의 전체 집합이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로그 소득 회귀에서 여성에 대한 계수를 관찰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의 네 개 샘플을 이용하여, 골딘은 모든 교육 그룹과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모든 직업의 영향을 흡수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계수가 1/3 이상 감소하지 않으며, 이는 직업 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큰 남녀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sup>16)</sup>

직업의 영향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고소득 직업 내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확인해보는 작업이다. 골딘은 소득 순위에 따라 상위 95개 직업에 집중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직업들은 직업 유형으로 더 쉽게 그룹화될 수 있고, 대학 졸업자 중 상당 부분

16) Goldin(2014)은 2009년부터 2011년 ACS의 네 개 샘플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 중 두 가지는 모든 교육 그룹에 대한 것이고, 두 가지는 대학(BA) 졸업자로 한정된 것이다. 이 샘플 각각에 대해 하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풀타임, 연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모든 회귀 분석에는 연령(4차 다항식), 인종 및 연도가 포함된다. 근무 시간(로그 시간, 로그 주) 및 교육 수준(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학 이상)의 측정값이 차례대로 추가됐다. 가장 완전한 모형에는 직업 더미(세 자릿수 수준)가 포함됐다.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7)</sup> 거의 모든 직업에서 여성이 받는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과 나이, 교육 및 근무 시간에 대한 조정된 임금에서도 근본적인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이 결과가 각 직업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 교육과 연령이 동일하며 각 직업에 대한 근무 시간과 주가 주어진 경우, 여성과 남성 간 차이에 대한 페널티를 나타낸다고 봤다. 그러나 왜 이러한 페널티가 심지어 고수입 직업에 대해서도 직업별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3. '고요한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남녀 임금격차 감소

골딘은 이러한 대대적인 인적 자본 투자 증가와 이와 관련된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고요한 혁명'이라고 지칭하였다. 1970년부터 여성들의 교육적 선택은 상당히 변화해왔다. 대학 입학 및 졸업률이 남성을 능가하고, 전문 프로그램 등록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적 자본 투자의 증가는 (근원) 성별 임금격차의 상당한 축소에 기여했으며, 이는 198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전보단 느린 속도였지만, 여성 노동인구 참여율 역시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연구하였고,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요인에 집중하였다. 바로 기대값의 변화와 경구 피임약의 도입 확대였다.

개인들은 어린 시절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기대는 결혼, 출산, 고용 가능성, 그리고 타이밍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고등학교, 대학, 전공, 대학원 학위 등)는 개인이 미래에 얼마나 일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이러한 기대 중 일부는 이전 세대의 노동시장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형성되며, 사회적 규범과 기대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투자는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의 모든 결과를 관찰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부정확할 수 있으며 교육적 선택을 최적화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골딘은 미래 고용에 대한 기대, 여성의 가정과 경력에 관한 사회적 규범,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Goldin, 2006). 일부 변화는 다른 변화의 선행 조건이었으며, 대학 전공, 전문학교 입학 및 직업 변화와 같은 것들이 그 중 일부였다. 「국가장기조사(National Longitudina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Goldin(2005; 2006)은 다양한 세대의 젊은 여성들의 고용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였다. 1967년 20~21세(1947~1948년 출생) 여성 중 35%가 35세 때 고용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1979년에는 80%(1958~1959년 출생)가 고용

17) 2009~2011년 ACS에서 풀타임 연중 대학 졸업자 샘플을 구성하면, 상위 95개 직업 그룹에 속한 대학 졸업자 중 남성은 61%, 여성은 45%였다.

을 기대했음을 보여주었다. 1947~1948년 출생 세대의 예측은 사실 그들의 어머니의 실제 고용률과 매우 가까웠다(대략 30%). 그러나 그들의 35세 때 실제 고용률은 약 65%였다. 반면 1958~1959년 출생 세대의 예측은 「국가장기조사」에서 나온 청년의 고용률에 훨씬 가까웠다(약 75%). 이를 통해 그녀는 1970년대에 10대 후반이었던 젊은 여성들이 미래 유급 노동인구에 참여할 기대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머니 세대의 실제 참여율과 유사한 기대치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다음 10년 동안, 젊은 여성들은 미래의 노동인구 참여율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시작했으며, 사실 실제보다 조금 더 높게 예상하기도 했다. 젊은 여성들은 시야를 확장하고 그들의 삶이 연장세대와 다르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수정된 미래 고용에 대한 기대는, 젊은 여성들이 대학에 계속 다니고 졸업하도록 이끌었다.

골딘은 피임약이 여성의 출산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노동 경력 계획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의 노동참여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속화했다는 증거를 찾았다.<sup>18)</sup> 미국에서는 최초의 경구 피임약이 1960년에 승인되어 결혼한 여성에게 제공되었지만 1960년대 말까지, 젊은 미혼 여성들을 위한 이용이 제한되었다.<sup>19)</sup> 1970년대 초에 많은 주에서 성년의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가족계획 및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젊은 미혼 여성들은 피임약을 통

해 출산 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이는 교육, 직업 및 결혼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Goldin and Katz(2002)는 성년의 나이와 가족계획 개혁의 시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피임약 접근이 결혼 연령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론과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기 의존성을 활용하면 종합적인 추세를 고정시키고, 그 결과로 성별 규범이 변동하는 것과 같은 다른 관측되지 않는 요인이 동시에 변화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1970년, 1980년 및 1990년 인구조사에서 다양한 연령 그룹의 직업 및 결혼 결과를 조사하였다. 연이어서 다양한 세대를 동일한 연령대에서 관찰함으로써, 그들은 세대 간 결혼과 직업 선택의 변화가 세대 간 피임약 및 낙태 접근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 연구했다. 이러한 분석은 피임약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다. 신뢰성 있는 피임약에 접근하면 대학 여성들이 전문 직업에 투자하고 결혼을 미루었다. 또한 피임약은 여성들이 교육에 더 투자하고, 고학력 여성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동기를 증가시켰다.

#### 4. 왜 아직도 남녀 임금격차가 남아있는 것일까?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 프로그램 참여율

18) Goldin and Katz(2002)는 피임약의 이용 가능성이 여성에게 변화의 역할을 했으며, '고요한 혁명'의 중요한 촉매제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9)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년 이전의 미혼 여성들은 피임약 이용을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미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구 피임약의 이용 가능성에는 주별로 시간에 따른 변동이 있다.

이 유사하며, 노동참여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남녀 임금 격차는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아 있다. 골딘은 이러한 한계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Bertrand et al.(2010)은 부모가 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수입이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부모 역할이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반면 아버지의 소득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최상위 비즈니스 스쿨(MBA) 출신 졸업생들의 직업 결과를 이용하여 남녀 임금격차가 수명 주기를 통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했다. 그들은 이 학교가 일반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기업 및 금융 직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을 두었다. 다른 전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MBA 입학 시 성별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었으며, 1970년에는 여성의 비율이 4%에서 2006년에는 43%로 증가했다. 골딘과 그 동료들은 학생들의 졸업 직후 고용 및 임금에서 성별 간 작은 차이가 관찰되지만, 10년 후에는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남녀 휴직 기간의 차이가 남녀의 큰 임금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10년 뒤에는 여성의 휴직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이지만 남성의 경우 고작 0.12년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휴직 기간은 6개월 이상의 휴직을 취한 여성(41%)과 남성(10%)의 차이로 크게 반영된다. 연도와 코호트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졸업 시 성별 임금격차는 11log-point에서 5년 후에는 31log-point로 확대되고 10년 후에는 60log-point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왜 노동공급과 직업 중단이라는 결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답으로 자녀의 출산을 언급했다. 고용에서 성별 차이(예를 들어, 근무 확률, 경력 및 근로 시간 등)는 자녀를 키우는 여성에 의해 주도된다. Bertrand et al.(2010)은 남녀 고용 차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여성의 유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그와 동시에 첫 번째 자녀 출산이 여성 노동시장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성의 고용, 수입 및 근무 시간은 출산 후 즉시 감소하고, 이어지는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한다. 그러나 남성의 노동시장 결과는 악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부모 역할 효과(Parenthood effect)’라 지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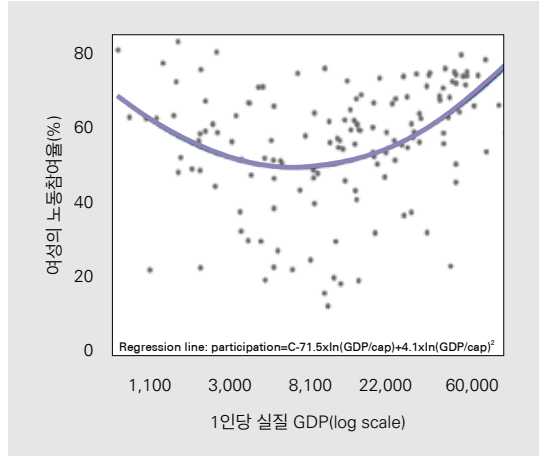
이후 골딘은 이러한 ‘부모 역할 효과’가 왜 여성, 특히 어머니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Goldin(2014)은 직장 유연성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이 육아 책임의 주된 부담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보상의 차별 모형을 제시하며, 여성이 양육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유연한 직장을 요구할 때 임금 페널티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남성은 고용 및 고객의 요구를 항상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직장을 가질 때 임금 보너스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받는 임금의 비선형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언급했다. 골딘은 남녀 임금격차는 시간 압박, 타인과의 접촉, 대인 관계 및 의사결정 자유가 더 큰 직업에서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직업에서는 노동자 대체의 정도가 낮았다.

골딘과 동시대의 연구들은 남아있는 남녀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이 ‘부모 역할’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했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골딘은 직장 유연성을 일부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다른 설명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굳어진 신념 또는 성별 편견(Bertrand, 2020 참조)은 여성이 지시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된 평균 비용을 피하기 위해 경력, 경력 휴직 및 자녀 돌봄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 수 있다.

#### IV. 전 세계적 여성 노동시장 변화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골딘의 연구는 여성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사례 연구를 제공하며, 사회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뛰어난 통찰을 제공한다. 1) 산업화 및 화이트칼라 확대에 의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2) 일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변화(가정 안에서 밖으로의 일), 3) 육아 책임에 대한 성별 규범 및 기대 변화, 그리고 출산 결정의 조절 가능성, 4) 교육 기회 증가, 5)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벽의 변화가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골딘의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현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격차 원천과 이를 다루는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는 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23b).

[그림 5] 국가 간 여성 노동시장 참여 및 경제 개발의 상관관계



주: 샘플은 15~65세 여성으로 이루어졌다. 사용된 GDP는 2018년 기준이다.

출처: World Bank(2023),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23b)

골딘은 자신의 연구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Goldin(1995)은 미국의 장기적 발전 경험의 외부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약 130개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대 국가들이 경험한 경제 발전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 간의 관계를 재현했다. [그림 5]는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발전(1인당 실질 GDP)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미국과 비슷하게 U자형 곡선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상황과 유사하게, 골딘은 U자형 곡선의 하강 부분을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의 주요 위치가 가족 농장에서 공장, 기업 및 다른 임금 노동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미국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이 이러한 기회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는 결혼한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제약의 존재에 달려 있다.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널리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남편의 소득 증가는(따라서 가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녀는 경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 특히 중등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직업이 늘어나는 시대 이후 관찰된 상승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이나 성차별적인 법은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는 정도와 속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 V. 정책적 시사점

골딘의 연구는 사회적 규범, 직업 내 관행, 그리고 교육 기회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를 개선하고 성별 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정책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단단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골딘은 직접적으로 정책의 역할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연구는 오늘날 많은 국가가 겪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종류의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또는 언제 효과가 있을지, 특정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한다.

골딘의 연구에서 얻은 첫 번째 기본적인 결론은 성별 격차의 원인이 사회가 발전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전환할 때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의 연구는 다양한 경제 개발 단계에서 가장 관련성 있는

요소가 무엇이며, 성별 격차의 다양한 원인이 종종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은 현재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의 목표이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여성이 직장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통찰은 성별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문헌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 간 임금 차이의 주요 원인은 출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부모 역할 효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골딘의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영감을 주었다. 이는 많은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직장 유연성의 촉진, 보육 서비스의 지원, 그리고 직장 내 성차별 금지법 등과 같은 정책적 접근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이는 여성, 특히 집 밖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사회적 규범과 편견에 도전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동반한다.

골딘의 세 번째 중요한 통찰은 변화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 그녀의 연구는 산업화 시대부터 시작된 여성 노동에 대한 인식과 제도 변화가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성차별적 사회적 규범과 제도의 개선, 교육 투자, 자녀 양육과 직장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해 등은 몇 년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이루어진다. 심지어 효과적으로 설계된 정책의 영향은 주

로 미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 세대들이 인적 자본 투자 결정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업 경력 사이의 선택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종합 결과에 천천히 반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골딘의 연구는 노동공급 결정의 시간적 성격 때문에 여성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세 번째의 연장선상이자 그녀의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기여의 큰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고용된 여성의 일자리 구조나 노동시장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미래에도(아직 확인되지 않은) 동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이러한 정책 개혁을 고려할 기회가 있는 젊은 여성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쳐 미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효과적인 정책이 변화를 느리게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이다.

## VI. 결론


평등한 기회는 번영하고 건강한 사회에 필수요소이다. 오늘날 이러한 주제의 전 세계적 관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지만, 클라우디아 골딘의 여성 노동 연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80년대만 해도 성별 연구는 경제학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고, 대부분 기혼 가구 내 여성 노동공급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40년 이상에 걸친 그녀의 혁신적인 기여는 성평등을 주도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시키고, 남아 있는 중요한 도전에 빛을 던졌다는 점이다. 골딘은 노동참

여와 임금에 대한 성별 차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족, 자녀 그리고 직업 구조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한다.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이전과 다른 발견 및 뛰어난 통찰력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성별 격차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적인 여성 노동시장 결과를 연구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 2) 성별 격차의 원인, 특히 사회적 규범과 편견을 포함한 성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자연 실험의 중요성, 3) 부모가 되었을 때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4)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설명하기 위한 직장 구조와 유연성의 역할에 대한 조사, 5) 젊은 미혼 여성들이 미래 노동시장에 관한 기대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적 설명의 필요성 등이 그녀의 주요 업적이다. 더욱이,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가 경제 발전과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은 다양한 정책 조치가 성차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연구 분야의 성장을 이끌었다.

골딘의 기념비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젠더에 대한 기존 관점과 새로운 관점이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노동 경제학의 많은 발전은 노동공급의 소득 및 대체 효과, 노동시장에서 자기 선택의 결과, 시장과 가구 간의 상호 작용 등 젠더 문헌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Altonji and Blank, 1999; Croson and Gneezy, 2009). 공공경제학에서 여성의 반응은 교육 및 가족 지원, 세제 개혁과 의료 분야의 여러 정책 평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Browning et al., 2014). 개발경제학에서는 건강,

교육, 개인의 자율성 및 법적 권리에서 성별 격차를 강조하고 저소득층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입을 고안한 연구가 진행되었다(Duflo, 2012; Goldscheider et al., 2015). 거시경제학에서 성별 추세는 산업구조의 진화, 총생산성, 인재 배분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관련이 있다(Autor et al., 2003).

본고가 여러 국가가 겪고 있는 젠더 이슈에 최종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 수상자인 골딘의 기초 작업과 후속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성별 격차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정책적 대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이창신, 「미국 산업화 과정에 나타난 여성 노동의식의 성장과 참정권 운동」 『미국학논집』 52(1), 2020, pp. 115~147.

Altonji, Joseph G. "The demand for and return to education when education outcomes are uncertai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1(1), 1993, pp. 48~83.

Altonji, Joseph G. and Rebecca M. Blank. "Race and gender in the labor market,"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 1999, pp. 3143~3259.

Autor, David H., Frank Levy and Richard J. Murnane,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2003, pp. 1279~1333.

Becker, Gary 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art 2, 1962, pp. 9~49.

Ben-Porath, Yoram, "The produc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life cycle of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4), Part 1, 1967, pp. 352~365.

Bertrand, Marianne, Claudia Goldin, and Lawrence F. Katz. "Dynamics of the gender gap for young professional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3), 2010, pp. 228~255.

Bertrand, Marianne, "Gend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AEA Papers and proceedings*, 110, 2020, pp. 1~24.

Browning, Martin, Pierre-André Chiappori and Yoram Weiss, *Economics of the Fami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Crosen, Rachel and Uri Gneezy, "Gender differences in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2), 2009, pp. 448~474.

Dan A. Black, Amelia Haviland, Seth G. Sanders, and Lowell J. Taylor, "Gender wage disparities among the highly educated,"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3), 2008, pp. 630~659.

Duflo, Esther, "Women empower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4), 2012, pp. 1051~1079.

Goldin, Claudia, "The historical evolution of female earnings functions and occupation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1(1), 1984, pp. 1~27.

- \_\_\_\_\_,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in the Early Republic: Quantitative Evidence,"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6(3), 1986, pp. 375~404.
- \_\_\_\_\_,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An Economic History of American Women*, 1990.
- \_\_\_\_\_, "The U-shaped Female Labor Force Func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History," In: T.P. Schultz (ed), *Investment in Women's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_\_\_\_\_, "America's graduation from high school: The evolution and spread of secondary schooling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2), 1998, pp. 345~374.
- \_\_\_\_\_, "From the valley to the summit: A brief history of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work," *Regional Review*, 14(3), 2005, pp. 5~12.
- \_\_\_\_\_,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2006, pp. 1~21.
- \_\_\_\_\_, "A grand gender convergence: Its last chapter," *American Economic Review* 104(4), 2014, pp. 1091~1119.
- Goldin, Claudia and Lawrence F. Katz, "The power of the pill: Oral contraceptives and women's career and marriage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4), 2002, pp. 730~770.
- \_\_\_\_\_,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Goldin, Claudia, and Kenneth Sokoloff, "Women, childre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republic: Evidence from the manufacturing census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2(4), 1982, pp. 741~774.
- Goldscheider, Frances, Eva Bernhardt and Trude Lappegård,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15, pp. 207~239.
- Greenwood, Jeremy, Ananth Seshadri and Mehmet Yorukoglu, "Engines of Libera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1), 2005, pp. 109~133.
- Harris, Barbara Jean, *Beyond Her Sphere: Women and the Professions in American Histor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78.
- Mincer, Jacob,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Human Behavior & Social Institutions No. 2, 1974.
- Tentler, Leslie Woodcock, *Wage-earning women: Industrial Work and Family Life in the United States, 1900~1930*,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Popular science background: History helps us underst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labour market," 2023a.
-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cientific Background to the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 2023b.
- UN Women, "Progres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Gender Snapshot 2023," 2023.
- Wright, Gavin.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A review articl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3 (1991): 1153-1163.

OECD, Gender wage gap (indicator),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l>, 검색일자: 2023. 10. 30.

World Bank, Data retrieved from World Bank Open Data Portal,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자: 2023. 10. 30.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 [친환경차 세액공제 양도(transfer) 지침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3년 10월 6일, 구매자가 판매 업체에 친환경차 세액공제(clean vehicle credit)를 양도(transfer)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sup>1), 2)</sup>

- 2024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차 구매자는 적격 판매업체(eligible entity)에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양도할 수 있고 양도를 통해 공제시점이 앞당겨져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음

- 현행은 구매자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고 2024년부터는 구매자가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국세청에 등록된 적격판매업체에게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구매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국세청 선불 프로그램을 통해 양도받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sup>3)</sup>

- 구매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시 양도한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가 담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세액공제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정산함

- 판매업체는 ‘국세청 에너지 세액공제 온라인 사이트(IRS Energy Credits On-line)’에 등록해야 함

- 판매업체는 구매자에게 국세청에 등록된 판매업체임을 증명하는 보고서 사본(a copy of the seller report)과 판매가액, 세액공제액, AGI 한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공해야 함

- 판매업체는 양도받은 세액공제를 수령하기 위해 국세청 선불프로그램(the advance payment program)을 이용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 캐나다

#### [신축 임대주택 상품서비스세(GST) 리베이트 인상]

■ 캐나다 재무부는 2023년 9월 14일, 신축 임대주택(New Purpose-Built Rental Housing)의 상

1) IRS, “IRS Issues Guidance for the Transfer of Clean Vehicle Credits and Updat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3. 10. 6.,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for-the-transfer-of-clean-vehicle-credits-and-updates-frequently-asked-questions>, 검색일자: 2023. 10. 16.

2) IBFD, “IRS Provides Guidance on Transfer of New and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Tax Credits,” 2023. 10.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9\\_us\\_5.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9_us_5.html), 검색일자: 2023. 10. 16.

3) IRS, “Topic H — Transfer of New Clean Vehicle Credit and Previously-Owned Clean Vehicles Credit,” 2023. 10. 6., <https://www.irs.gov/newsroom/topic-h-transfer-of-new-clean-vehicle-credit-and-previously-owned-clean-vehicles-credit>, 검색일자: 2023. 10. 16.

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리베이트 강화를 발표함<sup>4,5)</sup>

- 캐나다는 신축 임대주택의 상품서비스세 리베이트를 100%로 인상하는 법안 도입을 발표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 상품서비스세의 36%를 리베이트(GST Rental Rebate) 신청할 수 있음<sup>6)</sup>
- 신축아파트(new apartment buildings), 학생기숙사(student housing),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senior residences), 장기 임대주택 등 특정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이 대상임
  - 2023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3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착공해야 하며 2035년 12월 31일 까지 완공해야 함
- 개인 소유의 콘도미니엄, 단독주택 등은 대상이 아니며 기존 리베이트 기준에 따름
  -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퇴거(renoviction)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주거단지의 대규모 리모델링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강화된 리베이트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적용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 아일랜드

### [2024년 예산안 발표]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023년 10월 10일,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sup>7)</sup>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상향조정, Help-to-buy 세제혜택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법인세) 필라2 이행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필라 2에 따른 15%의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을 발표함
  - 연구개발세액공제(R&D Tax Credit Regime)와 관련하여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함
  - 고용 및 투자 인센티브(Employment and Investment Incentive, EII)의 투자 기간을 모든 투자에 대해 4년으로 표준화하고 연간 투자공제 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하여 50만유로<sup>8)</sup>로 증가시킴

4) Government of Canada, "Enhanced GST Rental Rebate to Build More Apartments for Renters," 2023. 9. 14.,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9/enhanced-gst-rental-rebate-to-build-more-apartments-for-renters.html>, 검색일자: 2023. 10. 16.

5) IBFD, "Canada to Remove Goods and Services Tax on New Purpose-Built Rental Housing," 2023. 9.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0\\_ca\\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0_ca_1.html), 검색일자: 2023. 10. 16.

6) Government of Canada, "GST/HST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2020. 10. 3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231/gst-hst-new-residential-rental-property-rebate.html>, 검색일자: 2023. 10. 16.

7) IBFD, "Ireland - Budget 2024: Government Announces Budget for 2024," 2023.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1\\_i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1_ie_1.html), 검색일자: 2023. 10. 18.

8)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1,612만원임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 표준세율 구간을 미혼 개인의 경우 4만 유로<sup>9)</sup>에서 4만 2,000유로<sup>10)</sup>로 인상함
- 개인 세액공제(Personal Tax Credit)를 1,775유로<sup>11)</sup>에서 1,875유로<sup>12)</sup>로 인상하였으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Credit) 환급한도를 1,775유로에서 1,875유로로 인상함
- 또한 가정간병인 세액공제(Home Carer Tax Credit)를 1,700유로<sup>13)</sup>에서 1,800유로<sup>14)</sup>로 인상함

■ (기타) 이외의 세목에 대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혁신적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양도소득세 경감(relief)을 발표함
  - 적격 투자금에 대해 기존 투자금의 최대 두 배까지 양도소득세 경감을 제공함
  - 투자자는 최소 3년간 투자금을 보유해야 하고 평생 한도액은 300만유로<sup>15)</sup>임
- 가스 및 전기 공급품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9% 경감세율을 추가적으로 12개월 연장함

- 유류세(fuel excise) 인상이 2023년 10월 31일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4년으로 연기함

- Help to Buy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함

- Help to Buy 제도는 생애 첫 부동산 구매자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매한 부동산 가액의 10%, 최대 3만유로<sup>16)</sup>까지 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로 아일랜드 정부는 세수호황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아일랜드 미래기금'과 '인프라기후기금'의 두 가지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힘

- 아일랜드가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현재 아일랜드가 세계 최저 수준인 12.5%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비교적 기업 유치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내년부터는 OECD와 합의한 15%의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9)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29만원임  
10)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15만원임  
11)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4만원임  
12)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만원임  
13)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3만원임  
14)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8만원임  
15)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억원임  
16)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0만원임



## 프랑스

## [2024 예산안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23년 9월 27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함<sup>17), 18)</sup>

- 녹색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AVE)의 폐지 기한을 연장함
  - 녹색기업 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9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열 펌프 생산에 대해 이뤄진 투자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비용의 20~4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sup>19)</sup>
  - 기업부가가치분담세의 폐지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최대 세율을 2024년 0.28%, 2025년 0.19%, 2026년

0.09%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27년 전면 폐지할 예정임<sup>20)</sup>

-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입법함<sup>21)</sup>
  - 글로벌최저한세(필라 2)의 EU 도입과 관련한 'EU 최저한세 지침(2022/2523)'을 국내법으로 입법함
  - 다른 EU회원국 내에 설립된 매출액 10만유로<sup>22)</sup>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 제도의 적절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행정협력 및 정보교환의 내용은 담은 'EU 부가가치세 수정지침(2020/285)'을 국내법으로 입법함<sup>23)</sup>

■ 개인 납세자의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역외 탈세 및 조세 회피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함<sup>24)</sup>

- 개인 납세자의 탈세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

17)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n°1680,"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1680\\_projet-loi](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1680_projet-loi), 검색일자: 2023. 10. 19.

18) IBFD, "Government Presents Finance Bill for 2024, Including Draft Legislation on Pillar Two," 2023. 9.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7\\_f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7_fr_1.html), 검색일자: 2023. 10. 19.

19) 다만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20) 기업부가가치분담세란 프랑스 내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역경제분담세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인 경우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됨. 과세표준은 매출액(상품판매 및 용역제공)과 추가소득(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에서 생산비용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한 것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p. 109.)

21) IBFD, "Finance Bill for 2024 Implements Minimum Taxation Directive, Introduces Tax Credit for Green Industries," 2023. 9.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2%23tns\\_2023-09-29\\_fr\\_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2%23tns_2023-09-29_fr_2), 검색일자: 2023. 10. 30.

22)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271만원임

23) IBFD, "Finance Bill for 2024 Transposes New Rules on VAT Scheme for Small Businesses," 2023. 9.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3%23tns\\_2023-09-29\\_fr\\_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3%23tns_2023-09-29_fr_3), 검색일자: 2023. 10. 30.

24) IBFD, "Finance Bill for 2024 Introduces New 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Tax Fraud and Evasion," 2023. 9.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5%23tns\\_2023-09-29\\_fr\\_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5%23tns_2023-09-29_fr_5), 검색일자: 2023. 10. 30.

지 못하도록 함(이중과세조약에 따른 세액공제 제외)<sup>25)</sup>

- 역외 탈세 행위 및 조세 회피에 대한 새로운 조치로서 이전가격 문서 제출 의무대상 범위 확대, 무형자산 역외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역외 탈세 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등을 도입함
- 다국적기업에 이전가격 문서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연매출액 기준을 4억유로<sup>26)</sup>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1억 5,000만유로<sup>27)</sup>로 인하하고, 문서 미제출 벌금 상한을 1만유로<sup>28)</sup>에서 5만유로<sup>29)</sup>로 확대함
- 가치를 판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의 역외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특정 요건 충족 시 이전 시점 이후의 가치에 기반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역외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sup>30)</sup>을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25만유로<sup>31)</sup>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만유로<sup>32)</sup>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포르투갈

### [예산 법안 초안 의회 제출]

- 포르투갈 정부는 2023년 10월 10일, 예산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안 제정과 동시에 발효됨
-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 자본화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함<sup>33)</sup>
  - 적격 스타트업의 첫 과세 소득 중 5만유로<sup>34)</sup>에 대해 12.5%의 감면세율을 적용함
  - 기업 자본화(capitalisation)<sup>35)</sup> 관련 과세기간인

25) IBFD, "Finance Bill for 2024 Adjusts Income Tax Brackets, Introduces New Penalty for Aggravated Tax Fraud," 2023. 9.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4%23tns\\_2023-09-29\\_fr\\_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29_fr_4%23tns_2023-09-29_fr_4), 검색일자: 2023. 10. 30.

26)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10억 7,600만원임

27)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41억 5,350만원임

28)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27만원임

29)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138만원임

30) 예를 들어 은행 계좌, 외국 법인과의 계약, 역외 자연인·법인의 개입, 가공의 또는 인위적인 역외 납세 거주지 제공을 말함

31)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5,695만원임

32) 2023년 10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1,390만원임

33) IBFD, "Portugal - Budget 2024: CIT Proposals Include Slashing CIT Rate for Start-ups, Reinforcing Incentive for Capitalization of Companie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2), 검색일자: 2023. 10. 23.

34)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120만 6,000원임

35) 비용 발생 기간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가치에 비용을 포함시켜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비용을 처리하는 회계 방법(Invsetopia, "Capitalization: What It Means in Accounting and Finance,"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apitalization.asp>, 검색일자: 2023. 11. 2.)

12개월간 EURIBOR<sup>36)</sup>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공제해 왔으나, 기존 요율에 일반 기업은 1.5%p, 중소기업은 2%p를 추가 공제함

- 임금 인상 관련 세제 혜택은 최고 보수 10% 및 최저 보수 10% 직원의 연간 고정임금을 통해 임금 수준을 계산함
  - 본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임금 범위를 상위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까지 확대함
- 고용주가 고용인 사용을 위해 할당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이 고용인의 영구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됨
- 업무용 승용차 구입 시 과세되는 지방법인세

요율을 차량 취득 비용에 따라 8.5%, 25.5%, 32.5%(기존 10%, 27.5%, 35%)로 인하함

- 또한 전기 자동차의 경우, ① 대중교통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② 법인의 일상적 활동 과정에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③ 개인소득세 과세 목적으로 법인의 경영진 혹은 직원에게 차량 비용을 할당하는 서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방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sup>37)</sup>

- 개인소득세 세율의 소득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되었으며, 세금 면제 혜택의 확대 및 국외 거주자와 관련한 세제 변경사항 등이 포함됨<sup>38)</sup>

<표 1> 포르투갈의 2024년 예산안 개인소득세 세율표 변경

2023년 <sup>1)</sup>			2024년 <sup>2)</sup>		
과세 표준	세율 (%)	누진공제 (유로)	과세 표준	세율 (%)	누진공제 (유로)
7,479유로 이하	14.5	0	7,703유로 이하	13.25	0
7,480~11,284유로	21.0	486.14	7,704~11,623유로	18	365.89
11,285~15,992유로	26.5	1,106.73	11,624~16,472유로	23	947.04
15,993~20,700유로	28.5	1,426.65	16,473~21,321유로	26	1,441.14
20,701~26,355유로	35	2,772.14	21,322~27,146유로	32.75	2,880.47
26,356~38,632유로	37	3,299.12	27,147~39,791유로	37	4,034.17
38,633~50,483유로	43.5	5,810.25	39,792~51,997유로	43.5	6,620.43
50,484~78,834유로	45	6,567.33	51,998~81,199유로	45	7,400.21
78,834유로 초과	48	8,932.68	81,199유로 초과	48	9,836.45

출처: 1) PwC, "Portugal: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portugal/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3. 10. 30.

2) IBFD, "Portugal - Budget 2024: PIT Proposals Include Tax Benefits for Expatriates, Increase in Tax Bracket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 검색일자: 2023. 10. 23.

36)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내 시장 내 은행 간 금리(Euribor Rates, "Euribor," <https://www.euribor-rates.eu/en>), 검색일자: 2023. 10. 30.)

37) 현재는 6만 2,500유로 이상의 취득 비용에 대해 10%의 지방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38) IBFD, "Portugal - Budget 2024: PIT Proposals Include Tax Benefits for Expatriates, Increase in Tax Bracket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 검색일자: 2023. 10. 23.

<표 2> 청년 근로자의 고용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한 초기 5년간 소득공제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공제율(%)	100	75	50	50	25
한도액(유로)	20,400	15,300	10,200	10,200	5,100

출처: IBFD, "Portugal-Budget 2024: PIT Proposals Include Tax Benefits for Expatriates, Increase in Tax Bracket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3), 검색일자: 2023. 10. 23.

- 과세표준 금액을 모든 구간 3%씩 인상하였으며, 5번째 소득 구간까지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14.5~35%에서 13.25~32.75%로 인하함
- 18~26세(박사학위 소지자는 30세)의 청년 근로자의 첫 근무 5년간 고용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해 연차에 따라 25~10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이전 5년간 포르투갈에서 조세 목적 거주자로 간주된 적이 없는 개인이 2024~2026년 기간에 조세 목적 거주자로 등록하는 경우, 고용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해 5년간 최대 25만유로<sup>39)</sup>까지 5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됨
- 일부 국외 및 국내 소득에 대해 면세 및 감세가 적용되는 비거주자 세금 혜택(Non-Habitual Tax Residents, NHR)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 5년간 포르투갈에 거주하지 않은 특정 직군의 고용 및 자영업 소득자에게 10년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세금우대 제도가 도입됨
-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세 목적상 포르투갈 거주자가 되거나 해당 일까지 유효한 거주 허가를 보유한 개인이 2024년 3월 31일까지 NHR로 등록하는 경우 제도의 적용 기한인 10년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제도를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제도 대상자는 신규 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됨
- 또한 신규 제도는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국가 과학 및 기술 시스템, 특정 조건에 따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수행하는 연구개발, 특정 법률 조건에 따른 생산적 투자 목적의 계약을 통해 자격을 지니는 직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적용 대상임
- 업무 목적상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0.4유로<sup>40)</sup>/km의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보상 한도는 국내 운행은 62.75유로,<sup>41)</sup> 국외 운행은 148.91유로<sup>42)</sup>(일반직군)와 167.07유로<sup>43)</sup>(임원진)가 적용됨
- 요건을 준수한 고용주의 이윤분배(profit-

39)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5,610만원임

40)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0원임

41)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만 9,401원임

42)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만 2,154원임

43)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만 8,026원임

- sharing) 금액은 최대 4,100유로<sup>44)</sup>까지 세금이 면제됨
- 동산으로 발생한 자본 손실에 대한 이월을 5년간 허용함
- 특정 도시 임대차법 시행 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이 연간 4,100유로 미만이거나 임대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60%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이 지속되는 한 소득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변경되고, 일부 음료 관련한 특별 소비세율이 인상됨<sup>45)</sup>
  - 기본 영양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초 식품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됨
  - 60% 이상의 영구 장애를 지닌 사람의 특정 오락 및 문화행사나 설비 방문을 지원하는 동행인에 대한 티켓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농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의 사료, 토양 개량제 및 기타 제품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세무 등록부에 따라 '여행사' 활동을 하는 업체의 경우, 대회,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컨퍼런스 및 유사 행사의 진행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맥주, 증류주 및 발효주, 무알콜 가당 음료, 일반 및 탄산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기존 세율 대비 10%씩 인상함
- 재산 취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5%씩 인상되며, 취득세 혹은 보유세 면제 한도 및 요건 등이 변경됨<sup>46)</sup>
  -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도시 부동산 취득시 적용되는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5%씩 인상됨
  - 영구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도시 부동산 취득의 면세 한도가 기존 9만 7,064유로<sup>47)</sup>에서 10만 1,917유로<sup>48)</sup>로 인상됨
  - 거주 목적으로 임대 시 건축, 증축, 개량 또는 유상 취득된 도시 부동산에 적용되는 부동산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의 면제는 임대가 임차인의 영구 거주를 위한 것인 경우에만 허용됨
  - 특정 도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거주 목적으로 임대된 부동산의 경우 수익이 연간 4,100유로<sup>49)</sup> 미만이거나 임대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60%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소유주의 연간 재

44)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4만 163원임

45) IBFD, "Portugal - Budget 2024: Indirect Tax Proposals Include Changes in VAT Exemptions, Increase in Tax on Beverage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6](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10-12_pt_6), 검색일자: 2023. 10. 23.

46) IBFD, "Budget 2024: Property Tax Proposals Include Increase in Property Tax Brackets,"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2\\_pt\\_5.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2_pt_5.html), 검색일자: 2023. 10. 23.

47)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827만원임

48)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517만원임

49) 2023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4만 163원임

산세 역시 면제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노르웨이

[2024년 예산안 발표]

■ 노르웨이 정부는 2023년 10월 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함<sup>50)</sup>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 시민과 기업에 안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조세 전반에 걸친 개정안의 내용을 담음

■ (직접세) 풍력 및 수력 발전에 대한 고액기여금 (High-Price Contribution)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부유세에 관한 변화는 없을 예정임<sup>51)</sup>

- 고액기여금 형태의 한시적 세금은 2022년과 2023년 노르웨이의 전력 부문 수입이 급증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출이 증가하는 특수한 상

황으로 인해 정당화되었으나,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종업원 1인당 총급여가 75만NOK<sup>52)</sup>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일시적으로 5%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함
  - 현행법상 사회보장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한도는 50만NOK<sup>53)</sup>이며, 예산안에 따라 부과대상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되면, 75만 NOK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상된 요율이 적용될 예정임
  - 2024년에는 고용주 추가 국민보험료 부담금 한도를 85만NOK<sup>54)</sup>로 인상을 제안함
- 차등 고용주 국민보험료 부담금 제도에 따른 비과세 수당을 기존 50만NOK<sup>55)</sup>에서 85만 NOK<sup>56)</sup>로 35만NOK<sup>57)</sup> 인상함
- 부유세 기준금액 및 한도는 명목상으로 변경되지 않음
- 오슬로, 베르겐, 트론헤임, 스타방에르 등 주요 도시 이외 부동산에 대한 부유세 평가 목적의 상업용 부동산 할인율을 1%p 인상함
  - 농촌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계산 모델의 지역적 차이를 완화하고자 함

50) News IBFD, "Budget Bill for 2024 Promises Moderate Modifications With Redistributive Effect," 2023. 10. 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0-09\\_no\\_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0-09_no_3), 검색일자: 2023. 10. 24.

51) News IBFD, "Budget Bill for 2024 Proposes to Abolish High-Price Contribution for Wind Power, Hydropower; No Change to Wealth Tax," 2023. 10. 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0-09\\_no\\_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0-09_no_2), 검색일자: 2023. 10. 23.

52)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160만원임

53) 2023년 1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69만원임

54)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81만원임

55)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07만원임

56)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82만원임

57)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75만원임

- 비과세 관행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명문화함
  - 명문화된 사례는 UCITS펀드(국가 간 교차 판매 펀드)인 투자 펀드의 국경 간 합병, 하나 이상의 저축은행 재단이 설립된 저축은행의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청구의 전환입
  -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재무부에 비과세를 신청해야 했으나, 비과세 사례가 명문화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의 조세 불확실성이 제거됨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공제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

- 순록 사육에 사용되는 오프로드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등록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문 및 전자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로 텍스트와 사진으로 구성된 전자신문을 포함하도록 제안됨
- 수소 기반 전기 자동차의 판매 및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함
- 사전 등록된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리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 (소비세) CO2 세금 등 소비세에 관한 사항이 개

정될 예정임

- 온실산업용 천연가스 및 LPG에 대한 CO2 세금을 일반수준의 8%에서 15%로 7%p 인상함
-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운송에 대한 CO2 조세감면이 도입됨
- 노르웨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ETS 대상 광유 사용에 대한 CO2 조세감면액을 인상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세 관련 조세 혜택을 폐지함
- 해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사용되는 휘발유에 대한 도로 사용세 면제를 폐지함
- 노르웨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전기세 감면율이 인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 덴마크 의회는 2023년 10월 10일,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률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시함<sup>58)</sup>
  - 법안은 지침 및 OECD 모델 규정을 준수하여 소득산입규칙(IIR), 비용공제부인규칙(UTPR), 적격 내국 최저추가세(QDMTT)를 도입함

58) News IBFD, "Danish Parliament Completes First Reading of Pillar Two Legislative Proposal," 2023.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2\\_d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2_dk_1.html), 검색일자: 2023. 10. 23.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러한 조항을 통해 외국 그룹의 덴마크 그룹 기업은 실효세율이 15%가 적용되지 않는 덴마크 내 수익에 대해 15%의 실효세율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세액을 부과받게 됨
- 덴마크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2억 5,500만유로<sup>59)</sup>(19억덴마크크로네)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해당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덴마크 의회는 연말까지 해당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핀란드

###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

- 핀란드 재무부는 2023년 10월 9일, 2024년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함<sup>60)</sup>
  - 핀란드 재무부는 2023년 8월 28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은 9월에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린 바 있음
- 세법개정안은 기존 예정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액 인상안의 세부사항 등을 발표함

<표 3> 핀란드 2024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유로, %)

소득구간	구분	2023년	2024년	변화
1	과세소득	0 ~ 19,900	0 ~ 20,500	3%
	세율	12.64	12.64	-
2	소득기준	19,900 ~ 29,700	20,500 ~ 30,500	2.7%
	세율	19	19	-
3	소득기준	29,700 ~ 49,000	20,500 ~ 50,400	2.86%
	세율	30.25	30.25	-
4	소득기준	49,000 ~ 85,800	50,400 ~ 88,200	2.8%
	세율	34	34	-
5	소득기준	85,800 초과	88,200 ~ 150,000	2.8%
	세율	44	42	42% 구간 신설
6	소득기준	-	150,000 초과	신설
	세율	-	44	-

출처: IBFD,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3 October 2023) - 1.9.1. Income and capital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s\\_1.3.2.%23gthb\\_fi\\_s\\_1.9.](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s_1.3.2.%23gthb_fi_s_1.9.), 검색일자: 2023. 11. 21.

59)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51억원임

60) News IBFD, "Government Presents 2024 Budget to Parliament," 2023. 10.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9\\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9_fi_1.html), 검색일자: 2023. 10. 23.

- 개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기준액을 28~3% 인상하고,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신설함  
- 소득구간별로 기본소득세가 부과되고, 최저 소득기준 초과액에 대해서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추가 적용됨
- 근로소득공제(työtulovähennys) 최대금액을 기존 2,030유로<sup>61)</sup>에서 2,140유로<sup>62)</sup>로 110유로<sup>63)</sup> 인상함  
- 다만, 순 근로소득이 약 16만 8,400유로<sup>64)</sup>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노인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에 대한 추가인상안이 수정되어, 60~64세의 경우 인상안이 폐지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1,200유로<sup>65)</sup>로 두 배 인상됨
- 통근비용의 공제 하한액을 기존 700유로<sup>66)</sup>에서 900유로<sup>67)</sup>로 200유로<sup>68)</sup> 인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 양도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 핀란드 정부는 2023년 10월 12일, 양도세 감면

법안(HE 64/2023)을 의회에 제출함<sup>69)</sup>

- 법안 개정을 통해 양도세가 이사 성향(muuttoalttiutta)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자산의 세율 차이와 주택 형태별 세제 차이로 인한 비중립성을 줄이고자 함<sup>70)</sup>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비과세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2023년 10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인화된 세율이 소급 적용됨
- 양도세율 변경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비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음
  - 부동산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4%에서 3%로 1%p 인하함
  - 부동산 증권 양도세율을 기존 2%에서 1.5%로 0.5%p 인하함  
- 핀란드 주택 및 부동산 회사 또는 실제로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회사(예: 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함
  - 주택 및 부동산 회사 이외의 주식 및 기타 유

61)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1만원임

62)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6만원임

63)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만원임

64)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4,094만원임

65)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2만원임

66)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1만원임

67)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9만원임

68)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원임

69) News IBFD, "Government Proposes Reducing Transfer Tax, Abolishing Exemption for First-Time Home Buyers," 2023. 10.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fi_1.html), 검색일자: 2023. 10. 23.

70) 핀란드의회 보고서, "HE 64/2023," <https://finlex.fi/fi/esitykset/he/2023/20230064#idm46494958815904>, 검색일자: 2023. 10. 23.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가증권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1.6%에서 1.5%로 0.1%p 인하함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7.8%로 결정함

- 행사기간까지 미행사 옵션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과 관련된 이전 연도의 비용은 옵션이 만료되는 연도의 그룹 기업의 적격 이익 또는 손실에 추가됨
- 과세이연을 대체 손실보상이연으로 인정하는 일반 행정조치가 도입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네덜란드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법안 수정안 의회 제출]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16일,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EU 지침(2022/2533)을 이행하는 법안의 첫 번째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함<sup>71)</sup>

- EU 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적격 내국 최저추가세(QDMTT) 적용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QDMTT 적용을 선택하였으며 실질기반 소득제의 금액 결정 등 일반 사항은 EU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함
  -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QDMTT에 대한 적격 세이프하버 규정 및 과세미달 이익에 대한 추가세액에 대한 임시 세이프하버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실질기반 소득제의 금액 결정 시 적용되는 비율을 종업원 인건비는 9.8%, 유형자산은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법안 개정]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16일, 1968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외에 관한 법령(Besluit uitsluiting aftrek omzetbelasting 1968) 개정안을 발표함<sup>72)</sup>

-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상 혜택, 업무상 선물(relatiegeschenken) 또는 기타 선물에 대한 개인 기부금은 더 이상 부가혜택 및 업무상 선물에 적용되는 227유로<sup>73)</sup>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과세대상자는 종업원에게 주택, 스포츠, 휴식 또는 개인 교통수단 제공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종업원이 과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종업원에 대한 혜택에 해당함
- 과세대상자는 총혜택이 종업원 1인당 연간

71) News IBFD, "State Secretary for Finance Submits Amendment to Bill Implementing Minimum Taxation Directive to Parliament," 2023. 10.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nl\\_4.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nl_4.html), 검색일자: 2023. 10. 23.

72) News IBFD, "Netherlands Amends Decree on Non-Deductible VAT," 2023. 10.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nl\\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16_nl_3.html), 검색일자: 2023. 10. 23.

73) 2023년 10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227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혜택에 부과된 매입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혜택이 기준 금액보다 더 큰 경우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혜택에 인화된 부가가치세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감소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중국

### [가격통제형 사회주택 취득·건설 관련 세금 면제·감면 규정 발표]

-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 28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저·중소득층을 위한 저가형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건설·취득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면제 및 감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공고함<sup>74)</sup>
  - 가격통제형 사회주택(Price-Controlled Social Residential Properties)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세 면제, 주택 구매자의 인지세 면제, 상업용 주택이나 기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저가 주택 건설 시에도 건축면적 비율 조건에 따른 도시 토지사용세 및 인지세 면제 등 건설업 및 관련자와 구매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sup>75)</sup>

- 세금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저가형 주택 프로젝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담당 부서는 주택 관리 단위 등의 기타 정보를 각 재정·세무 부서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정해진 규정·서식에 맞는 세금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효림 세무사>



## 일본

###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관련 규정 해석 지침 발행]

- 일본 국세청은 9월 21일 BEPS 필라 2에서 규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해석 지침을 발행함<sup>76), 77)</sup>
  - 해당 해석 지침은 2023년 8월 10일 확정된 장관급 규정에 대한 내용임
- 해석 지침은 OECD 발간 출판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일본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와

74) IBFD, "China Grants Reliefs for Affordable Housing," 2023. 10.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2\\_cn\\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2_cn_3.html), 검색일자: 2023. 10. 16.

75) 国家税务总局北京市税务局, 「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和城乡建设部关于保障性住房有关税费政策的公告」, 2023. 10. 13., <http://beijing.chinatax.gov.cn/bjswj/c104646/202310/1885a6387e93441c9eae7270de97c4ef.shtml>, 검색일자: 2023. 10. 16.

76) IBFD, "Japan Publishes Interpretive Guidance on Global Minimum Tax Laws and Regulations," 2023. 10.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6\\_jp\\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0-06_jp_1.html), 검색일자: 2023. 10. 23.

77) 国税庁, 「法人税基本通達の主要改正項目について」,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hojin/kaisei/2309xx/index.htm>, 검색일자: 2023. 10. 23.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관련 규정의 견해를 설명함

- 예컨대 「법인세법」 기본통달 18-1-14는 법령상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동지배회사 등의 판정에 있어 지분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판정은 최종 모회사 재무회계기준에 따라서 판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해석 지침을 통해 최종 모회사 재무회계기준에서 ‘지분법에 관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 지분법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시로 제시함
- 그 밖에 기본통달 18-1-66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목을, 기본통달 18-1-76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외국 회사법에 따라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를 외국 자회사에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함

<자료 수집 및 정리 : 권순오 세무사>



인도

### [석유 제품 관련 횡재세 개정]

- 2023년 9월 15일, 원유 생산에 대한 횡재세를 인

상하고 디젤 수출에 대한 세금을 소폭 인하함<sup>78)</sup>

- 원유 생산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SAED), 즉 횡재세를 톤당 6,700INR<sup>79)</sup>에서 톤당 1만 INR<sup>80)</sup>로 인상함
- 항공 터빈 연료(ATF) 수출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를 리터당 3.50INR<sup>81)</sup>(인하 전 4INR)로, 디젤 수출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를 리터당 5.50INR<sup>82)</sup>(인하 전 6INR)로 인하함

- 해당 개정은 2023년 9월 16일부터 발효됨

<자료 수집 및 정리 : 권순오 세무사>



OECD

### [필라1 Amount A 이행을 위한 다자조약 현재안 발표]

- OECD는 2023년 10월 11일, ‘필라1 Amount A 이행을 위한 다자조약(Multi-lateral Convention, MLC)’ 현재안을 발표함<sup>83)</sup>

- MLC 현재안은 조약문과 설명지침으로 구성됨 - 필라1 Amount A와 관련하여 OECD/G20

78) IBFD, “India Increases Windfall Tax on Crude Oil Production, Marginally Reduces Tax on Diesel Export,” 2023. 9.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1\\_in\\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9-21_in_2.html), 검색일자: 2023. 10. 23.

79) 2023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만 8,674원임

80) 2023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 2,200원임

81) 2023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77원임

82) 2023년 10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9.21원임

83) OECD, “OECD/G20 Inclusive Framework releases new multilateral convention to address tax challenges of globalisation and digitalisation,” [https://www.oecd.org/newsroom/inclusive-framework-releases-new-multilateral-convention-to-address-tax-challenges-of-globalisation-and-digitalisation.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12-10-23&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https://www.oecd.org/newsroom/inclusive-framework-releases-new-multilateral-convention-to-address-tax-challenges-of-globalisation-and-digitalisation.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12-10-23&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3. 10. 13.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회원국의 현 시점에서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정 항목에 대한 일부 국가의 이견은 각주로 표시함

- 필라1 Amount A는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관할국에 재배분함
- 국제조세 체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향상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 및 관련 유사 조치를 폐지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 [필라2 STTR 다자협약 발표 및 최저한세 이행 편람 발간]

- OECD는 2023년 10월 3일,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MLI)을 발표함<sup>84)</sup>
  - 필라2 STTR을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관할국은 기존 양자조약에 이를 도입하는 것이 허용되며, 기존 양자조약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MLI에 의해서도 가능함
  - IF 회원국 중 7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9%

미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IF 회원국에 대해 그 조약에 STTR 도입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STTR MLI는 조약문과 설명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0월 서명 절차가 시작됨<sup>85)</sup>
-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GloBE 규칙에 더하여 필라2의 핵심적 요소로서 조약에 기반하는 규칙임
- 특정 그룹 내 지급에 9% 미만의 명목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상 이익이 발생한 원천지국(개발도상국에 한함)이 기존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지급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OECD는 2023년 10월 11일, “최저한세 이행 편람(필라2)”을 발간함<sup>86)</sup>
  - 편람은 필라2 GloBE 모델규정의 구조와 주요 조문(제1조부터 제5조)을 간략하게 안내함
  - 필라2 이행과 관련된 고려사항으로 각 정부가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결정 및 이행 단계에 대해 설명함
  - 필라2의 이행은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에 따라야 하고 현재 상당수의 관할국은 GloBE 규칙을 국내법으로 입법하

84) OECD,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s multilateral convention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Subject to Tax Rule,” <https://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community-adopts-multilateral-convention-to-facilitate-implementation-of-the-global-minimum-tax-subject-to-tax-rule.html>, 검색일자: 2023. 10. 31.

85)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lar Two Subject to Tax Rule,” <https://www.oecd.org/tax/beps/multilateral-convention-to-facilitate-the-implementation-of-the-pillar-two-subject-to-tax-rule.html>, 검색일자: 2023. 10. 31.

86) OECD, “Minimum Tax Implementation Handbook(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minimum-tax-implementation-handbook-pillar-two.html>, 검색일자: 2023. 10. 13.

고 있음

- 결정 단계에서는 관할국이 GloBE 규칙의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관할국 내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 금액 및 15% 미만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이익 금액 등을 평가한 후 개정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내국 최저추가세(QDMTT)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음
- 이행 단계에서는 입법 기술상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일관되고 조화로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하며, 관할국은 합의된 행정지침(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세이프하버 및 행정 관련 사항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임위크(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 BEFIT) 이니셔티브의 제안을 발표함<sup>87), 88)</sup>

- BEFIT은 기업의 각 회원국별 모든 수익을 통합한 후 각 회원국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배분방식은 기업의 각 회원국 내 매출, 자산 및 인력 현황 등을 기반으로 사전에 준비된 공식에 따라 각 회원국에 과세대상 수익을 분배하도록 함
  - 다만 BEFIT에 최소법인세 또는 EU 단일 법인세율 등은 도입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분배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자체적인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함
- BEFIT은 과거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 이상 연간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 이상이며, 최종모기업이 소유권의 최소 75%를 보유하는 기업 그룹에 대해 적용됨
- BEFIT은 EU의 법인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며, 회원국과 다국적기업 간 이른바 ‘세제혜택 거래(sweetheart deals)’를 방지하고, 수익이 창출된 회원국에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EU는 BEFIT의 도입으로 기업이 EU에서 납



EU

###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프레임워크(BEFIT) 이니셔티브 제안 발표]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9월 12일,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프레

87) IBFD,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BEFIT Proposal,” 2023. 9.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13\\_e2\\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9-13_e2_1), 검색일자: 2023. 10. 4.

88) Bloomberg Tax,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Directive on Transfer Pricing, BEFIT Framework to Simplify Cross-Border Taxation,” 2023. 9. 1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7B3KG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ZgvcmlvZDx0cy82YjA5MTUwOTc3YjU1M2Y5OTgyYWlwZDhiNDUzM2Q0NyJdXQ-1fb0f21b045a80dc6c1d23a2d9a53f503a1f6775&criteria\\_id=6b09150977b553f9982ab0d8b4533d47&search32=bHwzjig-O99zyI05WMwWdQ%3D%3DQ-1PiJ8Uw1G61CvzjhYXbc\\_edHB2ayFBhHFSROHiU6iaZmEewSwnOMKCKfM4NzG6u-fZUJtKa5NTubs3DCYazcl0vw\\_Yx9TH4Np103GEkM%3D](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7B3KG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ZgvcmlvZDx0cy82YjA5MTUwOTc3YjU1M2Y5OTgyYWlwZDhiNDUzM2Q0NyJdXQ-1fb0f21b045a80dc6c1d23a2d9a53f503a1f6775&criteria_id=6b09150977b553f9982ab0d8b4533d47&search32=bHwzjig-O99zyI05WMwWdQ%3D%3DQ-1PiJ8Uw1G61CvzjhYXbc_edHB2ayFBhHFSROHiU6iaZmEewSwnOMKCKfM4NzG6u-fZUJtKa5NTubs3DCYazcl0vw_Yx9TH4Np103GEkM%3D), 검색일자: 2023. 10. 10.

세협력비용을 최대 65%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sup>89)</sup>

- BEFIT 이니셔티브가 유럽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각 회원국은 BEFIT을 2028년 1월 1일 까지 국내법에 도입하고 2028년 7월 1일부터 BEFIT 조항을 적용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89)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new proposals to simplify tax rules and reduce compliance costs for cross-border businesses," 2023. 9. 1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405](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405), 검색일자: 2023. 10. 10.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EU 의회, EU 장기예산 개정 논의(2023. 10. 3.)<sup>1)</sup>
  - (배경) 지난 5월 유럽의회는 EU 장기 예산인 2021~2027년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sup>2)</sup> 개정을 촉구하였고, 이에 6월 20일 EU 집행위원회는 MFF 수정안을 발표
    - 2021~2027년 동안 1조 743억유로 규모(2018년 가격기준)의 EU 장기예산이 편성되어 시행 중이며, 7개년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에 중간 개정을 검토함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등의 여러 위기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원이 고갈되었으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EU 예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요 우선순위 프로그램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내용) 유럽의회는 EU 예산의 미래 보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EU의 전

략적 자율성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4~2027년 동안 758억유로 추가 투입

-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658억유로 외에 2024~2027년 동안 추가로 100억유로를 승인

- (집행위 제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억 유로, 이민 관리와 주요 제3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150억유로, 핵심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sup>3)</sup> 창설 등
- (의회 추가 의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인도적 지원에 10억 유로,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 지원에 10억 유로,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에 30억 유로, 위기 대응 및 유연성 제공을 위해 50억유로 추가 예산 필요
- (향후 일정) EU 장기예산 개정은 2024년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의회의 3주간 입장 조정 과정을 거쳐 의회 동의 후 발효될 예정

■ EU 통계청, 2023년 2분기 일반정부 재정통계 발

1) EU 의회, "Parliament argues for a top-up to multi-annual budget for crisis response," 2023. 10. 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929IPR06130/parliament-argues-for-a-top-up-to-multi-annual-budget-for-crisis-response>, 검색일자: 2023. 10. 17.; EU 의회, "Revision of EU long-term budget: why Parliament wants improvements," 2023. 10. 4.,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headlines/eu-affairs/20230928STO06014/revision-of-eu-long-term-budget-why-parliament-wants-improvements>, 검색일자: 2023. 10. 17.

2)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는 EU의 다양한 우선순위에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연간 예산을 규율한 7개년 재정계획으로, 각 연도 예산은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0 참고

3) InvestEU, Innovation Fund, Horizon Europe, European Defence Fund,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EU4Health, Digital Europe and cohesion funds 등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EU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

&lt;표 1&gt; 2023년 2분기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국가	계절조정 재정수지					채무비율		
	2022년			2023년(잠정치)		2022년	2023년(잠정치)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Euro area 20	-2.7	-4.0	-5.1	-3.3	-3.3	93.5	90.7	90.3
EU	-2.3	-3.7	-4.8	-3.1	-3.2	85.9	83.4	83.1
벨기에	-3.8	-4.3	-4.0	-4.3	-4.1	107.5	106.4	106.0
불가리아	-3.5	-5.9	1.5	-3.5	-3.8	21.3	22.1	21.5
체코	-2.9	-3.9	-3.5	-3.7	-3.3	43.5	44.5	44.3
덴마크	3.5	2.8	3.4	3.5	2.8	31.5	29.5	30.2
독일	-1.4	-2.2	-5.8	-2.9	-2.6	67.4	65.7	64.6
에스토니아	1.2	-1.4	-2.6	-2.3	-0.7	16.9	7.2	18.5
아일랜드	1.8	2.3	1.4	2.8	2.4	50.5	43.6	43.1
그리스	:	:	:	:	:	83.2	168.6	166.5
스페인	-4.6	-4.9	-5.9	-2.2	-4.4	114.5	111.2	111.2
프랑스	-3.7	-4.8	-5.8	-4.7	-4.6	113.3	112.4	111.9
크로아티아	0.4	0.2	-0.6	-0.6	-0.5	72.4	69.1	66.5
이탈리아	:	:	:	:	:	146.4	140.9	142.4
사이프러스	:	:	:	:	:	93.4	83.1	85.3
라트비아	-4.6	-4.1	-5.3	-2.7	0.1	42.0	43.0	39.5
리투아니아	0.9	0.4	-5.4	-0.9	-0.7	39.3	38.1	38.1
룩셈부르크	0.2	-0.7	-1.8	-0.2	-0.4	25.4	28.4	28.2
헝가리	-4.9	-7.0	-8.8	-10.2	-6.6	76.7	75.4	75.2
몰타	-3.2	-5.1	-7.1	-2.5	-3.1	52.7	52.4	50.7
네덜란드	0.9	-1.0	0.1	-0.2	0.2	50.0	48.3	46.9
오스트리아	0.0	-5.7	-4.9	-3.0	-2.0	82.7	80.3	78.6
폴란드	-1.1	-3.9	-8.2	-2.1	-4.1	51.3	48.1	48.4
포르투갈	2.7	1.4	-5.5	2.1	2.3	121.9	112.4	110.1
루마니아	-4.1	-7.4	-6.3	-5.9	-6.3	48.3	49.0	48.2
슬로베니아	-3.3	-3.6	-2.8	-3.1	-2.5	75.0	72.0	70.5
슬로바키아	-1.6	-1.7	-2.9	-4.1	-4.8	59.2	58.0	59.6
핀란드	-0.4	-0.6	-0.5	-2.3	-3.8	72.5	73.3	74.6
스웨덴	2.5	0.9	-0.2	-0.3	-1.1	33.6	31.8	30.7

주: 1) 계절조정 재정수지 “:” 기호는 비공개 혹은 유로통계청 추정치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at 3.2% of GDP in the EU,” 2023. 10. 23., p. 4,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724164/2-23102023-CP-EN.pdf/77e6dfb1-de02-c0b6-aa01-7f6617c12daa>, 검색일자: 2023. 10. 24.;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0.3% of GDP in euro area,” 2023. 10. 23., p. 5,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725721/2-23102023-BP-EN.pdf/94083c00-c5e1-fe02-a30f-6f4122e9d744>, 검색일자: 2023. 10. 24.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표(2023. 10. 23.)<sup>4)</sup>

- (재정수지) 2023년 2분기 유로지역(20개국)<sup>5)</sup>의 계절조정 재정수지<sup>6)</sup>는 전 분기와 동일하게 GDP 대비 -3.3%로 안정적으로 유지
  - EU 27개국의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전 분기 -3.1%에 비해 0.1%p 악화된 -3.2%
  -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2분기에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조치가 재정수지에 계속해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다수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기록
- (채무) 2023년 2분기 말 유로지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90.3%로 전 분기 90.7%에서 0.4%p 감소하였고, EU 27개국은 전 분기 83.4%에서 0.3%p 감소한 83.1%
  - 유로지역과 EU 둘 다 채무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채무보다 GDP 증가가 컸기 때문
  - GDP 대비 채무 비율은 그리스(166.5%), 이탈리아(142.4%), 프랑스(111.9%), 스페인(111.2%), 포르투갈(110.1%), 벨기에(106.0%) 순으로 높았음
  - 채무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18.5%), 불가리아(21.5%), 룩셈부르크(28.2%), 덴마크(30.2%), 스웨덴(30.7%) 순으로 낮은 채무 비율을 기록

- 2022년 2월 전년 동 분기와 비교한 GDP 대비 채무 비율은 6개 회원국에서 채무 비율이 증가하였고, 21개국은 감소

- (증가) 룩셈부르크(+2.9%p), 핀란드(+2.1%p), 에스토니아(+1.6%p), 체코(+0.8%p), 슬로바키아(+0.4%p), 불가리아(+0.2%p) 순으로 채무 비율이 많이 증가
- (감소) 그리스(-16.6%p), 포르투갈(-11.8%p), 사이프러스(-8.1%p), 아일랜드(-7.4%p), 크로아티아(-6.0%p), 슬로베니아(-4.5%p), 오스트리아 및 이탈리아(모두 -4.0%p), 스페인(-3.3%p), 네덜란드(-3.1%p) 순으로 많이 감소

### ■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sup>7)</sup> 2022 발표(2023. 10. 25.)

※ 동 보고서는 EU 공공 재정에 관한 주요 재정정책 동향 및 연구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음. 다음 내용은 제1장 EU의 경제·재정 상황 및 지난 팬데믹 이후 재정정책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 정리함<sup>8)</sup>

4)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at 3.2% of GDP in the EU," 2023. 10. 23.,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724164/2-23102023-CP-EN.pdf/77e6dfb1-de02-c0b6-aa01-7f6617c12daa>, 검색일자: 2023. 10. 24.;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0.3% of GDP in euro area," 2023. 10. 23.,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725721/2-23102023-BP-EN.pdf/94083c00-c5e1-fe02-a30f-6f4122e9d744>, 검색일자: 2023. 10. 24.

5) 유로화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로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EU 27개국은 유로지역 20개국에서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이 포함)

6) 발생주의에 따른 누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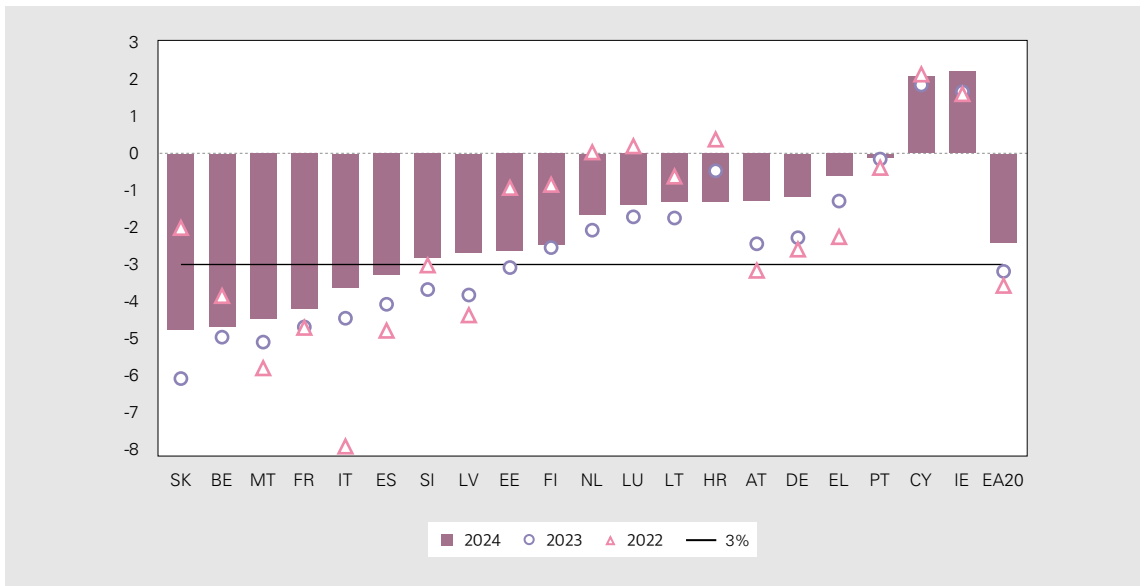
7)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8)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는 제1~3장으로 이뤄져 있음. 제2장은 EU 재정 감축 동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인플레이션이 공공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으로 구성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혹은 향후 게시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홈페이지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을 참고 바람(<https://www.kipf.re.kr/cfa/index.do>)

- 유로지역 경제는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견뎌내고 있음
  - (경제성장률) 2023년 봄 전망<sup>9)</sup>에 따르면 유로지역 실질경제성장률은 2022년에 3.5%로 성장 이후 2023년에 1.1%로 현저히 둔화될 전망이다이며, 2024년에는 1.6%로 소폭 상승 전망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2년 8.4%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5.8%, 2024년 2.8%로 감소 전망이며, 근원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지속될 전망
- 지난 경제 위기에 재정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로지역에 기록적으로 높은 채무를 남김
  - (재정수지) 유로지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에너지 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2022년 3.6%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2%, 2.4%로 개선 전망
  - (재정 기조) 2020~2022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2023년에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되어 GDP 대비 약 0.5% 수준의 긴축 재정이 전망되며, 2024년에는 모든 회원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정부 채무) 유로지역의 GDP 대비 채무는 2020년 사상 최고치(99.1%)에 도달한 후 2022년 93.1%로 감소했으며, 2024년에

[그림 1]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2022~2024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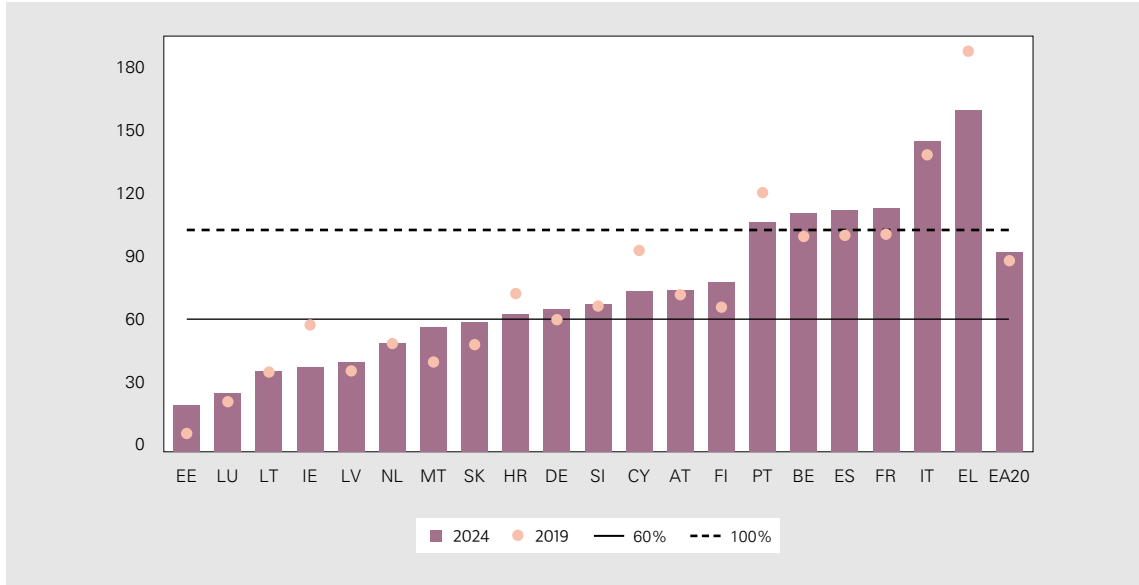


주: SK 슬로바키아, BE 벨기에, MT 몰타, FR 프랑스, IT 이탈리아, ES 스페인, SI 슬로베니아, LV 라트비아, EE 에스토니아, FI 핀란드, NL 네덜란드, LU 룩셈부르크, LT 리투아니아, HR 크로아티아, AT 오스트리아, DE 독일, EL 그리스, PT 포르투갈, CY 키프로스, IE 아일랜드, EA20 유로지역 20개국  
출처: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 2023, Graph I.1.3

9)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5월호 참조

[그림 2]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채무(2019년, 2024년 비교)

(단위: GDP 대비 %)



주: [그림 1] 주 참조

출처: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 2023, Graph I.1.6

89.9%까지 하락할 전망

- (정책 대응 비용)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약 GDP 대비 3%에 달하는 전례 없는 지원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에너지 가격 대응으로 인한 유로지역 순 예산비용은 2022년에 약 1.3%, 2023년에 1.2% 수준으로 추산됨

- 한편, 고령화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twin transition) 등 장기로 소요되는 지출이 공공 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 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2026년까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가 경제회복기금(NGEU)<sup>10)</sup>과 ‘REPowerEU’<sup>11)</sup>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EU의 근로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의료, 장기요양 지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EU의 총 고령화비용(연금, 의료, 장기요양 포함)은 2019년에 GDP 대비 24.6% 규모이며, 2070년까지 1.7%p 증가한 26.3%로 전망
- S2 지표<sup>12)</sup>로 평가한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에서 7개 회원국(벨기에, 룩셈부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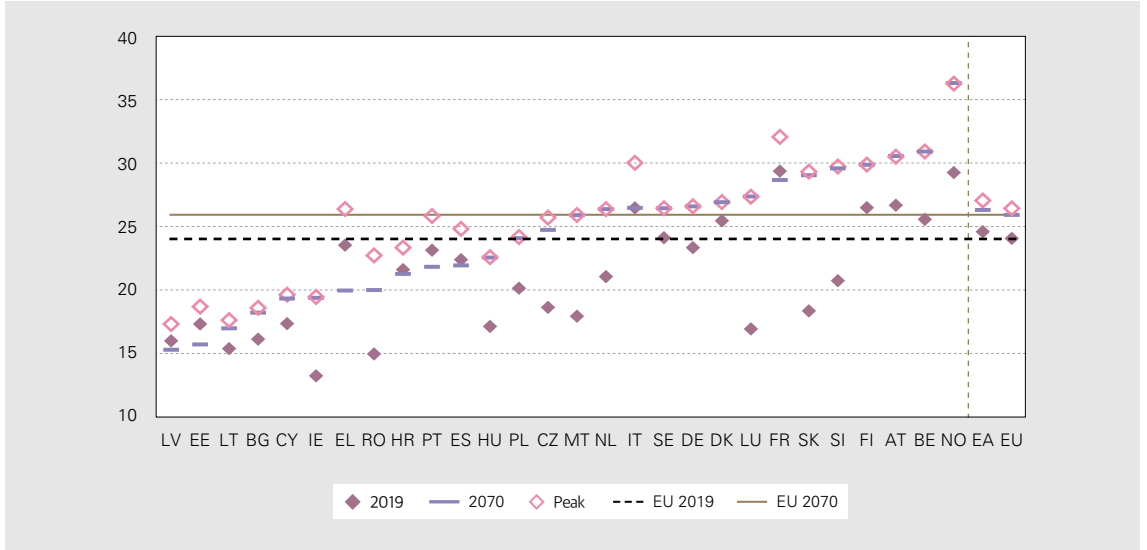
10)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500억유로를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회원국을 지원

11) 2022년 5월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EU 에너지 공급의 독립성 및 안보를 높여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REPowerEU’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총 2,100억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12) S2지표는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의 주요 요소로 정부 예산 제약의 무한 기간을 설정하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 규모를 측정

[그림 3] EU의 총 고령화 비용

(단위: GDP 대비 %)



주: 1. EU 회원국별로 상당한 다양성이 있으나, 고령화 비용의 정점(◇)은 전망 기간의 중간에 발생함. 이는 연금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국가의 경우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2070년 이전에 정점에 이르기 때문

2. LV 라트비아, EE 에스토니아, LT 리투아니아, BG 불가리아, CY 키프로스, IE 아일랜드, EL 그리스, RO 루마니아, HR 크로아티아, PT 포르투갈, ES 스페인, HU 헝가리, PL 폴란드, CZ 체코, MT 몰타, NL 네덜란드, IT 이탈리아, SE 스웨덴, DE 독일, DK 덴마크, LU 룩셈부르크, FR 프랑스, SK 슬로바키아, SI 슬로베니아, FI 핀란드,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NO 노르웨이, EA 유로지역, EU 유럽연합

출처: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 2023*, Graph I.2.5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은 고위험으로 평가되었으며, 12개 회원국<sup>13)</sup>은 중위험 국가로 평가됨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look) 발표(2023. 10. 10.)<sup>14), 15)</sup>

● (동향)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증가하는 지리경제학적 분열로 인해 세계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3.0%로 둔화

-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위기와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전례 없는 긴축 통화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함에 따라 회복력이 감소

• 경제 재개 및 반등, 작년 대비 감소한 물가



IMF

■ IMF, 세계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

13) 불가리아, 체코,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3/October/English/text.ashx>

15) IMF Blog, "Resilient Global Economy Still Limping Along, With Growing Divergences," 2023. 10. 10.,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0/10/resilient-global-economy-still-limping-along-with-growing-divergences>, 검색일자: 2023. 10. 16.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활동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
- (전망) 2024년 세계성장률은 7월 전망보다 0.1%p 하락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인 전망치는 3.1%로 과거(2000~2019년) 평균인 3.8%를 하회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제반등은 예상보다 강하지만 유로존의 성장은 예상보다 약한 가운데 2022년 2.6%에서 2023년 1.5%, 2024년 1.4%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독일과 같은 제조업 국가에 비해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서비스 중심 경제가 크게 회복
    -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2022년 4.1%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4.0%로 둔화될 전망
    - 부동산 위기로 인한 역풍이 커지고 신뢰도가 약화되는 중국의 성장률을 반영하여 0.1%p 하향 조정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2%로 7월 전망 대비 각각 0.0%p, 0.2%p 하향 조정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2023년 5.9%, 2024년 4.8%, 2025년 3.6~3.9%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점진적이기는 하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위험) 심각한 금융불안은 지난 4월 이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하방위험이 우세
  - 스위스와 미국의 부채한도(debt ceiling)에 대한 억제조치로 금융불안은 완화되었으나, 중국의 부동산 부문 위기는 글로벌 파급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세계 경제에 주요한 위협이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구조조정, 금융안정성 유지, 공공재정의 부담해결 등이 필요
    -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광물을 포함한 상품가격의 지역 간 격차 역시 심화
    - 6월 이후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일부 비회원국) 국가의 공급 감소로 인해 유가는 약 25% 상승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식량 가격은 계속 상승
    -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물가 기대치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
    - 부채 증가,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성장 둔화, 정부의 재정수요 증가와 가용 재정 자원 간 불일치로 많은 국가에서 재정 여력이 약화
    - 미국 달러 가치의 증가는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을 촉발하며 차입 비용과 부채 위험을 증가시킴
  - (정책권고)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을 지원하고 재정여력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와 지리경제학적 분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조치가 필요
    - 긴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물가는 계속해

&lt;표 2&gt; 2023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단위: %, %p)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022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sup>1)</sup>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세계경제	3.5	3.0	2.9	0.0	-0.1	0.2	-0.1
선진국	2.6	1.5	1.4	0.0	0.0	0.2	0.0
미국	2.1	2.1	1.5	0.3	0.5	0.5	0.4
유로지역	3.3	0.7	1.2	-0.2	-0.3	-0.1	-0.2
독일	1.8	-0.5	0.9	-0.2	-0.4	-0.4	-0.2
프랑스	2.5	1.0	1.3	0.2	0.0	0.3	0.0
이탈리아 <sup>2)</sup>	3.7	0.7	0.7	-0.4	-0.2	0.0	-0.1
스페인	5.8	2.5	1.7	0.0	-0.3	1.0	-0.3
일본	1.0	2.0	1.0	0.6	0.0	0.7	0.0
영국 <sup>2)</sup>	4.1	0.5	0.6	0.1	-0.4	0.8	-0.4
캐나다	3.4	1.3	1.6	-0.4	0.2	-0.2	0.1
기타선진국 <sup>3)</sup>	2.6	1.8	2.2	-0.2	-0.1	0.0	0.0
한국	2.6	1.4	2.2	0.0	-0.2	-0.1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1	4.0	4.0	0.0	-0.1	0.1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4.5	5.2	4.8	-0.1	-0.2	-0.1	-0.3
중국	3.0	5.0	4.2	-0.2	-0.3	-0.2	-0.3
인도 <sup>4)</sup>	7.2	6.3	6.3	0.2	0.0	0.4	0.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0.8	2.4	2.2	0.6	0.0	1.2	-0.3
러시아	-2.1	2.2	1.1	0.7	-0.2	1.5	-0.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4.1	2.3	2.3	0.4	0.1	0.7	0.1
유럽연합	3.6	0.7	1.5	-0.3	-0.2	0.0	-0.1
아세안-5 <sup>5)</sup>	5.5	4.2	4.5	-0.4	0.0	-0.3	-0.1
저소득 개도국	5.2	4.0	5.1	-0.5	-0.1	-0.7	-0.3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5.1	0.9	3.5	-1.1	-0.2	-1.5	0.0
수입							
선진국	6.7	0.1	3.0	-1.8	-1.1	-1.7	0.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3.2	1.7	4.4	-0.2	-0.5	-1.6	-0.7
수출							
선진국	5.3	1.8	3.1	-1.0	-0.1	-1.2	0.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1	-0.1	4.2	-1.3	0.1	-1.7	-0.1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sup>6)</sup>	39.2	-16.5	-0.7	4.2	5.5	7.6	5.1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7.9	-6.3	-2.7	-1.5	-1.3	-3.5	-1.7
소비자 물가 <sup>7)</sup>	8.7	6.9	5.8	0.1	0.6	-0.1	0.9
선진국 <sup>8)</sup>	7.3	4.6	3.0	-0.1	0.2	-0.1	0.4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sup>7)</sup>	9.8	8.5	7.8	0.2	1.0	-0.1	1.3

주: 1) 2023년 4월 WEO 업데이트 및 2023년 7월 WEO 예측에 대해 반올림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

2) 통계 부록의 “국가 정보” 섹션에서 이탈리아와 영국에 대한 국가별 정보 참조

3) G7과 유로존 지역 제외

4)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11년 이후의 GDP는 2011~2012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6) 영국 브렌트유(Brent), 두바이 파테유(Fateh), 미 서부 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22년 배럴당 평균가격은 96.36달러. 선물 시장 기준으로 가정한 가격은 2023년 80.49달러, 2024년 79.92달러

7) 베네수엘라 제외

8) 2023년과 2024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유로존 5.6%, 3.3%, 일본 3.2%, 2.9%, 미국 4.1%, 2.8%

1. 실질실효환율은 2023. 7. 25~2023. 8. 22. 기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순서는 경제규모 순으로 나열.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 조정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2023, p. 12 Table 1.1

한국 수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2023, Table A2 참조하여 재계산

서 하락하고 있으나 디스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단기 물가 기대치가 하락하여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 필요

- 모든 국가의 재정정책은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재정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이 필요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재정여력 축소, 부채 취약성 증가, 저성장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중장기전망이 취약하므로, 외부 부문, 거버넌스 등의 구조적 개혁 필요
- 세계 공동체는 공동의 목표 및 발전을 저해하는 지정학적 분열을 제한하고 다자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다자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경제성장 결과의 달성이 가능함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2023. 10. 12.)<sup>16), 17)</sup>

- (동향) 많은 국가들이 높은 부채 및 이자율, 저조한 성장 전망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로 거시경제적 위험도 동시에 증가
  - 모든 국가에서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책 목표 달성(Policy goals) -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 정치적 증세 한계선(Politi-

cal red lines) 사이의 트릴레마가 심각

-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차입비용과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과세에 대한 혐오로 인한 정치적 한계가 재정적 균형의 트릴레마로 작용
- (채무 및 재정적자) 총채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023~2028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매년 1%p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빠른 속도
  - 세계 채무상승 추세는 주요 경제(미국과 중국)에서의 빠른 채무 증가와 전 세계적 성장 둔화, 실질 이자율 상승, 차입비용 증가 등에 기인
    -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자 비용과 공공 채무에 대한 평가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즉각적인 재정압박은 없지만 추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는 공공투자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지출 조치에 크게 의존하는 배출 감소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온실가스 대량 배출 국가의 경우 공공채무를 GDP의 40~5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공공채무 증가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선진국은 2050년까지 GDP의 10~15%(GDP 대비 재정적자의 경

16)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3,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fiscal-monitor/2023/October/English/text.ashx>, 검색일자: 2023. 10. 23.

17) IMF, "Introductory Remarks to the Fiscal Monitor Press Conference," 2023. 10.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0/11/introductory-remarks-to-the-fiscal-monitor-press-conference-vitor-gaspar>, 검색일자: 2023. 10. 23.

&lt;표 3&gt;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재정수지	세계경제	-3.3	-5.2	-4.4	-4.2	-3.9	-3.8	-4.0
	G20 선진국	-4.0	-6.1	-5.3	-5.0	-4.7	-4.5	-4.7
	캐나다	-0.8	-0.7	-0.6	-0.5	-0.4	-0.3	-0.2
	유로지역	-3.6	-3.4	-2.7	-2.3	-2.1	-2.1	-2.1
	프랑스	-4.8	-4.9	-4.5	-4.0	-3.6	-3.5	-3.6
	독일	-2.5	-2.9	-1.7	-0.9	-0.6	-0.5	-0.5
	이탈리아	-8.0	-5.0	-4.0	-3.3	-2.7	-2.7	-2.5
	스페인 <sup>1)</sup>	-4.7	-3.9	-3.0	-3.4	-3.4	-3.4	-3.4
	일본	-6.9	-5.6	-3.7	-2.6	-2.7	-2.9	-3.3
	영국	-5.5	-4.5	-3.9	-3.7	-3.7	-3.5	-3.5
	미국 <sup>2)</sup>	-3.7	-8.2	-7.4	-7.4	-7.0	-6.7	-7.0
	한국	-1.6	-1.2	-0.9	-0.3	-0.2	0.0	0.0
	신흥시장국 및 중진국	-5.1	-5.6	-5.5	-5.3	-5.2	-5.2	-5.3
채무	세계경제 <sup>3)</sup>	112.3	112.1	112.7	113.8	114.6	115.3	116.3
	G20 선진국	122.6	122.7	124.0	125.5	126.6	127.6	129.0
	캐나다 <sup>4)</sup>	107.4	106.4	103.3	100.6	98.6	96.6	94.7
	유로지역	91.0	89.6	88.3	87.1	86.1	85.5	84.9
	프랑스	111.8	110.0	110.5	110.4	110.4	110.5	110.8
	독일	66.1	65.9	64.0	61.8	59.9	58.6	57.5
	이탈리아	144.4	143.7	143.2	142.8	141.9	141.0	140.1
	스페인	111.6	107.3	104.7	103.9	103.8	103.8	103.8
	일본	260.1	255.2	251.9	250.6	251.1	251.9	252.8
	영국	101.9	104.1	105.9	107.3	108.5	108.2	108.2
	미국 <sup>4)</sup>	121.3	123.3	126.9	130.3	132.9	135.1	137.5
	한국	53.8	54.3	55.6	56.5	57.1	57.5	57.9
	신흥시장국 및 중진국	65.3	68.3	70.1	72.3	74.3	76.2	78.1

주: 1) 금융지원 포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의 지출 및 재정수지는 미적립 연금 채무에 대한 귀속 이자 및 피고용자보수를 제외하도록 조정되며, 2008년 채택된 국민계정시스템(SNA)의 지출을 따르므로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3) 채무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채무는 불포함되며, EU에서 발행하여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용자는 회원국의 채무 데이터 및 지역별 집계 포함

4)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계정시스템을 채택한 국가(호주, 캐나다, 홍콩 SAR,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채무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채무를 제외하도록 조정

출처: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3, 2023, Table A1, A7, A9, A15 참조하여 재구성

우 연간 0.4%p씩) 증가하고 신흥시장국의 증가율 역시 2050년까지 GDP의 약 15%로 선진국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

- 탄소가격제의 시행 지연은 매년 연간 GDP의 0.8~2.0%의 추가 공공채무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높은 채무와 이자비용 상승 등에 직면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특히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 세계가 넷제로(net-zero) 달성 궤도에 진입하면 화석연료 생산국가의 원자재 수입도 급격히 감소하여 공공 재정 및 경제 다각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 (정책권고) 단일 정책만으로는 기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실용성, 정치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

- 탄소가격제와 더불어 저탄소 기술의 혁신 촉진, 시장 실패 및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수료 면제, 녹색 보조금, 규제 표준 등 다른 수단으로의 보완 필요

- 거시재정적 관점에서 정책은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지만 탄소가격제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탄소가격제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 공유는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약 50개 국가뿐만 아니라 현재 도입을 고려 중인 23개 이상의 국가에도움을 줌

- 또한 기업은 탈탄소화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부는 기업이 녹색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일부 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도 녹색전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인센티브는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녹색 보조금은 의도치 않은 왜곡과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을 야기하므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해야 함

- IMF의 연구결과는 저탄소 기술의 지식 이전 및 확산, 지출 효율화, 수익 증대, 민간 부문에서의 자금 조달과 외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IMF 역시 회복 및 지속가능성 기금(Resilience and Substantiality Trust)을 통해 장기 자금조달을 제공

- 정책과 기후 변화의 비선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기후 조치를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Asia and Pacific) 발표 (2023. 10. 18.)<sup>18)</sup>

- (동향)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9%에서 2023년 4.6%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성장은 중

18)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Oct 2023, 2023, 2023. 10. 18.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REO/APD/2023/October/English/text.ashx>, 검색일자: 2023. 10. 19.; IMF Blog, "Asia Continues to Fuel Global Growth, but Economic Momentum is Slowing," 2023. 10. 13.,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0/13/asia-continues-to-fuel-global-growth-but-economic-momentum-is-slowing>, 검색일자: 2023. 10. 19.

- 국의 경제 재개와 일본 및 인도의 상반기 반등에 기인하며, 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부문이 강세를 띠
-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치인 1.5%에서 1.4%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주기(semiconducto cycle) 지연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영향, 글로벌 수요 약화 등에 기인
  - 일본의 경제는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 기조 및 내수 증가로 2023년 성장률이 기존 1.4%에서 2.0%로 상향 조정
- (전망) 2024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 4월 4.4%에서 4.2%로 하향 조정
    - 2024년의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약화와 중국의 부동산 투자 둔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하향 조정됨
    - 중국의 경기호조는 부동산 부분의 침체 심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치보다 0.3%p 하향 조정된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4년 말까지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이내로 하락할 전망<sup>19)</sup>
  - (위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단기적으로 하방 위험에 치우쳐있으나, 제조업 및 설비 투자, 빠른 기술주기 전환, 디스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상방위험 역시 상존
    - 중국의 주택시장 위기 심화 및 장기화의 경우 교역 상대국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이나 역내의 급격한 금융 긴축은 레버리지가 높은 경제 및 부문의 성장을 저해
    - 글로벌 금융의 긴축 기조는 자본의 유출로 이어지고 아시아 환율에 압력을 가해 물가 상승 감소 과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원자재 가격의 추가 급등과 타이트한 노동 시장으로 인해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음
      - 아시아지역의 선진경제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함에 따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근원 물가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신흥시장 및 저소득국은 필수식량 가격의 변동성에 취약
    -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은 부채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근접해 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기온상승,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에 따른 비용이 상승
      -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증가는 취약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식량 안보의 위험까지 초래
  - (정책권고) 장기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국가들은 공공부채를 줄이면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고, 다자간 및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정학적 분열의 영향을 최소화
    -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 감독 강화,

19)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Oct 2023, 2023, p. 6, Figure 1.7. Inflation Outlook(Panel 1. Expected Inflation)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함께 필요

- 중기재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여력을 보호할 수 있으며,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블록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중기 전망에 매우 중요
-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낮추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개혁은 더 많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



OECD

### ■ OECD,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3. 10. 3.)<sup>20)</sup>

-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된 OECD 회원국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2023년 7월 5.9%에서 2023년 8월 6.4%로 상승
- OECD 회원국 14개국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9개 국가는 0.5%p 이상 증가, 그중 터키는 약 10p%의 급격한 상승을 기록함
-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11개 국가에서는 마이

<표 4>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품목	OECD 전체	4.0	9.6	9.2	8.8	7.7	7.4	6.5	5.7	5.9	6.4
	G7	3.5	7.1	6.7	6.4	5.4	5.4	4.6	3.9	3.9	4.2
	유럽연합(HICP)	2.9	9.2	10.0	9.9	8.3	8.1	7.1	6.4	6.1	5.9
	유로지역(HIPC)	2.6	8.4	8.7	8.5	6.9	7.0	6.1	5.5	5.3	5.2
	G20	4.3	8.6	8.4	8.0	6.9	6.5	5.9	5.5	5.8	6.3
	캐나다	3.4	6.8	5.9	5.2	4.3	4.4	3.4	2.8	3.3	4.0
	프랑스	1.6	5.2	6.0	6.3	5.7	5.9	5.1	4.5	4.3	4.9
	독일	3.1	6.9	8.7	8.7	7.4	7.2	6.1	6.4	6.2	6.1
	이탈리아	1.9	8.2	10.0	9.1	7.6	8.2	7.6	6.4	5.9	5.4
	일본	-0.3	2.5	4.3	3.3	3.2	7.5	3.2	3.3	3.3	3.2
	영국	2.5	7.9	8.8	9.2	8.9	7.8	7.9	7.3	6.4	6.3
미국	4.7	8.0	6.4	6.0	5.0	4.9	4.0	3.0	3.2	3.7	
식량	OECD 전체	3.5	13.2	15.2	14.9	14.0	12.1	11.0	10.1	9.2	8.8
	G7	2.5	10.4	12.3	11.9	10.9	9.7	8.6	7.7	6.6	5.8
	유럽연합(HICP)	1.6	11.9	18.0	19.1	19.2	16.4	15.0	13.8	12.5	10.7
	유로지역(HIPC)	1.3	10.5	16.3	17.3	17.5	15.0	13.7	12.5	11.6	10.2
에너지	OECD 전체	15.5	29.7	16.4	11.9	1.3	0.7	-5.1	-9.6	-7.5	-1.4
	G7	16.3	27.4	15.9	10.7	-0.2	-0.2	-6.1	-10.3	-8.0	-1.1
	유럽연합(HICP)	12.6	35.2	20.6	16.6	2.6	4.4	-0.3	-4.1	-4.4	-2.0
	유로지역(HIPC)	13.0	36.9	18.9	13.7	-0.9	2.2	-1.8	-5.6	-6.1	-3.3
식량 및 에너지 제외	OECD 전체	3.0	6.8	7.2	7.3	7.2	7.1	6.9	6.6	6.7	6.8
	G7	2.6	4.9	5.0	5.1	5.1	5.2	5.0	4.7	4.5	4.3
	유럽연합(HICP)	1.8	4.7	6.3	6.6	6.6	6.5	6.1	6.2	6.2	5.9
	유로지역(HIPC)	1.5	4.0	5.3	5.6	5.7	5.6	5.4	5.5	5.5	5.3

출처: OECD, "Consumer Prices Index, Paris, 3 October 2023," Table 2 재구성

20) OECD, "Consumer Prices, OECD - Updated: 3 October 2023," <https://www.oecd.org/newsroom/consumer-prices-oecd-updated-3-october-2023.html>, 검색일자: 2023. 10. 4.

- 너스를 유지했으나, 25개국에서 상승하여 7월 -7.5%에서 8월 -1.4%로 둔화됨
- 식품가격 상승률은 계속해서 둔화되었지만 이전 달보다 느린 속도로 7월 9.2%에 이어 8월에는 8.8%에 도달
-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8월 6.8%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 G7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 7월 3.9%에서 8월 4.2%로 상승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 캐나다, 프랑스, 미국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0.5%p 이상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이탈리아는 8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어 202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
  - 식품가격 상승률은 모든 G7 국가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핵심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로 측정한 유로존

의 소비자물가는 7월 5.3%, 8월 5.2%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임

- G20 국가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7월 5.8%에서 2023년 8월 6.3%로 증가함



미국

### [예산·결산 등]

- CBO(의회예산처), 2023회계연도(2022. 10. 1. ~2023. 9. 30.)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2023. 10. 10.)<sup>21)</sup>
  - (세입)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9.3% 감소한 4조 4,410억달러 예비 추정
    - 세입 감소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sup>22)</sup>는 전년 대비 17.3% (4,560억달러) 감소한 약 2조 1,770억달러로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표 5> 미국 FY2022 & FY2023 재정 결산 비교

(단위: 10억달러, %)

구분	FY2022 실적 (A)	FY2023 예비결산 (B)	증감 (B-A)	증감율 (B-A)/A
재정수입	4,896	4,441	-455	-9.3
재정지출	6,272 (6,210) <sup>1)</sup>	6,131 (6,122) <sup>2)</sup>	-141 (-87)	-2.2 (-1.4)
재정수지	-1,375 (-1,312)	-1,690 (-1,681)	-314 (-368)	22.8 (28.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기간(예: 주말 전 지급 등) 일정으로 인한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 조정을 반영한 결과값

1) 6,210bn = 6,272bn - 63bn(2023회계연도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 2022회계연도에 지급된 규모)

2) 6,122bn = 6,131bn + 63bn(2023회계연도 지급분이 2022회계연도에 지급된 규모) - 72bn(2024회계연도 지급분이 2023회계연도에 지급된 규모)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3," 2023. 10. 10., p. 1 Table 1을 재구성하여 작성

21)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3," 2023. 10. 10., <https://www.cbo.gov/publication/59544>, 검색일자: 2023. 10. 18.

22) 개인소득세의 경우 환급(tax refunds) 규모가 전년 대비 52%(1조 2,900억달러)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입 감소에 기인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났으며, 이에 대해 CBO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가 수집되면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

- (세출) 2023회계연도 세출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6조 1,310억달러 예비 추정

\* timing shifts<sup>23)</sup> 조정할 경우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6조 1,220억 달러

- (주요 감소 분야) 아동 세액공제(CTC) 확대 조항 만료로 인한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sup>24)</sup>의 감소(41.4%)와 함께

주·지방·지역 정부 등에 지원한 코로나19 재정지원금<sup>25)</sup>(99.1%), 공중보건·긴급사회복지자금(PHSSEF)<sup>26)</sup>(69.6%) 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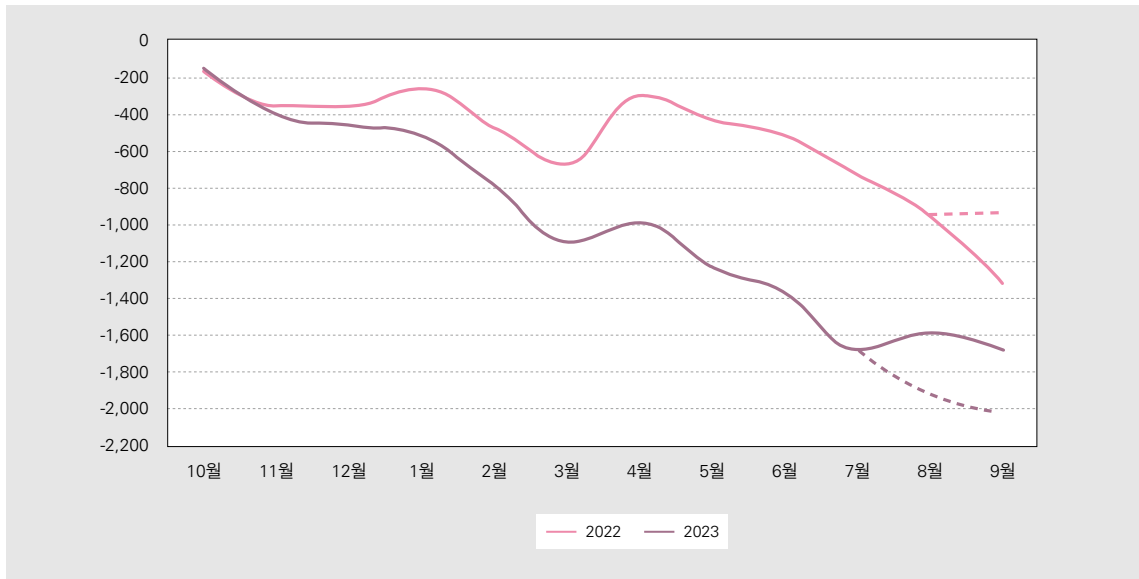
- (주요 증가 분야) 주요 의무지출(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자지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산도 증가

- (재정수지)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조 6,900억달러 예비 추정

\* timing shifts 조정할 경우 전년 대비 28.0% 증가한 1조 6,810억 달러

[그림 4] 미국 연방정부 월별 누적 재정적자 추이

(단위: 10억달러)



주: 1. 기간(주말 등) 일정으로 인한 수입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 조정

2. 점선: (2022) 학자금 대출 탕감(loan cancellation) 정책 영향으로 인한 비용 배제할 경우, (2023) 대법원 판결에 의한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지출 감축 영향을 배제할 경우(2023 점선 관련 내용은 p. 3 본문 내용 참조하여 작성)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3, 2023. 10. 10., Figure 1, p. 2

23) 지급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수입 지출의 이동이 직전 회계연도로 잡히는 경우

24) Refundable Tax Credits는 recovery rebates(재난지원금)를 포함하여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Premium Tax Credits (의료보험 관련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교육세액 공제) 등을 포함

25) 주·지방 정부 재정지원금은 1,060억달러(FY2022) → 10억달러(FY2023)로 감소

26) PHSSEF =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Emergency Fund

-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수정예산안(MSR; 2023년 7월 발표) 전망 수치(1조 5,430억 달러) 대비 9.5% 확대
- 2022년에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영향으로 2022회계연도에 3,790억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했으나,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sup>27)</sup>로 동 정책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 3,330억달러의 지출 감축<sup>28)</sup>(outlay savings) 발생

## [기타]

###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10. 18.)<sup>29), 30)</sup>

- (경제활동) 9월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경제전망)
  - 경제는 가까운 기간에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약간 약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판매에 중요한 요소인 휴가철 쇼핑 시즌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는 엇갈리게 나타남
- (노동시장) 전국적으로 노동시장 타이트함은(tightness) 지속적으로 완화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반적인 고용이 약간에 서 완만한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기업들의

- 긴급구인 현상은 약해졌다고 보고됨
- 몇몇 지역에서는 구인자 후보군이 확대되면서 근로조건 협상 경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 및 노동 유지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됨
- 다수의 기업응답자들은 높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상을(compensation) 줄이고 있으며, 성과기반 보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응답
  - 예를 들어 높은 임금대신 원격근무를 허용하거나 신입사원 상여금(sign-on bonuses) 축소
  - 건강보험 등 기타 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피고용자에게 전가

- (물가상승률) 전반적으로 물가의 완만한(modest) 상승이 지속됨
  - 제조업자들의 경우 투입비용 증가는 약해지거나 안정화되었으나, 서비스 부문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됨
  - 판매가격은 투입비용보다 더 느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물가 민감도가 상승하며 기업들이 비용압력을 전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6년래 최고치 기록(2023.

27)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7월호 재정동향』, 2023. 8. 참고

28)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2023년 지출 감축분(3,330억달러)이 2022회계연도에 적자로 기록된 3,790억달러와 같지 않고 적은 이유는 2023년 6월에 최종 변경된 학자금 상환 정책(new Income-Driven Repayment plan)에 기인

29)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3. 8. 28.~10. 5. 동안의 데이터 반영. 각 지역 연준들은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및 기업, 지역사회,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지를 받아 정보를 수집

30)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10.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1018.pdf](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1018.pdf). 2023. 10. 26.

[그림 5]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2000~2023년 10월)

(단위: %)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난 기간으로,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게 나타난 기간을 표시함  
출처: 미국 재무부,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2000~2023년 10월)"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 19.)<sup>31)</sup>

-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19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98%를 기록하며, 2007년 6월 이후 16년래 최고치로 나타남
-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CRFB)<sup>32)</sup> 성장률 기대치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서( $R > G$ ),

장기 채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sup>33), 34)</sup>

- 향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의 채무규모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

31) 미국 재무부,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 [https://home.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interest-rates/TextView?type=daily\\_treasury\\_yield\\_curve&field\\_tdr\\_date\\_value=2023](https://home.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interest-rates/TextView?type=daily_treasury_yield_curve&field_tdr_date_value=2023), 검색일자: 2023. 10. 25.

32)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초당적인 비영리단체로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중에게 전달하며, 상원 및 하원 예산위원회, 의회예산처(CBO), 관리예산처(OMB), 감사원(GAO) 등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적인 조직임

33)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Interest Rates Remain Near Record Highs," 2023. 10. 6., <https://www.crfb.org/blogs/interest-rates-remain-near-record-highs>, 검색일자: 2023. 10. 25.

34) 반면 MIT 명예교수 Olivier Blanchard는 현재의 높은 이자율은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상승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연준이 물가상승률을 조절한 후에는 국채금리가 다시 낮아질 것이며  $r < g$ 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힘. 그는 현재도(2023년 1월 기준)  $r-g$ 에서 중요한 실질 이자율은 낮은 편이며, 앞으로도  $r-g$ 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것으로 전망.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대응으로  $r$ 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그 크기는 작을 것으로 추정(출처: Olivier Blanchard, "Secular Stagnation is Not Over," 2023. 1. 24.,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secular-stagnation-not-over>, 검색일자: 2023. 10. 26.

은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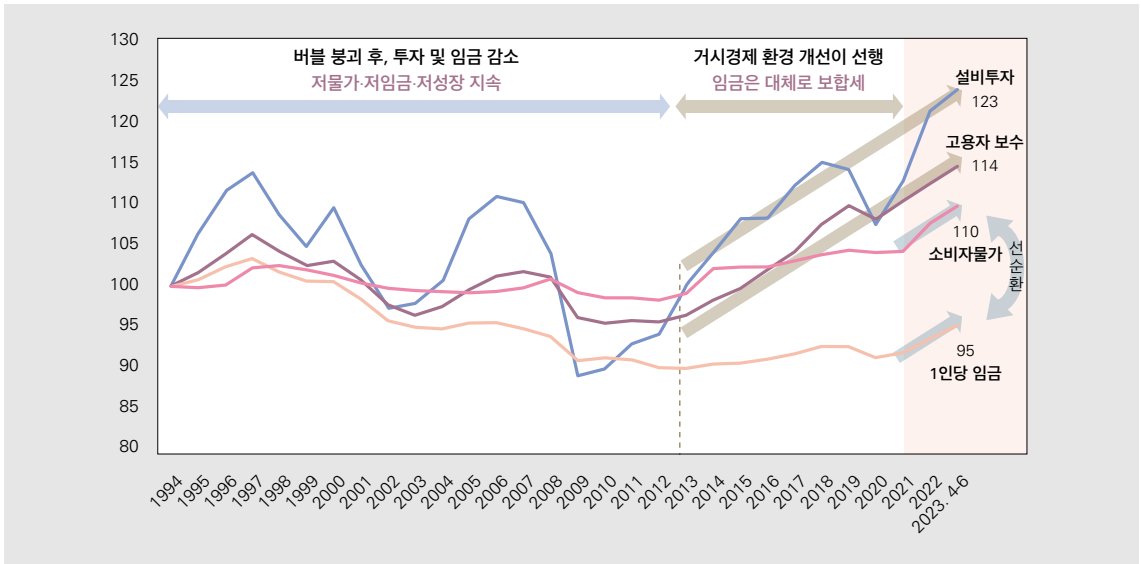
- 2023년 10월 25일 기준, 2년물 국채금리는 5.08%이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95%로 2년물 국채금리가 13bp 더 높음
- 연준은 2022년 FEDS Notes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단기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며, 장단기 금리차의 예측력은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에 기인한다고 분석<sup>35)</sup>

 일본

- 일본 내각부, 종합경제대책 책정에 대한 논의 진행(2023. 10. 10.)<sup>36)</sup>
  - 일본은 오래 지속된 저물가·저임금·저성장에서 벗어나 활발한 설비투자, 임금 인상, 인적 투자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종합경제대책을 책정할 계획
  - 현재 일본은 설비투자, 물가, 1인당 임금 상승으로 인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오래 지속된 저물가·

[그림 6] 일본의 설비투자, 물가, 1인당 임금 추이

(1994년도 명목치 = 100)



주: 설비투자(민간기업설비)와 고용자 보수는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소비자물가는 총무성 「소비자물가지수」의 종합지수, 1인당 임금은 후생노동성 「월별근로통계」의 현금급여 총액

출처: 일본 내각부, 「総合経済対策の策定に向けて」, 2023. 10. 10., p. 2 일부 수정

35) 미국 연방준비제도, “(Don’t Fear) The Yield Curve, Reprise,” 2022. 3. 25.,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notes/feds-notes/dont-fear-the-yield-curve-reprise-20220325.html>, 검색일자: 2023. 10. 25.

36) 일본 내각부, 「総合経済対策の策定に向けて」, 2023. 10. 10.,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3/1010/shiryu\\_01.pdf](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3/1010/shiryu_01.pdf), 검색일자: 2023. 9. 19.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저임금·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음
- 종합경제대책 시행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 신기술 및 생산성이 견인하는 높은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적절한 물가 상승과 이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 등을 실현할 계획
- 종합경제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물가 대책,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국민 안전·안심 확보
  - (고물가 대책)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억제가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 생활을 위한 대책을 추진
  -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임금 인상 세제 지원 관련 감세 제도 강화, 재교육(Reskilling) 지원 등 구조적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중소기업 임금 인상·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추진 검토
  - (국내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신기술 혁신 사회 구현, 프론티어 개척 등을 통한 생산력 향상, 성장력 강화·고도화에 이바지하

는 국내 투자 촉진 등 검토

-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및 행정·공공 서비스 제공의 가속화·효율화 추진, 국민·기업의 창의력 향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
- (국민 안전·안심 확보) 잇따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 건설 추진, 외교·안전 보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의 등 국민 안전·안심 확보를 위해 노력
- 종합경제대책은 11월 초 각의 결정을 목표로 여·야당 의견 수렴을 진행 중



## 독일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3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3. 10. 11.)<sup>37)</sup>
  - (개요) 독일의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0월 11일, ‘2023년 가을 경제전망’을 발표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세수 추계, 예산 편성 관련 거시경제 지표 기준, EU 제출 보고서 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전망을 발표

37) 독일 연방 정부, “Bruttoinlandsprodukt geht um 0,4 Prozent zurück – für 2024 Wachstum erwartet,” 2023. 10. 1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herbstprojektion-2023-2229570>, 검색일자: 2023. 10. 17.;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abeck stellt Herbstprojektion der Bundesregierung vor,” 2023. 10. 11.,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10/20231011-habeck-stellt-herbstprojektion-vor.html>, 검색일자: 2023. 10. 17.;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3,” 2023. 10. 11.,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31011-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3.pdf?\\_\\_blob=publicationFile&v=3](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31011-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3.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3. 10. 17.

- (경제전망) 독일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인플레이션 감소, 임금 인상, 안정적 수요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성장이 기대됨

- (GDP)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0.4%로 전망되며 이후 경제가 점차 회복되어 2024년에 1.3%, 2025년에 1.5%의 성장이 예상됨

-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제의 약세, 지정학적 갈등 등을 현재의 경제 회복 지연 요인으로 언급
-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한 민간 소비 증가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
- 기계·설비 투자는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높은 투자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금리 인상폭 확대로 건설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6.1% 상승 후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6%, 2.0%로 상승률이 하락할 전망

- (노동시장)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건(robust)하다고 평가

-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 ■ 독일 연방 재무부, '2024년 독일 재정계획안

<표 6> 독일의 2023년 가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GDP 성장률	1.8	-0.4	1.3	1.5
가계최종소비	3.9	-0.5	1.8	1.7
정부최종소비	1.6	-2.2	1.3	1.1
총고정자본형성	0.1	0.4	0.4	2.0
설비	4.0	3.8	2.9	3.3
건설	-1.8	-1.3	-1.7	1.1
기타	-0.7	0.0	2.6	2.5
내수	3.2	-0.6	1.5	1.6
수출 증가율	3.3	-1.1	1.8	3.3
수입 증가율	6.6	-1.5	2.4	3.6
실업률 (연방 고용청 기준)	5.3	5.7	5.7	5.5
고용	1.4	0.7	0.3	0.2
소비자물가상승률	6.9	6.1	2.6	2.0

출처: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3," 2023. 10. 11.,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31011-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3.pdf?\\_blob=publicationFile&v=3](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31011-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3.pdf?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3. 10. 16.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4)' 발표 (2023. 10. 15.)<sup>38)</sup>

- (개요) 독일 연방 재무부는 10월 15일에 '독일 재정계획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EU 규정에 따라 유효화 도입 국가들은 매년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
  - '독일 재정계획안'은 연방정부의 2024년 예산안과 2027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주요 변화와 계획을 반영

38)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4*, 2023.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4.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4.html), 검색일자: 2023. 10. 18.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예산의 재정전망을 포함
- (재정전망) 전망 기간 동안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점차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과 동일한 2.5%로 예상되며 이후 재정적자가 점차 감소하여 2027년에 1.25%를 기록할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해 2023년 재정적자 전망은 지난 4월 전망치(4.25%) 대비 크게 개선
  - 또한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3년에 약 2%로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되지만 2024년에 1.75%로 개선되어 이후에도 꾸준히 적자 폭이 감소할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독일의 재정 정상화가 반영되어 2022년에 66.1%에서 2023년에 65.25%, 2024년에 64.75%로 감소 후 거의 평탄하게 유지될 전망
- (안정성장협약 준수) 보고서는 독일이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
  -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2024년에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의 0.25%p 감소해 감축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이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의 0.3%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지출 증가율 기준) 2024년의 순기초지출 증가율은 2.25%로 예상되어 목표 요건<sup>39)</sup>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별 권고에 의하면 전년 대비 2024년 순기초지출 명목 증가율이 2.5%를 상회할 수 없음
- (투자) 2022년에 전년 대비 8.5% 증가했던 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은 향후에도 증가하여 2022~2027년에 연평균(기하평균) 약 6% 증가할 전망
  -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 투자 보조금은 향후 연간 5% 이상의 증가가 예상됨

<표 7> 2024년 독일 재정계획안의 주요 지표

(단위: GDP 대비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2.5	-2.5	-2.0	-1.5	-1.25	-1.2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1.8	-2.0	-1.75	-1.5	-1.25	-1.25
일반정부 국가채무	66.1	65.25	64.75	64.75	64.75	64.25
순기초지출 증가율	NA	5.75	2.25	2.25	2.75	2.75

주: 0.25%p를 기준으로 반올림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4*, 2023. 10. 16., Table 1; Table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4.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4.html), 검색일자: 2023. 10. 18.

39)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 목표치를 기반으로 계산된 순기초지출 증가율 상한 목표로 순기초지출은 이자지출, 재정적 수입 조치 등을 조정한 지출임

■ 독일 연방 정부, 저렴하고 기후 친화적인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조치 발표(2023. 9. 25.)<sup>40)</sup>

-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증가, 고금리,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건설 경기 및 투자가 둔화된 상황에서 건설, 주택 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
- (주요 내용) 저렴하고 기후 친화적인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건축 절차를 더욱 빠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14개 지원 조치를 발표
  - (가속상각 도입) 성장기회법<sup>41)</sup>의 일환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6%의 가속 상각을 도입해 건설 산업 안정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장려
  - (사회주택 자금 조달) 연방정부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주 정부에 총 181억 5,000만유로 규모의 자금 제공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자금 조달 하여 2027년까지 약 450억유로의 자금 확

보 예정

-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 시설 전환) 유휴 상업용 부동산을 기후 친화적 신규 주거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2년간 4억 8,000만유로를 지원
- (주택 마련 지원 강화) 기후변화기금 내 ‘가족을 위한 주택 마련 지원’ 프로그램<sup>42)</sup>의 대출 한도를 3만유로 증액, 적격 가구소득 기준 상향 조정(6만 → 9만유로) 등
- (새로운 주택 보유 지원 프로그램) 개조가 필요한 구축 건물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BEG<sup>43)</sup> 규정과 연계해 2024~2025년에 신규 주택 보유 지원 프로그램(Jung kauft Alt)을 도입
- (EH40 표준<sup>44)</sup> 적용 보류) 건설 및 주택 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당초 신규 건축 주택에 적용 예정이던 EH40 표준 적용 계획을 무기한 보류
- (기타) 이 외에도 기후 친화적 난방 시스템 설치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건축 계획 및 승인 기간 단축 등의 조치 포함

40) 독일 연방 정부, “Für mehr bezahlbaren und klimagerechten Wohnungsbau,” 2023. 9. 2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newsletter-und-abos/newsletter-verbraucherschutz/buendnis-bezahlbarer-wohnraum-2221410>, 검색일자: 2023. 10. 18.;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 “Bundesregierung legt Maßnahmenpaket für die Bau- und Immobilienbranche vor,” 보도자료, 2023. 9. 25., [https://www.bmwsb.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Webs/BMWSB/DE/2023/09/buendnis.html?sessionId=1219698F958D719616895DCA273C713A.2\\_cid505](https://www.bmwsb.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Webs/BMWSB/DE/2023/09/buendnis.html?sessionId=1219698F958D719616895DCA273C713A.2_cid505), 검색일자: 2023. 10. 18.;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für zusätzliche Investitionen in den Bau von bezahlbarem und klimagerechtem Wohnraum und zur wirtschaftlichen Stabilisierung der Bau- und Immobilienwirtschaft,” <https://www.bmwsb.bund.de/SharedDocs/topthemen/Webs/BMWSB/DE/Massnahmenpaket-bauen/massnahmenpaket-artikel.html>, 검색일자: 2023. 10. 18.

41) 독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방 내각은 지난 8월에 성장기회법안을 승인하였음

42) Wohneigentum für Familien(WEF): 중-저소득 가구의 기후 친화적 자가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43) BEG(Bundesförderung für effiziente Gebäude): 효율적 건물을 위한 연방 지원

44) EH(Effizienzhaus)40은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슷한 신축 건물에 비해 에너지를 40%만 사용하도록 하여, 2023년 1월부터 적용해 온 EH55보다 기준을 강화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녹색예산(budget vert) 발표(2023. 10. 13.)<sup>45), 46), 47)</sup>

- 2024년 예산법안에 포함된 총지출 5,697억유로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559억유로에 대해 분석
  - 2024년 예산법안에서 6가지 환경 목표 중 1가지 이상의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397억유로
    - 재생에너지, 에너지 분야 연구, 친환경 모델리티, 건물 에너지 혁신, 생물다양성 관련 지원 등이 포함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31억유로
    - 새로운 철도 노선 및 운하 건설이 포함되는데, 이는 건설 과정에서 자연이 인공화되고 폐기물이 발생하나 중기적으로 오염이 적은 운송 방식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

-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131억유로
  - 연료비 인하 지원, 도로 건설, 항공 운송 지원 등이 포함

[기타]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생태전환 로드맵 발표 (2023. 9. 26.)<sup>48), 49)</sup>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생태계획위원회 (Conseil de planification écologique)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태전환 로드맵(Planification écologique)을 발표
  -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함
    - 13개 대도시에 7억유로를 투자해 급행철도망 구축
    - 2024년부터 월 100유로의 전기자동차 임대제도 실시 계획
  - 주택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스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대체
    - 2027년까지 히트펌프 100만대 생산 목표

45) 프랑스 재무부, “Budget vert 2024 : 7 milliards d’euros de dépenses supplémentaires en faveur de la planification écologique,” 2023. 10. 13. <https://www.economie.gouv.fr/budget-vert-2024>, 검색일자: 2023. 10. 19.

46) 프랑스 정부, “Le budget vert 2024 en hausse de 7 milliards d’euros,” 2023. 10. 13.,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budget-vert-2024-en-hausse-de-7-milliards-deuros>, 검색일자: 2023. 10. 19.

47) 프랑스 환경부, “Le budget vert 2024 - Une hausse inédite de 7 Md€ des dépenses en faveur de la planification écologique,” 2023. 10. 12. <https://www.ecologie.gouv.fr/budget-vert-2024-hausse-inedite-7-mdeu-des-depenses-en-faveur-planification-ecologique>, 검색일자: 2023. 10. 19.

48) 프랑스 정부, “Planification écologique : ce qu’il faut retenir,” 2023. 9. 26.,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planification-ecologique-ce-quil-faut-retenir>, 검색일자: 2023. 10. 19.

49) 프랑스 대통령궁, “Conclusion du Conseil de planification écologique,” 2023. 9. 25.,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3/09/25/conseil-de-planification-ecologique>, 검색일자: 2023. 10. 19.

-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
- 보호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
- 2025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환경적으로 더 유리한 소비 실현을 위해 노력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 2024) 발표(2023. 10. 13.)<sup>50)</sup>

- (경제전망) 프랑스는 2023년 1.0%, 2024년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3년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성장세 유지
- 2024년 가계 소비와 무역 증가로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4.9%, 2024년 4.4%로 전망

<표 8> 프랑스 2024년 재정계획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수지 (Déficit public)	-4.8	-4.9	-4.4
구조적 재정수지 (Solde structurel)	-4.2	-4.1	-3.7
공공채무 ( Dette publique)	111.8	109.7	109.7

출처: EU 집행위,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4," 2023. 10. 13.

- 2022~2023년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조치로 높은 재정적자가 유지
- 2024년 물가 관련 임시 지원 조치의 종료로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될 전망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2년 111.8%에서 2024년 109.7%로 낮아질 전망
- (정책 우선순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재산업화를 위해 노력
- 공공서비스 개선
-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
- 재정지출 증가율을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영국

■ 영국 총리실,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만들기 추진(2023. 10. 4.)<sup>51)</sup>

- (현황)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약 4분의 1은 흡연이 원인으로, 잉글랜드에서만 연간 6만 4,0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경

50) EU 집행위,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4," 2023. 10. 1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10/2024\\_dbp\\_fr.pdf](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10/2024_dbp_fr.pdf), 검색일자: 2023. 10. 16.

51) Prime Minister's Office, "Prime Minister to create 'smokefree generation' by ending cigarette sales to those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9," News story, 2023. 10. 4.,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to-create-smokefree-generation-by-ending-cigarette-sales-to-those-born-on-or-after-1-january-2009#full-publication-update-history>, 검색일자: 2023. 10. 5.;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Stopping the start: our new plan to create a smokefree generation," Policy paper, 2023. 10. 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opping-the-start-our-new-plan-to-create-a-smokefree-generation>, 검색일자: 2023. 10. 10.

제·사회적으로 매년 170억파운드의 손실<sup>52)</sup>이 발생

- (주요 내용) 담배 판매 금지 법안 도입, 기존 흡연자 금연 지원, 전자담배 관련 제재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성인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
  - 올해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여 영국 최초의 비흡연 세대를 추진<sup>53)</sup>
    - 제안된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전체 인구에 적용될 때까지 흡연 연령은 매년 1년씩 상향 조정
  -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 서비스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매년 추가로 7,000만파운드를 투자하며, 매년 약 36만명의 금연 지원을 목표로 설정
  -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vape)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자담배의 가용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 마련
- (효과) 2075년까지 흡연자가 최대 170만명 감소하고 수만명의 생명을 구하며,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850억파운드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

■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전망 평가 보

고서』(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발표(2023. 10. 19.)<sup>54)</sup>

- 경제전망 평가
  - (물가상승률)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에서 2022~2023회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실적치 대비 각각 8.2%p, 2.0%p 과소 예측하였는데, 이는 예산책임청이 전망을 수행한 이래 가장 큰 오차([그림 7])
    - 큰 폭의 오차는 예상치 못한 선진국의 강한 수요 회복, 공급 및 물류의 병목 현상 지속, 팬데믹 이후 예상보다 더욱 경직적이었던 노동시장,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속도, 규모)의 과소 설정에 기인
  - (실질 GDP)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에서 실적치 대비 각각 3.3%p, 0.6%p 과대 예측([그림 8])
    - 오차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세계 공급 병목 현상이 영국 생산성에 부담을 높인 데 기인
  - (노동시장) 총근무시간 기준으로 측정한 2022~2023회계연도의 노동공급 증가율은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 대비 각각 2.2%p, 0.6%p 낮게 나타남
    - 이는 고용유지 정책<sup>55)</sup> 종료 이후 평균 근무시간이 예상만큼 빠르게 팬데믹 이전

52) 수입 손실, 실업, 조기 사망 등으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 국가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 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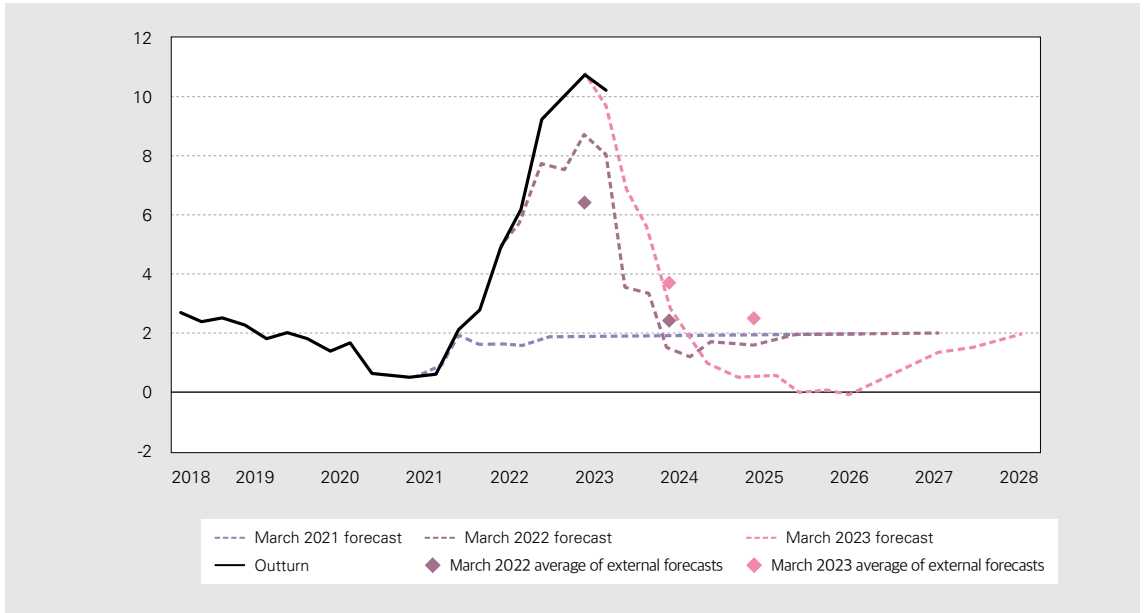
53) 현재 영국의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18세

54)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Publications, 2024. 10. 19., <https://obr.uk/fer/forecast-evaluation-report-october-2023/>, 검색일자: 2023. 10. 20.

55) furlough scheme: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월 임금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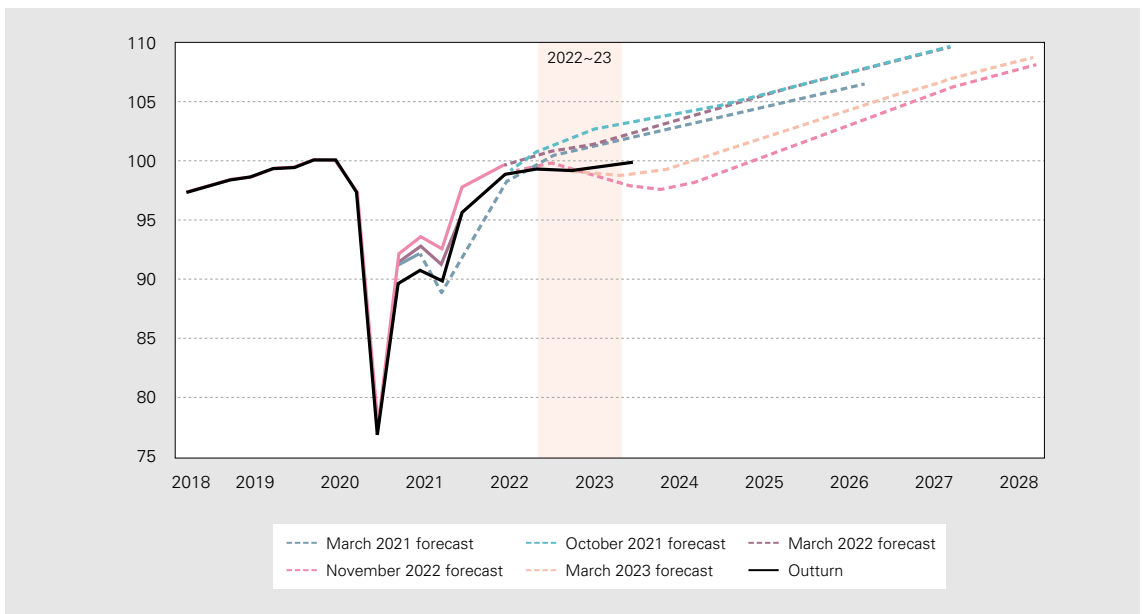
[그림 7] 영국의 물가상승률 전망과 실적치

(단위: %)

출처: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2023, p. 4 Chart 1.1

[그림 8] 영국의 실질 GDP 전망과 실적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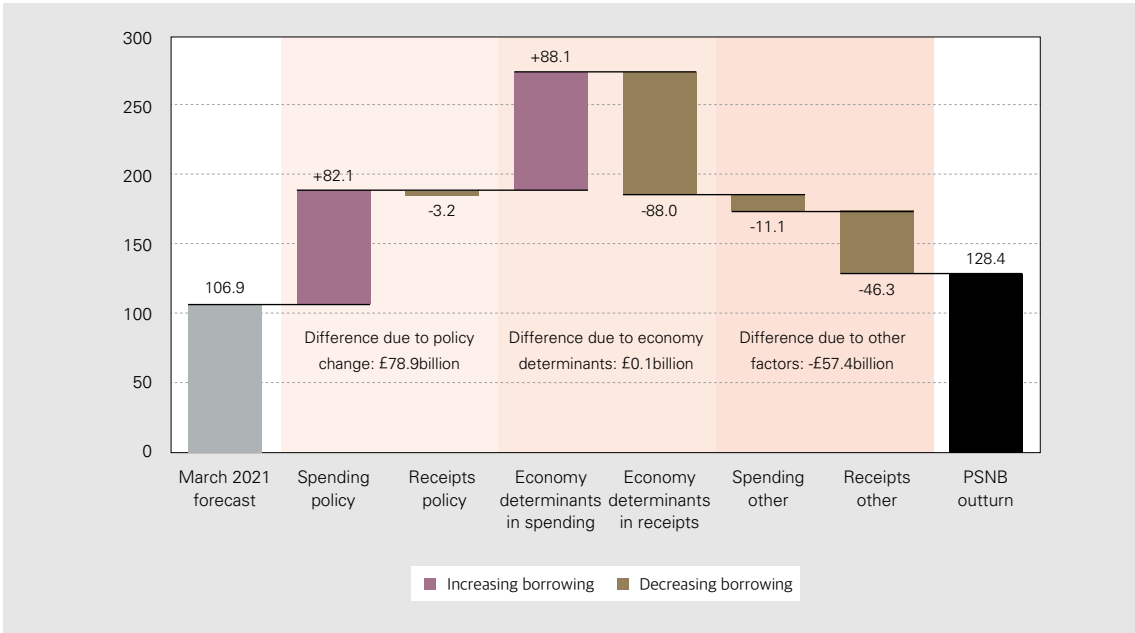


주: Q4 2019 = 100

출처: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2023, p. 5 Chart 1.2

[그림 9] 2021년 3월 순차입 전망과 실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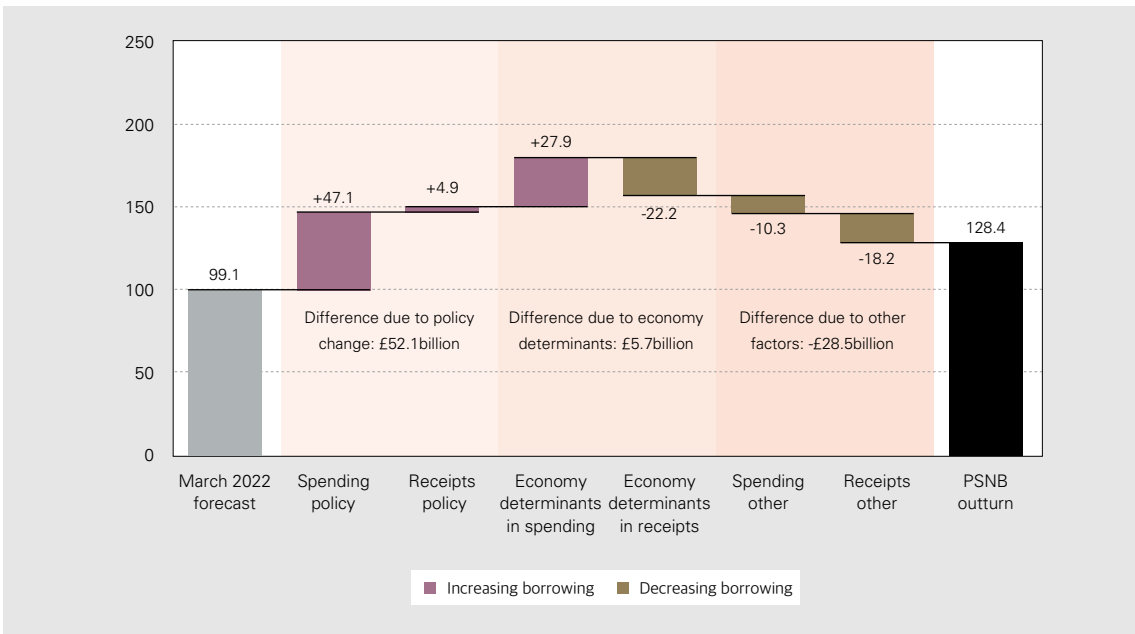
(단위: 10억파운드)



출처: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2023, p. 7 Chart 1.3

[그림 10] 2022년 3월 순차입 전망과 실적치

(단위: 10억파운드)



출처: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2023, p. 8 Chart 1.4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

● 재정전망 평가

- (순차입) 전망 대비 높은 수입 실적을 보였으나 이는 높은 지출로 상쇄되어, 2021~2022 회계연도 순차입은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 대비 각각 215억파운드(GDP 대비 0.8%), 293억파운드(GDP 대비 1.2%) 높게 나타남([그림 9], [그림 10])

- 2021년 3월 전망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서는 수입과 지출 오차가 거의 상쇄되었으나, 에너지 가격 보증제<sup>56)</sup> 등 정책변화로 인해 차입이 789억파운드 증가하였고, 법인세 유효 세율 차이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574억파운드 감소
- 2022년 3월 전망의 경우 경제적 요인과 정책변화로 인해 차입이 각각 57억파운드, 521억파운드 증가하였으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285억파운드 감소

- (순채무) 2022~2023회계연도 순채무는 GDP 대비 98.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1년 3월 전망 대비 10.4%p 낮고, 2022년 3월 전망 대비 2.5%p 높은 수치

- 이는 명목 GDP 전망, 2021~2022회계연도 말 채무 초기값 설정, 2022~2023회계연도까지의 채무 누적 전망 등에서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

56) Energy Price Guarantee: 가정용 에너지 연간 요금에 상한(2022년 10월~2023년 3월: 2,500파운드, 2023년 4월~2024년 4월: 3,000파운드)을 설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단위당 요금과 기본요금을 조정하여 에너지 연간 요금이 상한을 넘지 않게 하는 제도





